

KDI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12. 07

KDI

KDI 북한경제리뷰 편집진

편집위원

이 석 | 연구위원(편집위원장)
고일동 | 선임연구위원
전홍택 | 선임연구위원
김두얼 | 연구위원
김상기 | 전문위원

편집

김은영 | 전문연구위원(편집주간)
이원경 | 연구원
전수민 | 연구원
전소영 | 연구원
박조아 | 연구원
전은경 | 연구행정원
임혜정 | 인턴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는

북한경제의 실태 및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정리하여
정책당국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월별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968-4355
팩스번호 968-4090

본 자료는

KDI 홈페이지(<http://www.kdi.re.kr>)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동향과 분석

3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 분석〉

총론: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를 보는 하나의 시각 | 이석
실물 및 산업부문 동향 | 이석기
북한의 식량사정 및 농업 동향 | 김영훈
시장동향 및 평가 | 양문수
2012년 상반기 대외무역동향 | 김상기
남북 교역 및 교류 협력 동향 | 이재호

연구 논문

79

북한의 주택시장에 관한 연구: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은이

북한경제연구협의회

106

북한 권력엘리트 연구와 북한 권력엘리트의 특징 | 이교덕

경제 자료

113

UN 결의안 1874호에 따른 2012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 | 김은영, 임혜정

부문별 주요 기사 (6월 11일~7월 10일)

131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

동향과 분석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 분석

총론: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를 보는
하나의 시각 | 이석

실물 및 산업부문 동향 | 이석기

북한의 식량사정 및 농업 동향 | 김영훈

시장동향 및 평가 | 양문수

2012년 상반기 대외무역동향 | 김상기

남북 교역 및 교류 협력 동향 | 이재호

총론: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를 보는 하나의 시각

이 석 | 한국개발연구원 | suklee@kdi.re.kr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모습을 개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래 이 글에서는 올해 북한의 각 경제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북한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본래의 목적은 대부분 희석되었다. 그리고 이 글은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에 대한 실험적인 가설 하나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물론 이 글을 쓰는 사람에게조차 이러한 변화는 의외였지만,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제까지 북한의 경제동향을 파악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작업이었다.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몇몇 객관적 수치와 그에 대한 부분적 증거들을 합쳐 북한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 북한경제는 농업부문의 생산감소와 제조업의 부진으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제침체가 지속되었고, 여기에는 한국의 5.24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한몫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면 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북한을 바라보는 외부 관찰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러한 작업만으로 북한의 경제동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현재의 북한경제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수치와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들 수치와 정보를 토대로 일반적인 경제추세만을 이야기할 경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북한경제의 여러 요인들은 분석에서 모두 사상되고 말 것이라는 걱정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은 최근 더욱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만일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와 관련 정보들을 토대로 2010년 북한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상태를 보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당시 북한을 실제 방문한 사람이 평양의 경제는 별로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그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의 육안에 의한 관찰이 부정확할 수도 있으며, 설사 정확하더라도,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한가지 특징이 경제 양극화라는 점에서 평양의 경기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북한경제가 전반적인 침체상태에 있다는 결론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상황이 2011년과 2012년에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 경우에도 앞의 말을 동일하게 반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 다시 말해, 지난 몇 년간 북한경제가 전반적인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평양의 경기는 계속 나빠지지 않고 있다면,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올해도 북한경제가 침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난 몇 년간 북한에서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역 사이에 경제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까지 진행된 북한의 경제동향관련 논의들은 이러한 설명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가 정말 현재의 북한경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걱정이 출현했고, 이러한 걱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걱정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걱정을 회피하기 보다는 이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모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실험적 가설을 만드는 일이 북한의 경제상황이 침체인가 회복인가 호황인가를 논의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를 개관한다는 이 글의 목적은 이와 관련된 하나의 가설을 제출하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물론 북한에 관한 한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특히 이 글에서 제출될 가설은 이 글을 쓰는 사람의 극히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 완성되거나 심지어는 충분한 정련을 마치지도 않은 매우 생경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이 글과 함께 제시되는 2012년 상반기 북한의 각 경제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들과, 비록 일정한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일치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처럼 무모한 작업을 시도하는 것은 이를 통해 추후 북한의 경제동향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논의들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외부 관찰자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시각의 차이 또는 문제의식의 진화를 2011년 북한의 경제상황을 대상으로 논의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진화를 올해 북한경제의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정리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실험적인 가설을 구성하여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인 논의를 마무리한다.

II. 북한경제동향 분석의 문제와 시각의 진화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현상 중의 하나는 이를 바라보는 외부 관찰자들의 시선 사이에 약간의 온도 차이가 감지된다는 사실이다. 대다수의 관찰자들은 북한경제가 현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온도 차이는 아직 명시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경제에 관한 한 언제나 논란과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온도차이 역시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이처럼 간단히 처리해버릴 수 있는 외부시선들 사이의 차이를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를 토론하는 것에 앞서 본격적으로 토론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온도 차이를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 그 자체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 그 자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시선의 차이를 논의할 생각은 없다. 이 경우 2012년 북한경제를 ‘이렇게도 또한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일관된 시각을 제공하려는 이 글의 의도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북한경제와 관련된 시선의 차이를 주로 2011년까지의 북한경제 추세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3장과 4장에서 올해 상반기의 북한경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토론하려고 한다.

1. 북한경제동향 분석의 일반적 방식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북한의 성장률 추정치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경제는 뚜렷한 침체에 놓여 있다. 실제로 2005년 이후 북한경제는 2006년과 2007년 두 해에 걸쳐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을 제외한 2009년과 2010년에도 역시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물론 2011년 북한경제는 비록 1%에도 채 못 미치는 성장률이지만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피폐화된 경제체제에서 지난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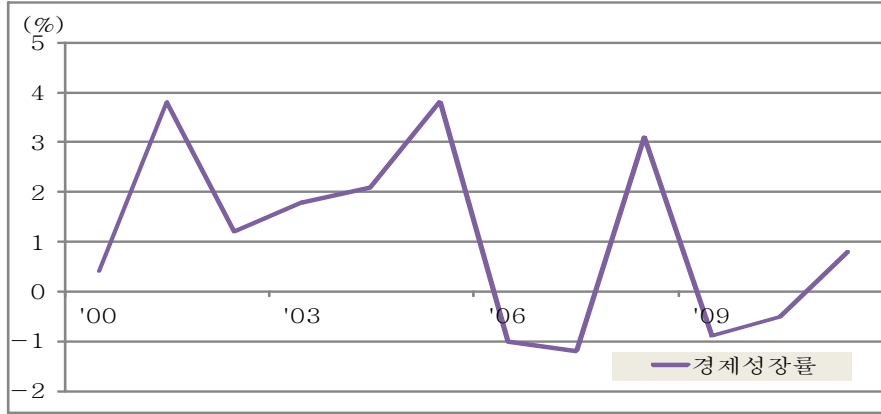
4-5년여 동안 마이너스의 성장을 경험한 것을 상기하면 2011년의 북한경제 역시 매우 침체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2010년 이후의 경우에는 이러한 북한경제의 침체원인 역시 상대적으로 매우 분명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1년 북한의 부문별 GDP 성장률을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2011년 북한의 광업 생산 증가율은 채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생산이 정체하였다. 따라서 석탄과 철광석 같이 북한 광업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전략물자의 생산 역시 크게 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2011년 북한은 이러한 전략물자의 대중국 수출을 무모할 정도로 크게 확대하였다. 석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연간 기준으로 무려 600만 MT 이상을 중국에 추가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북한의 연간 석탄 생산능력이 약 2,500만 MT 내외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2011년 북한이 자체 생산능력의 약 1/4에 해당하는 석탄물량을 예년에 비해 추가로 중국에 더욱 많이 수출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해에 북한의 석탄 생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면, 이는 오히려 북한 내부의 석탄 공급이 크게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러한 석탄과 같은 전략물자의 공급부족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한국은행의 부문별 GDP 성장률 추정치는 2011년 북한의 에너지 부문이 마이너스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말한다. 북한의 에너지 생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석탄을 원재료로 하는 화력발전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러한 에너지 부문의 생산 감소는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부문의 생산 감소가 가져오는 결과 역시 자명하다. 제조업 등 공업부문의 정체이다. 한편으로는 철광석과 같은 기초 생산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활용할 에너지 역시 부족하다면 제조업 등 공업부문의 생산이 정체 또는 감소를 기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1년 북한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 부문의 생산 증가율은 -3%로 매우 저조하다.

물론 2011년 북한당국은 올해의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하여 평양의 10만호 살림집 건설 등 대규모의 토목사업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이 해 북한의 건설업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토목사업 역시 경제전반을 자극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인 건설업의 호조가 이를 능가하는 에너지 및 중화학 공업 등의 생산 감소로 그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2000~2011



자료: 한국은행

〈표 1〉 북한의 부문별 GDP 성장률 2010~2011

	'10	'11
농림어업	-2.1	5.3
광공업	-0.3	-1.4
- 광업	-0.2	0.9
- 제조업	-0.3	-3
- (경공업)	-1.4	-0.1
- (중화학공업)	0.1	-4.2
전기가스수도업	-0.8	-4.7
건설업	0.3	3.9
서비스업	0.2	0.3
- (정부)	0.2	0.1
- (기타)	0.3	0.6
국내총생산	-0.5	0.8

자료: 한국은행

이렇게 보면 2011년 북한경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이 분명하다. 석탄과 철광석 같은 광업생산이 부진한 상태에서 북한당국이 무리하게 달러를 획득하기 위해 이들 전략물자의 대중 수출을 크게 확대하였고, 그 결과 이들 물자의 국내공급 부족으로 에너지 생산 부족 → 제조업 등 공업부문의 생산 침체 등 경제의 악순환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2011년 북한의 농업부문은 양호한 일기조건 등으로 곡물생산이 증대하고, 그 결과 전년에 비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농업부문의 호조가 제조업 및 에너지 부문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해 북한경제가 마이너스의 성장을 기록하지 않은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역으로 살펴보면 2011년 북한의 전반적 경제추세는 농업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10년보다도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의문의 제기

이러한 해석은 어려움에 처한 현재의 북한경제를 잘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또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해석은 현재의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외부 관찰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시선이기도 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처럼 ‘당연하고 표준적인’ 해석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외부인사들 가운데에는 평양의 경제상황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에 따르면 평양에서는 핸드폰과 레스토랑, 심지어는 자동차와 같은 내구소비재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의 외부 관찰자들은 최근 평양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른바 경제적 중산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경제가 잘 돌아간다’ 는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한다.¹⁾ 따라서 만일 우리가 앞서 몇몇 수치를 통해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북한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실제 평양의 모습에서 이러한 징후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육안에 의한 관찰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은 그 속성상 지리적으로, 계층적으로, 또한 ‘의도적으로 제한이 주어졌을지도 모를’ 특성의 대상만을 상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관찰은 주로 평양의 특정 지역과 계층의 경제활동을 특정한 환경에서 바라본 결과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부인사들의 관찰은 현재의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의문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외부인사들의 관찰은 주로 평양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며, 평양 이외의 경제는 평양과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우리가 앞서 수치로 설명한 것처럼 북한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현재 평양 이외의 지역경제는 전반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평양의 경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표면상 경제침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경우 현재의

1) 예를 들어, 최근 필자가 면담한 해외기관의 평양 근무자는 요즘 평양의 경제를 Money, Market, Mobile Phone, Motor Car, Middle Class 등으로 묘사한다. 평양의 경제상황이 외부에서 보듯 그렇게 열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북한경제를 특징짓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침체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 보다는 더욱 극심해지는 평양과 비평양의 경제 양극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타 지역의 경제악화 속에서도 왜 유독 평양만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북한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수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와는 별도의 또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별도의 또 다른 그 무엇’ 은 과연 무엇일까? 당연하지만 우리가 2012년 북한경제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무엇’ 을 찾아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육안에 의한 관찰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 이야기의 대부분이 바로 시장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이 북한경제가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근거는 북한의 계획경제가 아니라 시장 때문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과거와 달리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 수치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경제활동은 그렇게 침체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앞서 우리가 전반적인 몇몇 수치들을 통해 북한경제의 침체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몇 수치들이 과연 북한의 시장경제 활동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수치들이 북한의 시장활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를 토대로 북한의 전반적 경제활동이 침체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들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듯이 현재의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시장의 비중은 과거와 같이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미미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3. 문제와 시각의 진화

이처럼 현재의 북한경제를 보는 외부 관찰자들의 시각에는 약간의 온도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대다수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몇 수치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북한경제가 침체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육안에 의한 관찰을 토대로 이에 의문의 시선을 보낸다. 그렇다면 이들 중 과연 어떤 것이 현실에 더욱 가까울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이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것이 바로 북한경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들 모두가 북한의 경제현실을 크건 작건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육안에 의한 관찰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평양에서는 경제침체의 징후가 뚜렷이 발견되지 않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들은 정말 북한의 시장활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와 같은 기본적 질문들이 이들 육안에 의한 관찰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그것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가 파악하는 북한경제의 동향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앞서와 같은 의문에 대답하는 길은 분명하다. 우선 북한경제의 전반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지금과 같이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객관적 수치와 관련 정보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육안에 의한 관찰로 대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바른 동향 파악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수치와 정보들은 언제나 불충분하거나 일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완전하고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현실과 잘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육안으로 계속 관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끈임 없이 고민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타 국가의 경제동향은 이와 관련된 제반 수치를 해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결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처럼 현재의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외부 관찰자들의 시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또한 조금씩 진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과거에는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몇몇 객관적 수치들을 토대로 북한경제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가, 또는 나빠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이 북한경제 동향을 파악하는 일의 거의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그 무엇이 요구된다. 만일 북한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면, 왜 평양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징후를 관찰하기가 어려운가, 그리고 우리가 북한경제의 악화를 말하는 근거가 북한의 시장활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는 일이 북한의 전반적 경제상태 자체를 판단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III.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네 가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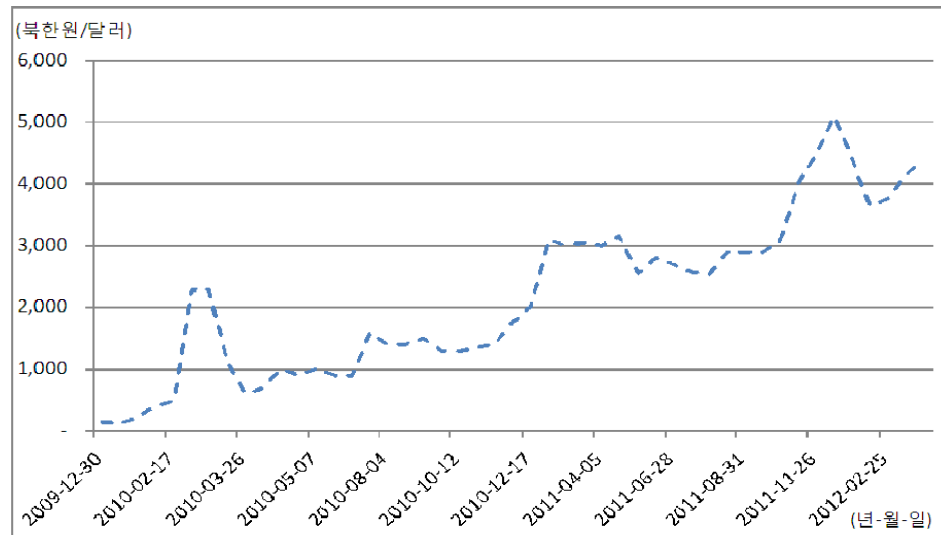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올해 북한경제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시장의 활동이나 평양과 여타 지역의 경제양극화 현상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이에 대해서는 관찰자마다 서로 강조점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북한경제에 있어 적어도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은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지속적인 환율상승 추세와 거시경제 불안정성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북한경제에서는 북한의 시장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갔다. 평양을 기준으로 할 때 연초(2012.2월)의 달러당 3,650원에 불과했던 북한의 시장환율이 6월에는 최대 4,450원까지 상승한 것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시장환율의 상승현상이 2010년 초반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약 2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환율상승의 폭 역시 매우 커서, 2010년 초반 기준에 비해 2012년 상반기의 북한 시장환율은 최대 27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북한의 시장가격이 해외(특히 중국)로부터의 수입가격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시장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식량 등 제반 물자의 시장가격은 환율의 움직임과 거의 같은 추세를 보여왔으며,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도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은 평양 기준 연초(2012.2월)의 Kg당 2,800원에서 6월에는 최대 3,300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원화환율이 상승하고, 이것이 급속한 시장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됨으로써 북한의 거시경제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올해 상반기에도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2〉 북한의 시장 환율 추이, 2009.12~2012.5



2. 전반적 경기부진 속에서의 극적인 경제 양극화: 평양 vs. 황해도

이러한 거시경제의 불안정과 더불어 올해 상반기 역시 북한의 전반적 경제상황은 침체를 면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올해 북한의 산업생산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가 거의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한 가지 증거이다. 과거 이맘때 프로파간다 차원에서라도 빈번히 발표되던 북한의 다양한 산업생산 성과들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뜻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북한에도 가뭄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상반기 북한의 농업생산 환경 역시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기에 김정일의 사망과 관련한 내부 정치적 통제에 따른 산업생산의 차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북한의 전반적 경제상황은 예년에 비해 크게 나아졌을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상황과는 별개로 올해 상반기 평양의 경제활동은 크게 나빠진 것으로 관찰되지 않는다.²⁾ 지난 4.15 태양절을 계기로 북한당국이 평양시민들에게 배포한 이른바 선물 꾸러미는 기존의 북한주민 기준으로 볼 때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 평양시민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핸드폰과 같은 내구 소비재의 보급 역시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평양 시내에 부분적인 도로체증이 발생할 정도로 자동차의 보급 역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북한당국 역시 평양에 새로운 식당과 물품 공급소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당초의 예상을 깨고 김정일의 애도기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양에서의 시장경제활동이 매우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반 평양주민들이 체감하는 전반적 경제 상황 역시 그렇게 나빠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부분적 사실들이 올해 상반기 평양의 경제가 호황이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평양이라고 해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체감하는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북한당국이 그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소위 10만호 살림집 건설사업과 같은 전시성 행사 역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평양의 경제상황이 예년에 비해 더욱 침체하고 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평양만을 놓고 보면 올해 북한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평양 이외의 지역을 살펴보면 사정은 이와 매우 다르다. 한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상반기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보고되는 다양한 기근(famine) 징후들이다. 실제로 일부의 관찰에 따르면 올해 황해도 지역에서는,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반 주민들이

2) KDI 북한경제연구팀은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자 및 현장 활동가를 면담하였다. 올해 상반기 평양 등 일부 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면담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아사(餓死)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북한경제가 2000년대 들어 점차 그간의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이러한 기근 사망자(famine death)가 보고되는 경우 역시 매우 드물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올해 상반기 황해도에서 관찰되는 기근징후들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올해 왜 황해도에서 이러한 기근 징후가 발견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 상대적으로 황해도에는 군부대의 배치가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군대의 식량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식량분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이와 다르게 황해도는 지리적 특성상 주민들의 텃밭경영이 제한되어 있고, 시장의 발달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식량공급의 충격에도 주민들의 식량소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올해 상반기 황해도의 기근 징후가 보여주고 있듯이 평양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경제상황은 예년에 비해 결코 나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몇 년간 북한에서 진행되어온 경제 양극화의 현상이 올해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평양의 소비 확대 vs. 황해도의 기근 징후’ 라는 형식으로 매우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뜻이다.

3. 고통스러운 대외교역: 투자유치와 노동력 송출이 해답인가?

올해 상반기 북한경제에서 관찰되는 또 다른 특징은 대외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5.24 조치를 통해 한국이 거의 모든 남북교역을 차단한 이후 북한의 실질적 대외교역 파트너는 이제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남북교역의 중단을 대중교역의 확대로 만회하기 위해 그간 대외수출을 자제했던 무연탄이나 철광석 같은 전략물자의 대중수출을 무리하게 확대해 왔다는 사실 역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12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교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은 여전히 자체 생산능력과 내부적인 수요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일 만큼 대량의 무연탄과 철광석, 귀금속 같은 주요 전략물자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족한 달러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응당 이처럼 무리한 전략물자의 과다 수출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경제 내부의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동시에,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이러한 수출 자체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으로 연결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당국 역시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외교역 부문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략물자의 수출 이외에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북한당국이 매우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북한당국은 중국의 대북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접촉과 제도개선, 그리고 투자유인 등의 제공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은 그간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중국의 나진 선봉 지역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북중국경 지대에 대한 도로 및 기간 인프라의 구축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이후부터 중국의 대북투자과 관련된 내부규정 및 제도 역시 중국의 기준에 맞추어 변경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지어는 자원개발을 겨냥한 중국의 대북투자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함경도를 위시한 북한의 일부 내륙지역에 대한 지하자원 개발권 역시 중국 측에 허용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현재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투자관련 협의내용은 그 전모가 상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중국의 대북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부족한 달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 등 관련국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올해 상반기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한 이른바 북한 노동력의 대규모 해외송출관련 논의이다. 물론 그간 북한은 다양한 형태로 내부 노동력을 해외에 수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일정한 외화를 획득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등장하고 있는 북한 노동력의 해외송출관련 논의는 이러한 기존의 시도와는 그 궤가 다르다. 우선은 형식의 상이성이다. 최근 중국과 북한은 북한의 노동력을 북중국경 지역이나 중국지역으로 송출하여 집단적으로 거주시키면서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남북교역의 경우 북한지역에 우리의 자본과 물자가 가서 북한노동력을 이용하는 개성공단과는 정반대의 경우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북한은 이러한 형태의 노동력 수출을 극히 꺼려왔다. 왜냐하면 이 경우 개성공단처럼 북한당국이 직접 노동력을 통제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므로, 북한 노동력에 대한 해외의 영향력이 매우 직접적이고도 광범위하게 투여되는 일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에 대한 해외의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형식의 해외노동력 송출이야말로 가장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교역형태가 아닐 수 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북한노동력의 수출규모는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다. 처음에는 몇 천명의 단위에서 시작할지 모르지만, 경제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올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는 두 가지의 특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 북한당국이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꺼려했던 형식의 해외투자의 유입과 내부 노동력의

송출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둘째는, 상업적인 교역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연탄과 철광석 같은 전략물자를 과다하다고 보일 정도로 대규모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결합하면 그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우선 현재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같은 전략물자를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부족한 달러를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물리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록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대체할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북한이 올해 들어 해외의 투자유치에 더욱 적극적이고 이제까지 기피하던 형식의 대규모 노동력 송출까지를 고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4. 그러나 활성화되는 시장과 개혁·개방의 가능성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 북한경제의 특징은 북한당국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움직임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올해 상반기 내내 북한에서 이른바 개혁과 개방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올해 북한경제에서는 연초 일부 시점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대한 통제가 거의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시장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는 당초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현상이다. 왜냐하면 지난해 말 김정일이 사망했고, 과거 김일성의 사망 당시를 회고해 보면, 새로이 세습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시장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매우 당연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김정일에 대한 초기의 애도기간 며칠을 제외하면 시장에 대한 단속이 크게 무뎠고, 그 결과 북한주민들에 의한 시장활동은 별다른 제약 없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른바 4.15 태양절을 전후해서는 과거와 별반 다른 없는 본격적인 시장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일상적 삶이 다시 시장을 중심으로 영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김정은 정부의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개혁과 개방에 대한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정은 스스로가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정치적 언급을 수행하는가 하면, 북한정부 내부에서 이미 개혁과 개방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일종의 현안 팀(Task Force)이 조성되어 향후의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 역시 의외이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김정일로부터 권력을 세습 받았으며, 김정일의 경우 이러한 개혁과 개방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김정은이 정권 초기에 이를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개혁 및 개방정책을 이야기하기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우 역설적으로 이러한 김정은 정부의 초기부터 개혁과 개방에 대한 가능성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김정은 정부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향후 북한경제에서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북한정부의 전향적인 개혁 개방정책이 발표될 개연성도 존재한다는 뜻이다.

5.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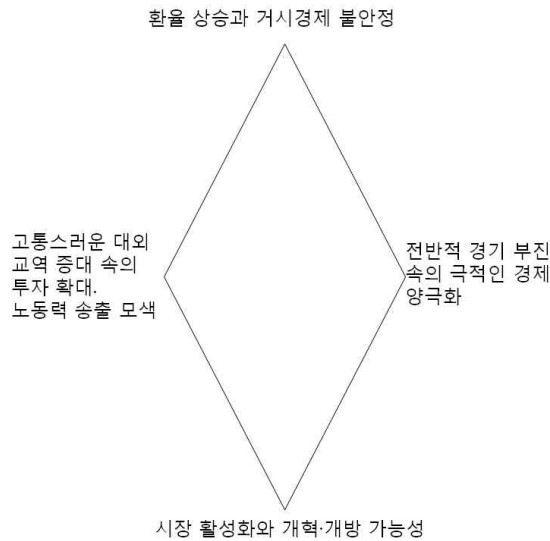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부에서 관찰한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모습은 매우 다층적이다. 한편으로 올해 북한경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둬드는 환율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거시경제가 더욱 불안정해지는 어려움을 맞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석탄과 철광석 같은 전략물자의 대중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부족한 달러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물리적으로 장기간 유지되기 어려운데다 국내의 물자공급부족을 야기함으로써 전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위험성마저 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이제까지 꺼려했던 형식의 해외투자 유치와 북한노동력의 해외송출 역시 추진하고 있으나 이의 구체적 결실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 전반적인 경제현실이 이처럼 어렵다고 해도 평양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양의 경제가 예년보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징후는 잘 관찰되지 않으며, 일부 계층에서는 핸드폰과 자동차, 새로운 레스토랑으로 대별되는 소비의 확대를 향유하고 있다는 보고마저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평양과 대조적으로 황해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의 기근 징후마저 관찰되는 등 경제의 악화가 뚜렷하다.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모습을 특징짓는 것은 단순히 전반적인 침체의 지속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행되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북한경제를 대하는 김정은 정부의 태도 역시 주목거리이다. 김정일의 사망 이후 의외로 북한정부는 주민들의 시장활동을 크게 통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일상적 경제활동 역시 다시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김정은 정부 안에서는 개혁과 개방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김정은 스스로가 개방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을 보이는데 하면, 북한정부 내부에 이미 개혁과 개방정책을 연구하는 현안 팀이 만들어져 있다는 루머 역시 존재한다.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를 특징짓는 움직임이 단순히

물리적인 경제활동에서뿐만 아니라 이를 조직화하는 북한당국의 인식 및 정책의 변화에서도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그림 3〉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모습



IV.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를 보는 하나의 실험적 가설

우리는 이제까지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특징을 개관하였다. 그 결과 올해 북한경제의 모습은 단순히 ‘침체의 지속’ 이라는 한 마디 말로는 설명하기가 불충분하였다. 한편에서는 전반적 경기침체로 대북투자의 확대와 노동력 송출과 같은 새로운 경화 채널의 확보가 모색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 양극화가 진행되며, 북한당국 내부에서 개혁과 개방의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등 조금은 복잡한 모습으로 올해 북한경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의 2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처럼 다면적인 북한경제의 모습을 하나의 일관된 틀로 설명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올해의 북한경제에 대한 하나의 실험적 가설을 제시한다. 이는 올해의 북한경제를 일종의 ‘총력 달러 확보 체제’ 로 보는 시각이다. 물론 이러한 가설은 검증된 것도 아니며, 심지어는 완성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의 현실 설명력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올해의 북한경제에 대해 조금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지속적 환율상승 추세의 재음미

우선 올해 북한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 북한 시장환율의 상승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 등 전반적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북한의 시장환율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형식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당국의 통화증발에 따른 화폐적인 현상으로 이를 설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의 외화수급 사정의 악화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현재 북한당국의 재정능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취약성은 지난 2009년 말 북한이 실시한 화폐개혁이 실패함으로써 더욱 악화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북한당국은 경제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일까? 그 한가지 방법은 북한당국이 보유한 발권력을 이용하여 추가로 화폐를 발행·유통시키는 것이다. 화폐를 더욱 많이 찍어 자원을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일 북한당국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더욱 많은 화폐유통으로 시장가격은 급속히 상승할 것이며, 이러한 시장가격의 상승은 다시 북한 원화환율의 가치절하를 가져와 시장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북한의 재정능력 약화 → 추가적 화폐발행 증대 → 시장가격 상승 → 시장환율 상승'의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설명은 현재의 북한시장환율 추세를 매우 잘 설명하지만, 한 가지 의문점도 존재한다. 현재와 같은 북한의 시장환율 상승추세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매우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한당국이 더욱 많은 화폐를 발행하여 자원을 확보하려 든다면 곧이어 시장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를 북한주민과 시장 역시 충분히 알아챘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주민과 시장은 당국의 지속적인 통화증발을 예상할 것이고, 이러한 예상이 존재한다면, 설사 북한당국이 추가적인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왜냐하면 당국의 추가적인 화폐발행은 정확히 그에 상응하는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므로 이를 통한 추가적 자원확보 능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당국이 추가자원 확보를 목표로 통화를 증발시키고 이로 인해 시장가격과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지난 몇 년간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좀처럼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시장환율 상승추세는, 비록 부분적으로는 북한당국의 재정능력 약화와 이에 따른 통화증발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실제 외화사정 악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올해 상반기를 포함하여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외화사정이 점차 악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시장환율이 상승하고, 그 결과로 다시 시장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가격의 상승이 이제 역으로 북한당국의 실질적 재정능력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북한당국은 설사 기존 수준의 자원을 확보하려고 해도 필연적으로 더욱 많은 추가적 화폐발행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가격은 더욱 상승하고, 시장환율은 더욱 절하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요컨대, ‘외화사정 악화 → 시장환율 상승 → 시장가격 상승 → 북한의 재정능력 약화 → 추가적 화폐발행 증대 → 시장가격 상승 → 시장환율 상승’의 메커니즘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 우선 이것은 앞에서 볼 수 있듯이 통화증발에 의한 시장환율 상승 메커니즘을 그 자체의 설명요소의 하나로 포함한다. 개념적으로 현재 북한의 시장환율 상승현상을 외화사정의 악화로 설명하는 것이 이를 통화증발을 통해 설명하는 것보다 더욱 포괄적이라는 의미이다. 더욱이 이러한 설명방식은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실질적 외화사정 악화를 초래해온 제반 요인들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10년 한국이 실시한 5.24 대북제재조치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러한 조치로 인해 북한은 과거 연간 최대 5억 달러를 상회하던 한국으로부터의 경화유입이 차단되었고, 그 결과 이에 상응하는 외화부족에 직면해 온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지난 몇 년간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전략물자를 대규모로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가능한 더 많은 경화를 확보하고자 노력해 온 것이 한가지 좋은 증거이다. 이렇게 보면 지난 수 년간 북한의 시장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기본적인 원인은 바로 북한의 실질적 외화사정의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2. 총력 달러 확보 체제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실질적 외화사정이 악화되어 왔다면 이를 피부로 가장 체감하는 경제주체는 아마도 북한당국, 특히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 정부일 것이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현재 북한당국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지지세력들에게 달러를 나누어 주고 이들의 충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방법은 김정은 정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실질적 외화사정이 악화되어 왔다는 사실은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 정부로 하여금 지지세력에게 나누어 줄 달러가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더욱이 김정은 정부는 과거의 세력들로부터 달러를 회수하여 자신의 지지세력에게 이를 재분배하는 것도 쉽지 않다. 과거 김정일 정부시절 주요 달러 공급채널을 장악해온 세력들 역시 현재의 김정은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 가운데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는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 정부가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달러 확보문제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 정부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최일선의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부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응당 그 대답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가능한 빠른 시간에 충분한 달러를 확보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난해 12월 김정일의 사망 이후 북한당국의 경제적 사명은 무엇보다 먼저 달러를 확보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올해 상반기 북한경제가 북한당국이 주도하는 '총력 달러 확보 체제' 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3. 내부적 달러확보 방식 - 지대, (변형된) 매각, 권력과 화폐의 교환

그렇다면 북한당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까? 또다시 형식논리적으로 그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북한주민들이 보유한 달러를 당국이 회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적으로 더 많은 달러유입을 기대하는 것이다. 먼저 전자의 방법을 생각해 보자.

물론 북한당국은 그간 스스로가 장기로 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달러를 회수하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왔다. 주민들의 회화사용을 금지하거나 몰수하고, 대신 일정한 환율로 외화를 국가에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방법은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달러 자체를 퇴장시키게 만들으로써 결코 대규모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달러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북한당국이 대규모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달러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경제적 방법이 존재한다. 첫째는 경제적 지대를 발생시켜 이를 수취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계획부문의 자원을 변형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것이고, 셋째는 시장에서 권력을 화폐로 교환하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의 방법을 생각해 보자. 최근 북한당국은 해외의 투자기업을 내세워 중국 등에서 헐값으로 휴대폰 등을 수입한

후 이를 북한주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상당한 지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휴대폰 보급이 수십만을 넘어 백만 단위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러한 지대의 규모는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일 것이다. 이처럼 북한당국은 스스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해외와의 무역 등 각종 권리를 토대로 북한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보유한 달러를 경제적 지대의 형태로 수취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빈번히 관찰되고 있는 자동차의 소비중대나 새로운 식당, 국영 백화점 등에서의 각종 (해외)물자의 판매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당국은 계획부문의 자원 또는 권리를 변형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매각함으로써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양의 10만호 살림집 건설을 생각해 보자. 물론 이 사업은 국가의 자원동원 능력이 한계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만일 북한당국이 이를 통해 주민들의 달러를 확보하려 든다면 어떻게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동 살림집에 대한 권리를 혁명 유자녀와 같은 특정 대상에게 부여한 후, 이들이 그 권리를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장의 매각대금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북한당국으로 회수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대금을 토대로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형식의 자금확보가 북한 전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대상 역시 좁게는 주택과 같은 내구 소비재에서 넓게는 중소형 발전소의 건설과 같은 국가의 기간산업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시장을 통해 스스로의 권력을 화폐로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시장에서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에서 시장이 존재하는 한 국가는 권력을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경우 국가 스스로가 부정부패를 통해 대규모의 달러를 획득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국가가 달러를 배분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국가가 이들에게 달러를 재분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4. 내부적 달러확보의 귀결 - 경제 양극화, 시장, 그리고 개혁

그런데 이와 같은 내부적인 달러 확보체제는 세 가지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체제의 목표 자체가 달러 획득이므로 그것이 작동되는 대상 역시 달러가 존재하는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응당 북한에서 이러한 지역이나 계층은 주로 평양에

거주하는 중상층 이상의 사회적 그룹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가 작동되는 지역이나 계층에서는 표면적으로 경제활동이 순조로울 수밖에 없다. 달러 획득을 위해 국가가 이들 경제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다. 반면 달러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 또는 계층으로 이러한 달러 확보체제가 가동되지 않는 대상은 사정이 전혀 달라진다. 이 경우 국가는 이들의 경제활동에 별다른 지원이나 심지어는 일정한 주의조차 기울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역 또는 계층은 전반적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올해 상반기 북한경제가 전반으로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평양과 같은 지역에서는 핸드폰과 자동차, 기타 내구 소비재 등을 왕성히 수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황해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는 징후가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달러 확보 체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달러 확보체제는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가 경제적 지대를 수취하기 위해서도 시장이 필요하며, 권력을 화폐로 교환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계획부문의 자원을 주민들에게 변형하여 매각하기 위해서도 결국 시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이제 당연히 시장을 통제하기 보다는 이를 활용할 유인을 더욱 많이 갖는다. 올해 상반기 일시적인 김정일의 애도기간을 제외하고는 국가에 의한 시장의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한가지 좋은 증거이다. 따라서 만일 향후에도 이러한 달러 확보체제가 지속되는 경우 북한의 김정은 정부는 과거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시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바로 이러한 시장에 대한 태도를 정책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곧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서는 시장이 존재했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불분명했다. 북한의 경제현실 상 시장을 철폐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한편으로는 이를 어쩔 수 없이 묵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을 통한 반사회주의적 질서의 태동 가능성을 경계하여 주기적으로 시장활동을 억제하는 조치를 병행 실시한 것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북한경제에서처럼 당국에 의한 총력 달러확보체제가 가동되고 이것이 시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 경우 시장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할수록 달러 확보체제 역시 더욱 순조롭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북한정부 내부에서 계속 개혁에 대한 가능성이 흘러 나오는 것 역시 아마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5. 외부적 달러확보 방식 - 투자, 노동력 송출, 그리고 개방

그럼 다음으로 북한당국이 외부로부터 더욱 많은 달러를 유입시켜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물론 이와 관련하여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해외에 수출을 늘려 경화를 확보하는 길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경제현실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쉽지 않다. 물론 북한은 지난 몇 년간 무연탄이나 철광석 같은 주요 전략물자의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부작용이 크다. 우선은 이러한 수출확대로 내부적인 공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경제가 침체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경제현실상 생산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이들 상품의 수출확대가 물리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해외에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수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력과 같은 자산을 수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철광석의 수출을 확대하는 것은 생산능력의 제한으로 한계가 있지만, 중국기업에게 북한내부의 철광석 개발권리를 부여하여 이들이 생산한 무연탄을 수출하는 것은 사정이 다르다. 이 경우 중국기업의 투자로 북한내부의 철광석 생산능력 자체가 그만큼 확대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이 과정에서 중국기업의 투자자금이라는 형태로 유입되는 추가적인 달러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은 과거에도 이러한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과거 북한은 이러한 투자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력, 다시 말해 북한주민에 대한 해외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대전제 아래 이러한 투자유치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따라 해외의 투자는 주로 국경지역이나 특구에 한정되고, 북한당국에 의한 이들 투자기업에 대한 통제 역시 빈번하고 강력하며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옹당 이러한 북한당국의 태도로 인해 해외의 투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총력 달러확보체제’는 이러한 북한당국의 태도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무엇보다 해외의 투자가 가져오는 달러를 향유하기 위해 그로부터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고려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최근 북한당국은 북한 내부지역의 자원개발과 관련한 중국 등 해외기업의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투자기업에 대한 통제 역시 국제적인 관행 또는 투자국가의 제도를 원용하여 실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선 등 북중국경 지대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북한의 다양한 제도적 준비가 중국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함경도 등 북한 내부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진출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아마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한당국이 최근 해외에 대규모의 노동력을 송출하고자 시도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추가적인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간 북한주민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 유입을 차단한다는 명목 하에 꺼려왔던 집단적 노동력 송출 역시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노동력 송출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북한당국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북한의 자원수출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북한당국의 태도를 경제정책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곧 개방과 다름 아니다. 원래 개방이란 '국제경제의 움직임에 부응하여 자국의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북한은 이러한 본래적 의미의 개방을 거부해왔다. 국제사회와의 교역 및 투자는 확대하지만,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영향력은 차단하고, 오히려 북한내부의 기존 경제질서는 과거보다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 이른바 북한식 개방의 요체였다. 한국에게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개방하지만, 그 주위로는 철제 울타리를 쳐서 나머지 지역과 분리하고, 이들 개방지역에 대한 행정적 경제적 통제권 역시 북한당국이 철저히 행사한다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만일 올해 상반기의 북한경제가 '총력 달러확보체제' 로 전환되었다면, 이러한 북한식 개방 역시 변화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제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더 많은 자원을 수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북한의 경제제도 역시 점차적으로 국제사회와 투자국가의 요구를 반영하여 변화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북한당국 내부에서 경제개방의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온 것도 아마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V. 맺음말

우리는 이 글에서 북한의 경제동향 분석과 관련된 문제의식 및 시각의 진화로부터 시작하여, 2012년 북한경제의 특징적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하나의 평면 위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실험적 가설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1)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2) 이러한 침체 속에서 북한당국은 부족한 경화를 획득하기 위한 '총력 달러체제' 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경제적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특히 후자의 결론과 관련하여 평양과 황해도로 대별되는 극적인 경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이 활성화되고, 개혁과 개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되는 조금은 특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 글의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북한에 관한 한 확실한 것이라고는 없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미 공표된 몇몇 수치만을 읽으면 누구라도 그 전반적 경제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단순한 현실 몇 가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수많은 논쟁과 토론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북한이기에 간단한 경제동향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일도 그만큼 더 깊어치가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보다
진전된 논의들이 출현하기를 기대한다.

KDI 북한경제연구팀은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자 및
현장 활동가를 면담하였다. 올해 상반기 평양 등 일부 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면담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실물 및 산업부문 동향

이석기 | 산업연구원 | sklee@kiet.re.kr

I. 개황

2012년 상반기는 갖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사망과 100일 애도 기간, 김일성 100회 생일 축하 등 주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또한 젊은 권력자 김정은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간이기도 하였다. 신생 정권이 이러한 정치적 이벤트에 집중함에 따라 실물 및 산업부문에 대한 정치 및 경제적 자원 동원 역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수 있다. 강성대국 건설의 문을 여는 해 인 2012년에 금속, 기계, 화학 등 핵심적인 중화학공업부문의 실적보도가 이례적으로 적은 것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된 실적보도는 전력, 건설부문 정도에 그치는 반면 경공업 부문에 대해서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실적 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공업 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I. 산업부문별 상반기 동향

1. 경공업 및 상업 유통¹⁾

북한은 2012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공업부문을 농업부문과 함께 ‘강성국가건설의 주공전선’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과제로 ‘최근 건설된 현대적인 생산설비들이 성과를 내고, 질 좋은

1) 시장동향은 본 호의 시장동향에서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국영 유통부문만 검토한다.

경공업 제품들의 생산을 늘리며, 경공업 부문에 필요한 원료·자재를 국내에서 해결할 것' 을 제시하였다.²⁾ 또한 지방공업의 발전도 강조하였다. 경공업 부문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9.4%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공업에 대한 강조는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김정은 역시 농업과 경공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정책노선이 선군정치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경공업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자원배분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공식적인 선전매체에 의한 산업부문 실적 보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경공업 부문은 예년과 유사한 빈도의 실적 보도가 목격되고 있다. 주로 개별 경공업 기업의 설비 확충 및 현대화, 새로운 생산 공정의 조업 등이 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평양곡산공장,³⁾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⁴⁾ 평양어린이식품공장,⁵⁾ 평양담배종이공장,⁶⁾ 평양신발기계공장⁷⁾ 평양시 용성구역 여성 필수품 생산기지⁸⁾ 등 평양시를 중심으로 한 경공업 공장의 생산설비 현대화 및 새로운 생산공정 조업에 대한 실적보도가 중심을 이룬다. 신의주 화장품 공장 등 전국 각지의 경공업 공장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보도는 평양시 소재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방산업공장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자원투입은 평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개별 기업의 설비 확충 및 새로운 생산공정 조업 보도에 비해 경공업 부문 전체나 업종, 부문별 실적에 대한 보도는 거의 눈에 띄이지 않는다. 연초 20일간 경공업성의 생산이 40% 증가하였으며, 식료일용공업성의 생산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 정도가 보도되었다.⁹⁾

북한이 200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2년 상반기에는 시장에 대해서 다소 느슨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단 2012년 상반기의 시장에 대한 유연한 태도는 김정은의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인식의 측면이 아니라 시장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부분적인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된다. 국영 유통망의 복구 및 확장을 통하여 상설시장에 대응하려는 접근방식이 그것이다. 이미 시장을 통하여 상당수의 주민들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전면적인 통제는 공식경제에도 충격을 준다는 것이 화폐개혁

2)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경공업 부문에 대해서 소비품 생산 증대와 이를 위한 경공업 공장, 지방산업공장, 생활필수품 생산기지 등의 증신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인민들의 기호에 맞고 인민의 인정을 받는 갖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것 을 요구하였다.

3) 옥수수 가공공정과 효소생산공정 현대화 준공, 『중앙통신』, 『중앙방송』, 3월30일

4) 드로프식살탕에 항로를 섞어 만든 일사탕생산공정 조업, 『중앙방송』, 4월 8일

5) 공우유기부 생산 공정 준공, 『중앙통신』, 4월 26일

6) 위생용품직장 준공, 『중앙통신』, 4월 26일

7) 신발창 도색 흐름선 생산 시작, 『중앙방송』, 2월 26일

8) 평양담배종이공장 위생용품 직장, 『중앙통신』, 5월 25일

9) 『중앙통신』, 1월 25일

이후의 시장상황을 통하여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의 영향력을 통제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국영 유통망을 확충하고, 여기에 국영기업에서 생산된 '질 좋고 싼 가격'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확산을 막겠다는 시각이 정권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상반기 공식매체에 의한 국영 유통 및 상업시설에 대한 보도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과의 합작으로 1월 5일 개업한 광복지구상업증심이다. 중앙통신은 1월 10일 이 상업증심은 '방대한 양의 상품진열 및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품의 입고·보관·출고·판매·대금결제에 이르는 봉사경영 활동의 모든 공정들이 정보화·숫자화되어 있으며', 이로서 '중앙과 지방의 경공업 공장과 식료품 생산기지에서 나오는 우수한 상품과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유명상품도 구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되었다고 보도하였다.¹⁰⁾ 2월 21일에는 보통강 수산물 상점이 개업하였으며,¹¹⁾ 4월 25일에는 만수교 고기상점이 개업하였다.¹²⁾ 그리고 '평양시 모든 구역·군들에 고기상점을 신설' 하겠다는 보도¹³⁾도 있었다. 이 밖에도 신의주백화점 등 평안북도 인민위원회의 도내 1천여 개 상업 서비스 시설의 개건 등 상업·유통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실적보도가 적지 않다.

2. 선행부문

신년공동사설, 최고인민회의 등에서 전력, 석탄, 주체철 및 주체비료, 철도 수송 등의 부문이 강조되고 있으며, 예산도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은 12.1%, 기본건설부문은 12.2% 증액되어서 투자가 집중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2012년 상반기에는 전력 및 광업을 제외한 중화학공업 부문의 투자 및 생산 실적에 대한 보도는 크게 줄었다.

전력부문에 대한 실적보도도 희천 1, 2호 발전소 완공(4월 6일) 및 희천-평양간 송전선 연장공사 완공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것이 없다. 광업부문에서는 무산광산¹⁴⁾과 검덕광산¹⁵⁾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보도가 있었다.

금속, 기계, 화학공업 등의 분야에서는 이상하리만치 구체적인 성과보도가 없었다.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하여 많은 투자를 해 온 2.8비날론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및 흥남비료

10) 좋은벗들은 '광복지구상업증심'과 같은 대형 상점에서 국산품 대 수입품을 4대 6의 비율로 하고, 국영상점보다는 약간 비싸더라도 시장 가격보다는 낮게 싸게 팔라는 지침을 정한 바 있다는 '중앙당 간부'의 말을 전했다. 실제로 이러한 지침이 있었거나, 혹은 관련된 논의가 되었다면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도태시키겠다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1) 연건축 면적 3,940여㎡/3층 건물, 『중앙통신』, 2월 21일

12) 『중앙통신』, 5월 10일

13) 『중앙방송』, 『평양방송』, 3월 14일

14) 2호 대형원추형파쇄장과 2선광장 한 개 계열 증설 공사 성과적 진행 및 기술공정들 현대화 조인, 『중앙통신』, 『중앙방송』, 5월 22일

15) 제8선광장 개건 공사 진행 중, 『중앙방송』, 3월 11일

연합기업소 등에 대한 보도는 눈에 띄지 않았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석유화학계열 설비 개보수 및 부분적 시운전 관련 기사¹⁶⁾가 유일한 성과 보도였다. 소위 주체섬유(비날론)와 주체비료(석탄가스화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비료)에 대한 언급은 발견하기 어렵다. 금속부문도 문평제련소와 단천제련소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보도되지 않았다. 특히 주체철(비코크스 제철법)에 대해서는 공식 매체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따라서 상반기 중으로 전력 및 광업을 제외한 중화학공업 부문의 투자 및 생산이 다소 위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3. 건설 및 국토관리

2012년 상반기 가장 활발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진 곳은 건설분야인 것으로 추정된다. ‘강성대국 건설’ 과 관련된 투자활동이 사실상 건설부문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평양시 10만호 주택건설 사업이 그 중심이다. 평양시 주택건설 사업의 핵심지구인 만수대 지구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 진척 상황이 반복적으로 보도되었으며, 6월 20일에는 만수대지구 창천거리의 준공식이 거행되었다.¹⁷⁾ 이 밖에 중앙방송은 평양시 대규모 주택건설 공정률이 70%에 달한다고 보도하였으며,¹⁸⁾ 노동신문은 룡성, 서포, 력포지구 등에서 수십 동의 고층 아파트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도하였다.¹⁹⁾

주택건설 이외에도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에서 적지 않은 실적이 보도되었다. 2009년에 건설되기 시작된 단천항이 5월 3일 준공되었으며,²⁰⁾ 대계도 간석지 내부망 공사²¹⁾와 곡산 간석지 2단계 건설²²⁾이 완공되었다. 이 밖에 남포-평양간 해수 수송관 공사 완공도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 그리고 예년과 유사하게 평안남도과 함경남도의 국토관리사업 및 산림조성 사업 등²³⁾ 등 각지의 국토관리 사업의 성과가 보도되었다.

16) 『노동신문』, 5월 3일

17) 『중앙통신』, 중앙방송, 6월 20일

18) 『중앙방송』, 3월 13일자 등 방송은 보도에서 주택 규모에 대해 만경대, 두단, 보통강, 중구역은 5층으로, 낙랑, 모란봉, 동대원 구역은 4층으로 지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19) 『노동신문』, 6월 17일

20) ‘수백만톤의 화물통과 능력을 가진 무역항’ 이라고 선전 『조선중앙방송』, 5월 3일

21) 대계도 간석지 공사는 2010년 6월 30일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에 대해 중앙통신은 “간석지 개간 역사상 가장 큰 8,800정보의 대계도 간석지 건설이 완공됨에 따라 서해 삼인 대다사도와 가차도, 소연동도, 대계도가 수심리 제방으로 연결돼 굴곡이 심하였던 평양북도 염주군, 철산군의 해안선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간석지에는 농장, 소금밭, 양아장이 새로 생겨나고 방조제의 덕으로 여러 군의 바다 농장과 마을에서 해일, 염기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완공된 것은 이 간석지 사업의 내부망 공사인데, 보도에 의하면 188만 1,800㎡ 토랑차리와 34만 2,700㎡ 장석 쌓기 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중앙통신』, 『중앙방송』, 4월 6일

22) 중앙통신 4월 9일자에 의하면 6호 방조제를 제외한 1-10호 방조제 1차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도, 징도, 내징도 등 여러 개의 섬들이 수천m의 방조제로 연결돼 농장, 양아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23) 7,700여만 그루 식수, 78km 구간 강바닥 준설, 50여km 도로 개보수, 1만7,000여 정보의 산림 조성, 철길주변 17만8,000여 그루 식수 등. 『중앙방송』, 5월 16일

III.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전망

2012년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강성대국건설의 문을 여는 해'라는 의미에서 전략적인 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한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상반기에는 이렇다 할 성과나 투자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다. 김정일 사망, 100일 애도기간, 김일성 생일 등 정치적 이벤트를 진행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관련이 깊은 식량 및 생필품 공급 확대를 통한 김정은 이미지 구축에 집중함으로써 산업부문에는 상대적으로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1년까지 지속되던 석유화학비료공정 등 대규모 산업 플랜트에 대한 투자를 일시적으로 줄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화학 공업 부문의 산업생산 활동도 다소 정체되었을 것이다.

경공업 부문에 대한 강조와 중화학 공업 부문에 대한 침묵이라는 2012년 상반기 산업부문의 움직임은 대규모 중화학 설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기존 설비의 구조조정과 현대화에 주력한 2000년대 초중반의 산업정책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2000년대 초중반 북한은 낙후되거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기업 및 설비를 구조조정 하는 한편, 기존 설비의 개보수를 통한 가동률 제고와 설비의 현대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였다. 경제위기에 따른 국가의 투자재원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겠지만 이러한 산업정책은 낭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중후반 국가의 투자능력의 부분적인 복구이후 북한은 다시 대규모 산업설비에 대한 투자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1980년대까지의 산업정책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정책노선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상반기에 비효율적인 설비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중화학 공업 부문의 투자 조절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농업 및 경공업 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의 증가 등 산업정책 기조와 관련된 것이라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정치적 이벤트와 김정은 이미지 구축을 위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상반기 경제정책이 정권의 안정을 위한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 국토관리, 광업, 그리고 경공업에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중화학 공업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감속하는 상반기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권이 안착하고 나면 강성대국 건설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다소 유보하였던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 및 생산 활동 독려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식량사정 및 농업 동향

김영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kyhoon@krei.re.kr

I. 머리말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은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국제사회가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1995년 북한의 대홍수와 90년대 중후반 식량위기 상황 발생이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식량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내의 농정시책을 강화했으며 국제사회와 한국은 북한에 대규모로 식량을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북한은 2007년까지 식량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경색되기 시작했으며 그 영향으로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 지원은 크게 감축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식량난 재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2011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일순간 긴장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국들도 북한 내부의 변화 조짐을 포착하려 촉각을 곤두세웠다. 절대적 리더십이 사라진 권력 판도에 생긴 커다란 공백을 속히 메우지 못한다면, 북한의 급변사태와 뒤이은 한반도의 요동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서 사망 발표까지 북한 내에서 특이한 움직임은 없었다. 그것은 사망을 발표하기 전 수습해 놓아야 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정리가 북한 권력체계 내부에서 정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망 발표 후에도 북한의 정치와 사회는 비교적 안정된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국제사회는 당분간 북한이 외부에 대한 도발보다는 내부에서 새로운 권력체제를 공고화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주변국들은 북한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강력히 희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은 즉각 조의를 표하는 한편 한반도의 안정을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도 북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권력 교체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은 김정일 사망을 전후하여, 북한의 우리농 농축 프로그램 진행 유보와 대북 식량지원 재개에 관한 북미회담 성과를 논평하며 북미 고위급회담의 중단 없는 추진을 시사했으며 실제로 그 이후 협상 타결에 도달한 바 있다. 이 상황은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의 해빙을 점치게 할 수 있을 만큼 새롭고도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 정국의 안정과 주변국들의 희망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이 급격히 요동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김정일 사망과 맞물려 어려운 상황이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부족 문제는 특히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다.

II. 2012년 상반기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1. FAO/WFP의 2012년 식량수급 추정

2011년 10월 북한의 작황을 현지에서 조사한 국제기구(FAO/WFP)의 실사단은 그 해 11월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전히 식량이 부족하지만 그 문제가 예년에 비해 심화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작년 말 쌀과 옥수수 등 주작목이 비교적 좋은 작황을 보였기 때문이다.

우선 벼 수량은 ha당 4.34(쌀 2.82톤)톤으로 재작년 4.26(쌀 2.77톤)톤에 비해 약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배면적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벼 생산량도 재작년에 비해 2% 증가하여 248만 톤(쌀 161만 톤)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생산량 상승은 주로 비료 투입의 증가, 관개와 농업동력 상황의 호전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조건에만 의존한다면 수량 증가는 더 크게 나타났어야만 했다. 그러나 불리했던 기후조건으로 인해 투입 증가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옥수수의 재배 여건 역시 벼와 다르지 않았다. 2011년 여름철의 침수, 일조량 부족, 태풍으로 인한 수분 저조 등 기후 조건이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평균 수량은 ha당 약 3.7톤으로 재작년의 3.3톤에 비해 10% 정도 상승했다. 높아진 수량의 결과 2011년

가을 옥수수 생산량은 186만 톤으로 2010년에 비해 약 11% 증가했다.

2011년 가을 감자 생산량은 약 12만 2천 톤(곡물 환산치)으로 2010년에 비해 29% 감소했다. 2012년 봄감자 생산에 대한 전망은 씨감자 부족으로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국제기구는 작년 말 현재 씨감자 공급이 부족해 씨감자 수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겨울 밀도 2010년에 비해 종자가 부족했다. 따라서 겨울 밀 파종도 목표치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족한 부분은 봄보리 종자를 수입해 파종해야 한다고 계획하기도 했다. 그 당시 계획했던 종자 수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적기 파종이 실현되었다면, 2011/12년 밀과 보리 생산은 예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말에 국제기구(FAO/WFP)는 2012년 전반기에 생산될 밀, 보리, 감자를 더하여 2011/12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약 466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식량 생산량은 2010/11년에 비해 약 8.5% 가량 증가한 것이다. 북한의 연간 곡물 소요량은 약 540만 톤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올해 74만 톤의 곡물을 도입해야 한다. 2011년 곡물 도입 요구량이 108만 톤에 달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올해의 식량사정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년에 비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었다. 북한 당국은 국제기구 실사단에게 32만 톤 이상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곡물의 수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부족한 식량의 양은 41만여 톤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식량부족에 직접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수도 크게 줄어들어 북한 당국의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표 1> 참조)

<표 1> 북한의 식량수급 추정(2011/12년)

(단위: 천 톤)

	쌀 ¹⁾	옥수수	밀/보리	잡곡	감자 ¹⁾	콩 ²⁾	총 계
국내생산(정곡)	1,610	2,032	182	49	489	294	4,657
주작물	1,610	1,857	-	49	121	294	3,932
이모작		-	182		318		500
경사지		150			-		150
텃 밭		25			50		75
총소요량	1,935	2,185	390	104	502	279	5,396
식 용	1,573	1,696	344	74	344	246	4,276
사료용	-	75	-	-	-	-	75
종자용 ²⁾	56	65	13	23	78	8	243
손 실	242	279	18	5	66	15	624
재고조정	66	71	14	3	14	10	178
수입 요구량	325	153	208	56	13	-16	739
수입 예상량							325
순부족 예상량							414

주 1) 벼의 정곡환산률 65%, 감자의 곡물환산률 25%, 콩의 곡물환산률 120% 각각 적용

2) 경사지와 텃밭의 종자소요량 15,000톤 계상

자료: FAO/WFP, 2011.11.

2. 외부의 식량지원과 시장 상황

가. 미국과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 동향

2011년 말 국제기구의 북한 식량수급 전망 보고서가 발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지도자의 급작스런 사망이라는 엄혹한 상황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수급에 대한 전망은 그리 나빠지지 않았다. 당시의 긍정적 전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다. 2011년 작황 호전으로 국내 식량공급 여건이 예년에 비해 좋아졌다. 2012년 2월 29일 북미 고위급협상이 타결되면서 24만 톤에 달하는 영양식품(식량) 지원이 예정되었다.¹⁾ 중국이 대규모 식량지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했다.²⁾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는 국제사회의 유화조치와 후속 지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것이 현실화되었다면 북한은 향후 식량수급 상황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은 암초를 만나게 된다. 북한은 '4.15 태양절'에 맞추어 장거리로켓 시험발사를 강행했다. 미국과 유엔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식량지원 여부를 연계시키고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미국은 '국제법규와 자신들의 약속을 위배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밝히며 즉시 대응했다. 유엔도 로켓 발사 3일 만에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비난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제재방안을 협의해 북한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한 북미 간 공식접촉은 중단 되었는데, 이는 북미 관계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³⁾ 이에 대응해 북한도 미국의 약속 불이행을 거론하며 '2.29 합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음을 거듭 상기시키고 있다. 비록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대북 지원 철회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움직임을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1) 이 회담의 직후 접촉은 김정일 사망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3차 북미고위급회담 합의 내용의 골자는 우리농농축프로그래(URF)의 잠정 중지, 핵·미사일 실험 유예 등 비핵화 사전 조치 이행과 미국의 대북 영양식 지원이다.

2)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의사 표명에 관해서는 2011년 말 '도쿄신문'이 처음으로 보도했으나, 이 내용이 확인된 것은 2012년 2월 27일 중국 외교부의 정례회이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북중」 양국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 유지는 물론이고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동의했다」면서 「조선에 대한 식량원조 문제도 토론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관련된 각 측과 국제사회가 조선에 각종 형식의 도움을 주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주변국들도 동참하기를 희망한 바 있다. 『동아일보』 2012.2.28.

3)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합의를 진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한 바 있다.

나. 2012년 봄 가뭄의 영향⁴⁾

최근 북한의 봄가뭄은 농업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년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북한 지역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특히 서해안에서 건조한 기후가 심했는데 평년 강수량의 10%에 불과한 지역도 있다. 수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발농사 비중이 높은 북한 지역은 농사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뭄은 이모작 작물의 작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리와 밀은 충분한 등숙(登熟)⁵⁾을 하지 못하여 수량이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봄감자도 10% 정도의 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⁶⁾ 이밖에 6월 말까지 가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재배 중인 옥수수의 피해도 예상된다.

특히 4월에 이식하여 조기 수확 예정인 옥수수에서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벼농사의 경우에는 가뭄으로 인해 이앙 작업에 부분적인 지연이 있을 수 있다. 이앙 작업이 더 지연된다면 초기생육이 불량하고 병해충 발생도 심해져 수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지만, 가뭄이 7월까지 이어지지 않아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봄가뭄의 영향은 주민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쳐 시장의 곡물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5월에서 6월까지 가뭄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곡물 가격이 조기에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 시장의 곡물가격 추이

북한 원화로 표시된 올해 5월의 평양 시장 쌀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약 1.6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명목가격으로만 판단한다면 식량부족 현상이 그만큼 심화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북한의 쌀 수급 변화를 알 수는 없다. 북한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환율의 급등 현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시장의 곡물 수급 상황의 변화는 달러화로 표시한 실질가격으로 평가해야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북한 식량수급의 전반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은 농민시장이나 장마당의 식량가격(달러화 표시 실질가격) 동향이다.⁷⁾ 북한의 쌀 가격 변동을 보면 2011년 10월 말 주곡(쌀) 수확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크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현상은 예년에 나타나지 않았던 기현상으로

4) 권태진·남민지 「북한의 가뭄실태와 식량수급 전망」, 『KRI 농정포커스』 제22호,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6.

5) 개화 후 종자의 배젖 또는 떡잎에 녹말 등이 축적되는 현상 또는 그 과정을 일컫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곡실이 여무는 것을 의미한다.

6) 권태진(2012.6)에 의하면 6월 말부터 수확 예정인 이모작 작물은 가뭄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치보다 생산량이 5~10만 톤(혹은 15% 내외)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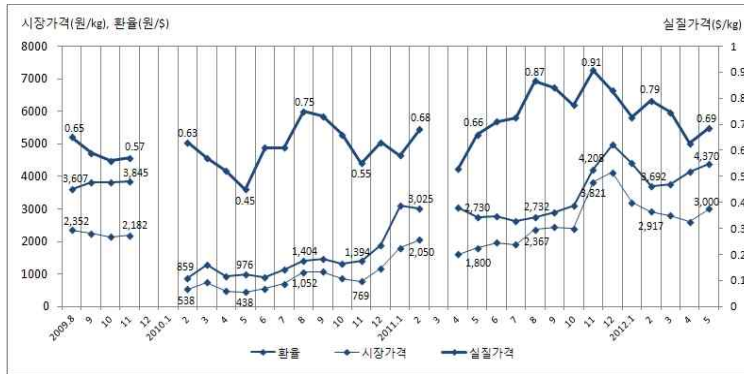
7) 본고에서 분석하는 식량가격 자료는 데일리NK(<http://www.dailynk.com>)에서 제공하는 북한의 시장 쌀 가격 자료이다. 이 자료는 한 달에 두세 번 평양 신의주, 해산의 시장 쌀 가격과 1달러당 북한원화 환율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고에서 사용하는 월별 가격은 관찰일수로 가중평균한 수치이다.

평가된다. 12월이 지나 식량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해 2012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쌀 가격 변동추세가 다시 예년의 수준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5월부터는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식량가격이 본격 단경기(端境期)에 이르기 전부터 조기에 상승하는 것은 예년과 다른 양상이다.(<그림 1>, <그림 2>,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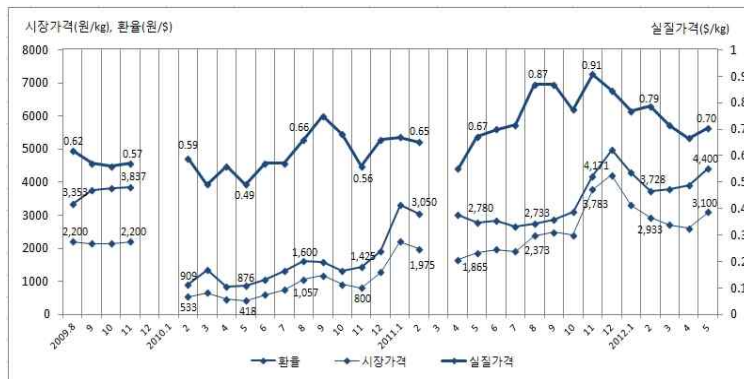
작년 말 쌀 가격 상승 현상은 이례적이며 경제 현상으로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2011년 가을 주곡의 수확 직후에는 시장에 곡물이 풀리고 작황도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현상은 곡물의 시장 유통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가해졌거나 시장에 예상치 못한 정치사회적인 이상 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월 이후 4월까지의 가격 하락은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런 현상이다. 여기에 김정일 사후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움직임, 중국의 대북 지원의사 표명, 북미합의에 따른 식량지원 가능성 고조 등에 따라 그 하락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5월 들어 시장의 쌀 가격은 다시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곡물가격의 조기 상승은 다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2.29 북미합의'가 보류되는 상황에 직면해 당분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분위기가 식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긴 봄가뭄으로 봄작물(밀, 보리, 봄감자)의 수확이 실제로 줄고 여름철 작황도 부진할 것이라는 심리적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7~8월 본격적인 단경기에 접어들면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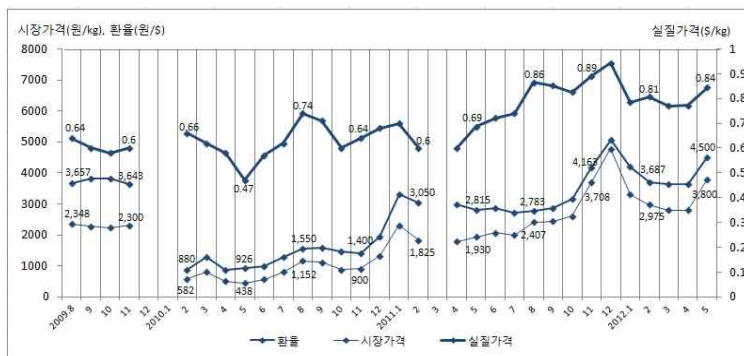
〈그림 1〉 평양의 쌀 가격 추이 (2009.8 - 2012.5)



〈그림 2〉 신의주의 쌀 가격 추이 (2009.8 - 2012.5)



〈그림 3〉 해산의 쌀 가격 추이 (2009.8 - 2012.5)



주: 환율과 시장가격은 관찰기에 따라 가장 평균한 월평균값임
 자료: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III. 2012년 상반기 북한 농업정책의 전개

작년 말 새로 들어선 북한의 지도체제는 아직 그들의 진로를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농업부문에서도 새 정권 고유의 정책 방향이나 방안이 드러난 바 없다. 다만 북한의 보도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전해지는 최근 농정시책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농정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최근 강조하는 농정시책은 농업기반의 정비, 산림조성, 유기농업 확대 등이다. 그러나 이들 농정시책은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대부분 김정일 정권에서부터 강조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다.

농업기반의 정비는 최근 들어 크게 강조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냉습지 개량 사업, 간석지 사업, 물길공사 등이다. 냉습지는 올해 전국적으로 3만여 정보를 개량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냉습지 개량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황해남도(13,000정보 계획), 함경남도(3,000정보 계획), 남포시, 함경북도, 강원도 등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⁸⁾

간석지 사업으로 북한이 심혈을 기울인 것은 ‘곽산간석지’ 사업과 ‘대계도간석지’ 사업이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곽산간석지 2단계 공사와 대계도간석지 내부망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외에 ‘미루벌 물길’ 공사의 완료를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관개수로와 저수지 등 수리사업도 강조하고 있다.⁹⁾ 최근 북한은 ‘1만여 km의 자연흐름식 물길 완성’이라는 노동신문의 기사에서, 지난 10년 간 1만 km의 자연흐름식 물길이 건설되었다고 전하면서 대규모 물길뿐만 아니라 그 지류로서 평안남도·평안북도·황해북도·함경남도 등지의 중소규모 물길 건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¹⁰⁾

산림조성도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식수절(植樹節) 기념식수 연설을 계기로 북한은 산림녹화를 독려하고 있다. 각 지방에서는 봄철 나무심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도시의 수림화와 원림화, 경제수종과 우량수종의 식재, 산림조성계획의 작성, 나무모 생산기술의 전파, 작업도구와 포장용기 확보 등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토환경보호성’을 중심으로 ‘중앙양묘장’과 각 군(郡)의 ‘산림경영소’에서도 양묘장에서의 ‘나무모(묘목)’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¹¹⁾

이와 함께 농업부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시책은 유기농업 확대이다. 북한 농업성은

8) 『로동신문』, 2012.2.7.

9) 『로동신문』, 2012.3.14, 4.8.

10) “중소규모 자연흐름식 물길은 평원군·속천군·대동군·개천시·증산군을 비롯한 평안남도의 시·군과 남포시의 군·구역 등 도처에 건설되었으며, 정주시·룡천군·염주군·동림군을 비롯한 평안북도 지방에서도 중소규모 물길 공사를 벌여 많은 면적의 농지에서 안전한 수확을 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다. 황해북도에서는 30여 개 대상의 물길공사를 성과적으로 해냈으며, 개성시에서도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를 실시해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넉넉히 보장할 수 있도록 했고, 함경남도에서도 근 100km의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하여 수천 정보의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보강했다.” 『로동신문』, 2012.3.2.

11) 『로동신문』, 2012.2.12, 3.12, 3.16, 3.19.

전국적으로 거름, '흙보산비료', 유기질복합비료의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한 달 동안 6,200여 톤의 '후민산칼리'를 생산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¹²⁾ 평양의 평천지구에는 최근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이 완공되어 유기질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보도하고 있다.¹³⁾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북한 새 정권의 농정시책은 선대 정권을 계승하고 있다.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이 농정시책들은 획기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여러 농정시책의 효과적 실행을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 토대와 물질 토대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는 현 시점에서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아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는 자본과 농업기술 조달 뿐 아니라 시장생산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는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협력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북한은 보다 효율적인 농업관리 및 경영체제를 만들 수 있는 경로를 찾아내야 한다. 시범적인 협력사업이 성과를 거둔다면 국제사회는 북한농업에 대한 본격적인 자본 지원 추진 방안을 비로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뚜렷한 의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은 최근 좀 더 개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외국투자은행에 영업세를 면제하는 법 개정 조치를 취했다. 개정된 외국투자은행법은 외국투자은행의 우대조건과 관련해,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의 경우 이익이 나는 첫 해에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북한의 은행들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해 얻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법은 거래세 면제를 규정하되 영업세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북한이 외국투자은행법을 개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¹⁴⁾

북한은 2011년 12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채택했다고 밝힌 뒤 2012년 최근 3개월 사이에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등 10개 가까운 법을 개정했다고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¹⁵⁾ 이밖에도 대외 인력 파견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경제와 무역 분야의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와 전문 기술 노동자 등 약 1천 명을 중국에 파견했다고 외신이 보도하고 있다. 주요 파견처는 중국 북동부의 선양, 다롄, 옌지 등 주요 도시와 남동부의 상하이에 있는 민간 기업과 공장 등이다.

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 체제의 향후 개방 의지를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12) '후민산칼리'는 묽은 알카리에 풀리고 무기산과 작용시 양금으로 가려있는 토양부식질의 한 부분으로서 북한에서는 알곡 생산을 늘리는데 중요한 유기비료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로동신문』, 2012.3.2.

13) 『로동신문』, 2012.2.26, 4.4.

14) 『연합뉴스』, "北 외국투자은행에 영업세 면제...법 개정", 2012.2.9.

15) 『연합뉴스』, "北 외국투자기업등록법·세금법도 개정", 2012.2.10, 『연합뉴스』, "北 투자유치 위해 남북경협보험 모델 도입", 2012.3.11.

대외 개방 의지 표명과 개방 조치가 꾸준히 확대된다면 향후 북한의 대외교역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부문에서도 수출용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도입 수요와 대외 농업협력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개방적 조치가 북한 농업부문의 대외교류협력과 교역을 증가시키는 성과로 귀결된다면 농업부문의 개혁과 개방은 자연스럽게 가속화되며, 북한 농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작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국제사회는 장기간 군림했던 절대 권력의 공백에서 북한이 혼란에 빠지고 그 여파로 동북아 정세에 불안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내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다. 또한 김정일 사망 전부터 이어 오던 미국과의 대화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도 맞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을 맞아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이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는 다시 경색 국면을 지속하게 되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새로운 상황이 극적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서방세계의 제재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상황 전개로 볼 때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제재는 식량지원 약속의 이행 보류이다. 기대했던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원 보류는 김정은 체제 출범 후 '2012년 강성대국 진입' 을 천명한 북한 정권의 향후 행보에 차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도 북한의 로켓 발사 이전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중국의 지원 약속이 실망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이행될 수 있다면 북한은 올해 식량난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식량 공급은 여전히 불충분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강성대국' 의 체면 손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기적인 식량 부족 상황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게 될 전망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내 식량생산의 증대이다. 그것은 농업부문의 변화를 통해 이룩해 낼 수 있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이 크게 변화한 것은 없다.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오던 농정시책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 외부에서 자본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역시 과거와 동일하다. 김정은 체제 들어와 외국투자 관련법을 손질하고 외국에 전문 관료들을 대규모로 국외 파견하는 등 개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행력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경제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투자,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부문의 개발협력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은 외부와 농업부문의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농업부문의 교류협력은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단기적으로 농업 생산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중장기 발전의 토대가 구축되지 못한다면 교류협력 확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 당사자와 관련자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은 기술의 향상, 시장경제에 관한 이해 제고, 국제사회와 소통할 전문인력 양성 등을 꾀해야 한다. 그것은 북한 스스로 바람직한 농업개혁 경로를 발견하는 일이며 농업개발에 필요한 외부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하다. 북한농업은 국제사회와의 능동적인 협력을 통해 그들이 처한 농업 침체의 함정에서 탈출해야 한다.

참고 자료

권태진·남민지, 「북한의 가뭄실태와 식량수급 전망」, 『KREI농정포커스』 제22호, 201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북한농업동향』, 각호.

FAO, WFP,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25 Nov. 2011.

FAO, WFP, UNICEF,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24 Mar. 2011.

FAO, GIEWS Country Bri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7 Dec. 2011.

UN,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 DPRK., 2011.

UNDP,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me (DPRK)” , 1998, 2000.

U.S. Press Statement, “U.S. -DPRK Bilateral Discussions” , February 29, 2012.

U.S. Press Statement, “Background Briefing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February 29, 2012.

『연합뉴스』, 『데일리NK』, 『로동신문』 각호.

북한의 시장 동향과 평가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 msyang@kyungnam.ac.kr

I. 머리말

2012년 상반기 북한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당초 약속한 강성대국 진입 선언을 위한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 도출이다. 또 하나는 김정일의 사망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게 된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위한 경제적 토대 마련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현재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 강성대국 건설의 원년인 올해는 외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더욱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인민생활의 향상’ 차원이든 새로운 권력 엘리트층에 대한 경제적 보상 혹은 물질 토대 제공 차원이든 외화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정부는 2012년 상반기에 시장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주민들과 시장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 동향을 정리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토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입수 가능한 정보와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북한의 공식 매체들은 시장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과 관련된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국 NGO 및 탈북자단체 등이 발간하는 대북 소식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성과 대표성 등의 면에서 한계¹⁾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사전적으로 충분히 인지되어야 한다.

1) 좋은 것들 『오늘의 북한소식』, 『데일리NK』, NK자사인연대 『북한뉴스』, 『열린북한방송』, 『자유아시아방송』 등.
2) 한국 NGO 및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소식지들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보도태도와 함께 보도내용에 일정한 편향성까지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제공하는 북한 내부 정보는 보다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이 글에서의 시장에 대해 간단히 개념 정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우리는 대개 시장이라고 하면 백화점이나 재래시장과 같이 장소, 공간으로서의 시장을 떠올리게 되고, 북한의 시장이라 하면 대개 장마당으로 불리는 소비재시장을 연상하는데 이는 시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시장은 장소로서의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시스템, 메커니즘이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 이 경우 시장 메커니즘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발신하는 정보의 시그널에 의해 가계, 기업 등 상이한 의사결정단위의 경제적 행동, 나아가 거시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II. 시장에 대한 북한정부의 정책

1. 시장에 대한 정책 기초

올 상반기동안 시장에 대한 북한정부의 정책 기초는 묵인 또는 방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정부는 2009년 11월말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종합시장에 대해 직접적인 폐쇄조치도 시도했지만 물가폭등, 상품공급위축 등 부작용이 겹잡을 수 없게 되자 2010년 2월초부터 시장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늦추고 나아가 5월에는 시장에 대한 억제 정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다시 합법적인 존재로서의 지위를 회복했고 이러한 정책기조는 작년 한 해 동안 지속되었고, 올 상반기에도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즉 2010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적어도 2년 동안 북한정부는 시장에 대해 유화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단속, 통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올해 3월 25일까지 100일간의 애도기간 동안 주민들의 이동 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게다가 국경지역의 경우, 애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통제가 지속되었다.³⁾ 또한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초까지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에서 국가보위부산하 전파단속국과 해당지역 보위부가 협동으로 휴대폰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⁴⁾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단속은 그 포괄범위와 수준이 2007년부터 2010년 초까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시장에 대한 전면적 단속 통제에 비할 바가 아니다.⁵⁾ 올 상반기 시장에 대한 단속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제한적, 일시적, 국지적인 것이었다.

3) 북중 국경지역에 주둔한 각급 국경경비부대들에 대해 4월 30일까지 특별경비 기간으로 정해 해당지역의 보위부, 보안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밀수와 탈북을 완전봉쇄할 수 있는 경비체계를 세울 데 대해 강조했다고 한다. NK자사인연대, 『북한뉴스』, 2012.3.29.

4) NK자사인연대, 『북한뉴스』, 2012.1.6.

5) 다만 올 상반기 중에 시장에 대한 묵인 또는 방임이라는 정책적 기조가 유지되었지만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 또한 아니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각종 정책들은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북한정부는 '비사회주의의 온상' 이라고 인식하는 시장에 대해 왜 특별한 통제·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더욱이 권력교체기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이고 내부결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기에 시장을 묵인 또는 방임했다는 것은 언뜻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생활로 눈을 돌려보면 어느 정도 수궁이 간다. 새로운 북한지도부는 '먹는 문제' 로 대표되는 인민생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개혁 조치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당분간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을 방임하는 정책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될 수 있다. 시장을 묵인하면 주민들의 불만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북한정부는 김정일 사망을 공식 발표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9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장마당(종합시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당초 설정한 애도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인 12월 25일부터 장마당을 통한 장사(상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다.⁶⁾ 식량 및 생필품 수급 차질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북한지도부가 민심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난 대목이다.

아울러 2월 16일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시·군마다 공급량에 차이를 보이지만 주민들에게 특별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진시는 5일분, 무산군은 7일분의 배급이 있었고 기름(식용유)도 1인당 200g씩 줬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⁷⁾

또한 4월 15일 태양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세대별 명절공급이 실시되었다. 이번 공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식량배급과 기름 외에 지방별로 품목을 추가하여 주민세대에 공급했다고 한다. 공급품목과 양에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가장 많이 실시한 평양시의 경우, 식량배급 외에 기름 1kg, 통닭 1마리, 꿀 10알, 설탕가루 1kg, 술(대홍단) 1병, 과자 2kg, 보통강 신발 한 켤레, 신의주화장품 한 세트, 수산물 1kg을 추가 공급했다고 한다.⁸⁾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예년의 태양절보다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2. 외화사용 금지 조치

올 상반기중 시장과 관련된 북한의 정책중 특기할 만한 것이 외화사용 금지조치이다. 북한에서는 올 1월 초부터 위안화, 달러화 등에 대해 '외화사용 금지령' 이 내려졌다. 당국은 각 기관·기업

6) 『데일리NK』, 2012.1.11.

7) 『데일리NK』, 2012.2.16.

8) NK지식인문대, 『북한뉴스』, 2012.4.16.

소 및 학교, 인민반 등을 대상으로 외화가 있는 사람은 은행에 가서 돈을 바꾸어 쓸 것을 강조하며, 시장에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화를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몰수당하는 동시에 엄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학습을 반복했다.⁹⁾ 당국은 “일체의 달러화와 인민폐를 비롯한 외화를 시장에서 유통시키면 마약보다 엄중히 처벌하리” 는 지시를 내렸다.¹⁰⁾ 이에 따라 시장에서 외화로 물품을 거래하거나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되었다. 실제로 전국의 보안당국에서는 시장이나 상점에서 달러화와 위안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돈을 몰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¹⁾

이와 관련, 북한 내부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장군님이 달러화와 위안화를 시장에서 유통시키지 말라고 교시를 내리셔서, 장군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달러화와 위안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는 소문이 돌았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이 지시를 내렸다는 소문도 있었다.¹²⁾

하지만 이번 조치가 지난 2010년 1월 1일자로 취해진 외화사용금지 조치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한 공식적으로 취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정황은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훈 관철 명목으로 법기관¹³⁾의 충성경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¹⁴⁾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미지수이다. 외화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지만 주민들은 별로 위축되지 않았다고 한다. 종전에는 시장에서 반(半) 공개적으로 외화를 주고받았다면 지금은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빈도가 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 주민들도 당국의 외화 단속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¹⁵⁾

북한 원화보다 외화가 선호되고 있고, 시장에서의 도매 거래는 물론 소매 거래도 상당수가 외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화사용금지 조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북한의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북한 원화가 가치를 상실한 지금 외화사용을 금지하면 중국으로부터 식량 및 생필품 구입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도 존재한다. 외화단속에 적발된다고 해도 단속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면 큰 문제가 없다. 더욱이 단속의 대상이 외화이고, 단속을 하는 사람들도 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¹⁶⁾ 결국 1월 초부터 실시되었던 외화단속

9)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012.1.11.

10) 『데일리NK』, 2012.1.2.

11)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012.1.18.

12)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012.1.11, 1.18.

13) 북한에서 법기관이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검찰소 등을 가리킨다.

14) 『데일리NK』, 2012.1.2.

15) 『데일리NK』, 2012.1.18.

16) 『데일리NK』, 2012.1.2, 1.23.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012.1.18.

은 대체로 보아 3월 경부터 흐지부지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⁷⁾

여기에서 외화에 대한 북한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외화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 및 관리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여기에서 시장화 및 달러화(dollarization)가 가속화됨에 따라 외화유통량은 계속 늘고 있다. 결국 정부로서는 강제적인 사용금지 조치, 직간접적인 외화 회수 정책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한편 지난 2009년 11월말 전격적으로 단행한 화폐개혁 직후 조선중앙은행은 식당, 상점에서의 외화 사용을 금하는 등 외국 돈 유통을 금지시켰다. 이어 2010년 1월 1일부터 북한 주민에 대해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북한정부는 인민보안성¹⁸⁾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개인이 상거래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거나 상거래시 외화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현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도 국가가 몰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기관이 수출을 통해 확보한 외화도 24시간 이내 은행에 입금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몰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화폐개혁 및 시장 폐쇄 조치, 그리고 외화사용 금지 조치 등이 한꺼번에 시행되면서 식량 및 생필품 유통이 마비되고 환율과 물가가 폭등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면서 외화사용 금지 조치는 유아무야되고 말았던 전례가 있다.

III. 시장 동향

1. 시장 전반의 상황

올 상반기 북한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시장은 올 상반기 중 비교적 활기를 띠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러하다는 이야기이다. 부문간,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소식지들은 몇몇 종합시장(장마당)에서는 물품을 팔려는 사람은 많지만 물품을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전하고 있다. 게다가 평양시와 국경지대의 몇몇 지역을 제외한 상당수 도시와 농촌들에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황해도 지역이 가장 심각하다고 전하고 있다.¹⁹⁾

17) 『데일리NK』, 2012.3.19.

18) 북한의 인민보안성(현재는 인민보안부)은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된다.

19) 예컨대 NK저널리스트 『북한뉴스』, 2012.4.19.

반면 평양은 활기에 차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20일에는 평양의 만수대 지구 창전거리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북한 당국이 올해 태양절을 겨냥해 야심차게 준비한 대규모 ‘뉴타운 건설 구상’이 실현된 것이다. 만수대지구 창전거리는 평양의 핵심지역으로서 북한내 살림집(아파트)으로서는 가장 높은 45층짜리 건물 등 총 14동의 고층아파트가 준비하게 들어섰다. 조선신보 보도에 의하면 창전거리 지상과 지하에는 상점, 백화점, 식당, 매대, 목욕탕, 이발소를 비롯한 상업봉사시설과 편의후생시설, 학교, 유치원, 탁아소 등 교육시설, 공공건물도 갖춰졌다.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 이후 창전거리와 같은 대규모 도심재개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²⁰⁾

또한 북한의 휴대전화 열풍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마침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월 2일, 오라스콤은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이 날 현재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²¹⁾ 2008년에 1,600명에 불과하던 휴대전화 가입자가 3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는데 따른 필연적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화폐개혁 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평양과 여타 지역의 격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 무역 확대와 시장화 진전

무역의 분권화로 대변되는 오늘날 북한의 무역시스템은 시장화를 촉진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무역회사의 운영에 개인자본 및 사적 경제활동의 편입을 촉진하는 특성이 있다.

〈그림 1〉에서 실질적인 무역의 주체는 상당수가 개인, 특히 돈주(錢主)이다. 이 개인은 우선 워크²²⁾를 가지고 있는 무역회사로부터 명의를 빌린다. 예컨대 ○○ 무역회사의 △△ 지사장과 같은 직함을 부여받는다. 이 개인은 대부분 자신의 자본을 투하해 수출원천을 동원한다. 현재 북중무역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무연탄의 경우, 이 개인이 북한 내 탄광을 찾아가 무연탄을 매집하고 그 대가로 현물이나 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사들인 무연탄을 중국 무역회사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수취한다. 그리고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해당 무역회사에 상납하

20) 『연합뉴스』, 2012.6.22.

21) 『자유아시아방송』, 2012.2.2.

22) 워크는 무역 라이선스와 쿼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진다. 물론 수출입 과정에서 상급기관인 무역회사(와크 단위) 등의 지도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이는 다소 형식적이다. 중요한 것은 무역회사가 요구하는 만큼의 수익금을 바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무역회사는 이 개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자기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자신의 상급기관, 즉 중앙당, 인민무력부, 내각과 같은 이른바 중앙기관에 납부한다.

무역의 실질적 주체인 개인이 수출품을 매집하고, 이를 중국 등지에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련의 과정은 대부분 시장경제의 영역이다. 특히 개인이 수출품을 매집하는 과정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는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국정가격이라면 탄광 관계자들이 무역회사 소속 개인의 매집에 응하지 않고 밀수업자와 거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개인은 무역회사의 소속이지만 사실상 개인사업자처럼 행동한다.

무역회사들, 특히 당, 군, 내각 소속 기관들의 무역회사들은 외화수입을 늘리기 위해 능력 있는 개인들을 경쟁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사실 자금과 무역관련 노하우, 네트워크 등 전반적인 '능력' 의 면에서 일반 무역회사와 개인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²³⁾ 무역회사들은 개인들에 대해 명의를 대여해 주고 그 댓가로 수익금을 수취한다. 그리고 이는 무역회사 차원의 공식 외화벌이 수입으로 둔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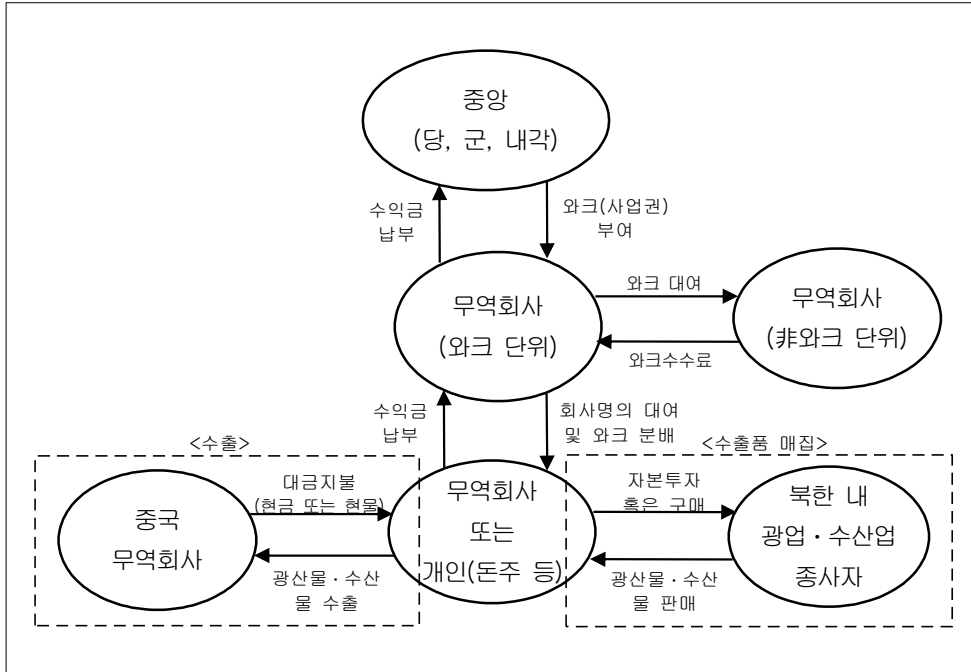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북중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면, 특히 이러한 상황이 북한 지도부에 의해 목적의식적으로 추구되었으며, 게다가 일종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 처럼 추진되었다고 하면 이는 무역의 확대가 시장화를 촉진하고 개인자본 및 사적경제활동의 영역을 넓혀주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평상시에도 무역 확대가 시장화 및 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데, 최근 몇 년처럼 국가가 나서서 외화확보에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 속에서 무역회사는 개인 및 시장에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북소식지들의 보도로부터도 이러한 상황을 읽을 수 있다. 내각 산하 각 기관에 강성대국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한 올해 외화벌이 목표액이 새롭게 책정되었다. 그런데 이는 종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된 액수로서, 이로 인해 각급 기관들의 무역회사들이 준비상태에 들어갔다고 한다. 특히 당국은 향후 중국 및 러시아와의 무역 증대를 통해 외화벌이 목표를 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²⁴⁾ 사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외화가 갖는 중요성은 올해 각 기관들에게 부과된 외화벌이 계획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23) 북한의 무역과 시장화의 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예컨대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파주: 한울, 2010, pp.159-174를 참조.

24) NK조선인연대, 『북한뉴스』, 2012.2.20.

〈그림 1〉 무역 확대와 시장화 진전의 연관성



이와 관련, 북한당국은 올해 북중간 무역을 확대할 데 대한 지시를 지방 무역국들에 하달했다. 당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의 확대를 승인했다. 현재 수출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 약초와 돌(청운석), 버섯과 고사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가 허가만 했을 뿐 자원과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현실에서 지방무역을 활성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돈주를 비롯한 개인들의 참여가 없이는 무역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²⁵⁾

3. 강성대국 건설과 시장화 진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 4월 15일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의 가장 큰 정치적 행사였다. 이를 위해 북한정부는 평양 10만호 주택 건설, 희천발전소 등 각종 대규모 건설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25) NK자사인연대 『북한뉴스』, 2012.1.6.

그런데 평양 10만호 주택 건설사업은 자금 부족, 원자재 부족 등으로 진척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북한정부는 10만호 주택은 사실상 포기하고 범위를 크게 좁혀 만수대지구 창전거리 건설에 집중했다. 아울러 군(軍)을 비롯해 무역성, 상업성, 전기석탄공업성 등 내각과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검찰소, 대학, 병원 등을 망라한 각급 기관, 그리고 공장, 기업소까지 살림집(아파트) 건설을 할당했다. 특히 기관별로 공사구간을 할당해 ‘층수 경쟁’을 유도했다.²⁶⁾ 그리고 이들 기관, 단위들이 자체적으로 건설자금을 동원하고 건설인력, 그들이 먹을 식량, 시멘트, 건설장비 등을 조달하도록 지시했다. 즉 국가 차원에서는 자금이든 식량이든 원자재든 일체 지원하지 않을 테니 각급 기관, 단위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적 정신을 발휘하여 살림집을 건설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수대 지구 창전거리는 올 6월 20일에 준공식을 가졌다.

희천발전소는 2009년 3월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올 4월 5일에 준공되었다. 발전용량이 30만 kW에 달하는데 북한이 최근 20년 동안 건설한 발전소 가운데 최대 규모의 것이다. 또한 북한 전력 생산량의 10%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희천발전소가 정상 가동된다면 북한의 전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은 생전에 희천발전소를 무려 8차례나 현지도 할 만큼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그런데 이 희천발전소조차 자금 부족, 원자재 부족 등으로 진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건설을 위한 자금을 당, 군, 내각 등 각급 기관에 할당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도 기관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적 정신을 발휘해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 특히 외화자금을 조달해 국가에 상납할 것이 요구되었다.

결국 북한정부가 평양시 만수대지구 창전거리 건설이든, 희천발전소 건설이든 강성대국 건설의 가시적 성과로서 내세우고 싶은 사업들이 국가 재정 부족으로 인해 기관, 기업소들의 자력갱생에 의지해서 준공되었다. 그런데 기관, 기업소들 또한 재정부족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자금이 있는 개인, 특히 돈주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돈주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셈이고 따라서 이는 시장 및 시장경제활동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는 북한정부가 결과적으로 시장의 확대를 조장하게 된 셈이다. 계획경제의 토대가 대부분 무너지고 국민경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장악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몇몇 건설사업을 통해 강성대국의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결국 시장화 진전 및 시장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 증대라는, 북한지도부로서는 결코 반감지 않은 사태를 초래했다.

26) 『데일리NK』, 2011.12.15.

4. 달러화 현상

북한에서는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 이후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올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1 조치 이후 시장화가 진전되고 주민들의 현금보유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는 주민들로부터 북한 원화를 대량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북한 원화의 가치 폭락, 외화의 환율 폭등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주민들 사이에는 북한 원의 보유를 기피하고 달러화나 위안화 등 외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미 달러화보다 중국 위안화의 유통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환율 및 물가 불안이 달러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평안북도 신의주시는 종전과 같이 위안화와 달러화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물품 판매와 구입 등 일반상거래에서 위안화가 직접 사용되는 빈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위안화 사용이 활발한 양강도 지역에서는 4월 15일 이후 식량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시시각각 변동되자 식량과 주요 생필품 판매 및 구매가 거의 다 중국화폐로 거래되며, 북한화폐를 사용할 경우에도 그 시간대의 달러 환율에 따라 계산된다고 한다.

또한 북한과 거래가 있는 중국밀수업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밀수업자들이 중국측에서 받는 거래대금을 종전에는 중국화폐 100위안짜리만 요구하던 것이 최근에는 1위안, 2위안, 5위안, 10위안짜리 잔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위안화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잔돈이 더 필요해진데 따른 것으로 환전상인들 역시 중국위안화 잔돈은 환전을 꺼려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잔돈 환전을 환영하는 추세라고 한다.

올 6월 초 현재 북한에서는 쌀 1kg당 북한돈 3,500~4,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소량으로 소매 거래되는 쌀도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돈 5위안 20전씩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²⁷⁾ 또 다른 양강도 소식통은 외화사용금지령이 유야무야된 3월 이후 외화 유통량이 종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특히 거의 모든 시장 물품이 위안화로 거래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살림집(주택)과 같은 대규모 거래는 말할 것도 없고 옷이나 신발과 같은 생필품도 위안화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식량의 경우도 위안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3월 중순에 북한쌀은 1kg에 5위안, 중국쌀은 4위안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²⁸⁾

27) NK 지식인연대, 『북한뉴스』, 2012.6.1

28) 『데일리NK』, 2012.3.19.

IV. 물가 및 환율 동향

올 상반기중 북한의 시장(장마당) 물가와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작년 11, 12월중에 급등했던 것이 올 1,2월에 급격히 하락했고, 3, 4월에는 안정된 움직임을 보였다.(〈표 2〉 참조) 다만 5월부터 다소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 어떤 추세를 형성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물가 및 환율 동향에는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물가와 환율의 동반 상승이다. 둘째, 북한에서 물가를 선도하는 쌀가격의 경우, 원화 표시 가격과 달러 표시 가격의 움직임은 독립적이다.(〈그림 1〉, 〈그림 2〉 참조) 셋째, 기대심리와 투기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²⁹⁾

한편 특기할 만한 것은 ‘김정일 사망’이라는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지만 북한의 시장물가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정일 사망 발표 직후 시장(장마당)이 폐쇄되어 시장이 다시 문을 열기까지 일주일 동안 시장 폐쇄에 따른 소폭의 가격상승만 나타났을 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쌀 가격의 경우, 김정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12월 19일 함경북도 등 국경지역에서 kg당 4,000원 수준이었다. 전 주보다 1,000원 가량 하락해 있었다. 김정일 사망으로 즉시 시장이 폐쇄되자 비공식 거래 가격은 5,000원으로 상승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열린 12월 25일에는 4,500원으로 떨어졌다. 시장폐쇄에 따른 일시적 상승 현상만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1월 들어 쌀 가격은 3,000원대로 급락했다.

김정일의 사망이라는 정치적 격변에도 북한의 시장(장마당)이 꿈쩍도 하지 않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의 사망이 정치적 격변을 예고할 수도 있지만 실제 시장 운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상황이라는 점도 시사한다. 김정은이 시장에 대해 별다른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겸 판단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건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³⁰⁾

29) 현재 북한에서는 환율 및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환율 및 물가가 상승하고, 여기에 사재기 및 투기까지 가세해 환율 및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하나의 악순환적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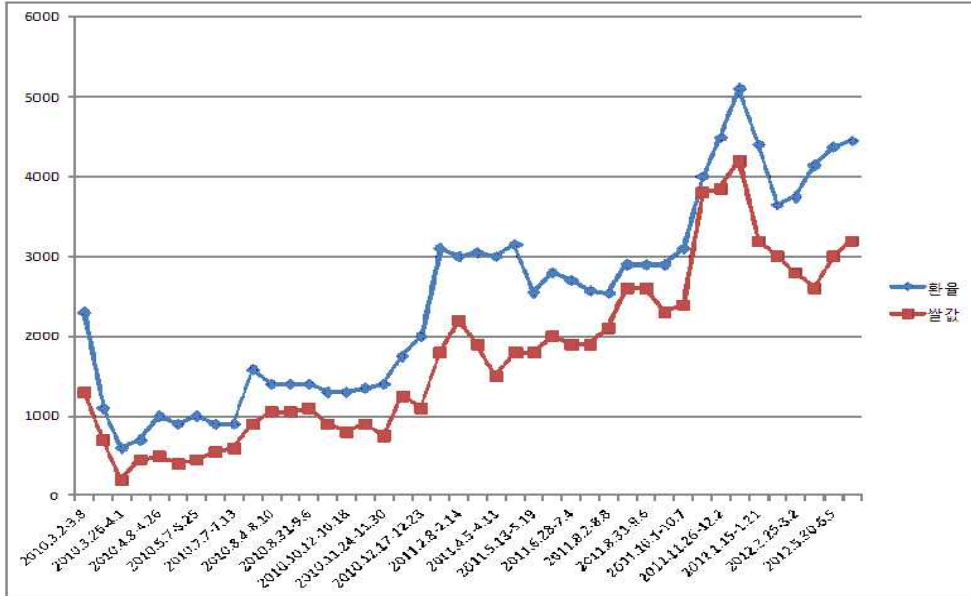
30) 『데일리NK』, 2011.12.27.

〈표 1〉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시장 쌀 가격 및 환율의 변화

	환율(1달러당 북한 원)			쌀값(북한 원)			쌀값(달러)
	평양	신의주	해산	평양	신의주	해산	평양
'09.11.9~11.22	38	38	38	22	22	23	0.578
'09.12.9~12.15	-	-	-	44	46	44	-
'09.12.30~'10.1.4	134	130	133	55	53	60	0.410
'10.1.8~1.14	215	217	220	210	190	200	0.977
'10.2.2~2.8	395	400	405	370	350	360	0.937
'10.2.17~2.23	500	510	515	470	450	450	0.940
'10.2.25~3.3	2300	2500	2350	950	1000	1200	0.413
'10.3.2~3.8	2300	2500	2350	1300	1100	1450	0.565
'10.3.9~3.23	1100	1050	1000	700	600	700	0.636
'10.3.26~4.1	600	550	600	200	200	250	0.333
'10.4.1~4.7	700	700	750	450	450	500	0.643
'10.4.8~4.26	1000	900	900	500	500	530	0.500
'10.4.26~5.6	900	800	850	400	380	400	0.444
'10.5.7~5.25	1000	900	950	450	430	450	0.450
'10.6.26~7.5	900	1050	1000	550	600	570	0.611
'10.7.7~7.13	900	1085	1050	600	650	750	0.667
'10.7.15~7.21	1580	1750	1700	900	950	1000	0.570
'10.8.4~8.10	1400	1600	1500	1050	1100	1200	0.750
'10.8.25~8.31	1400	1600	1600	1050	1000	1100	0.750
'10.8.31~9.6	1400	1600	1600	1100	1200	1150	0.786
'10.9.30~10.6	1300	1380	1400	900	1000	900	0.692
'10.10.12~10.18	1300	1350	1550	800	900	830	0.615
'10.10.26~11.1	1350	1250	1400	900	800	900	0.667
'10.11.24~11.30	1400	1450	1400	750	800	900	0.536
'10.12.7~12.13	1750	1800	1800	1250	1300	1350	0.714
'10.12.17~12.23	2000	2050	2100	1100	1250	1300	0.550
'11.1.12~1.18	3100	3300	3300	1800	2200	2300	0.581
'11.2.8~2.14	3000	3100	3100	2200	2150	1900	0.733
'11.2.22~2.28	3050	3000	3000	1900	1800	1750	0.623
'11.4.5~4.11	3000	2900	2850	1500	1500	1650	0.500
'11.4.27~5.3	3150	3200	3200	1800	1900	2000	0.571
'11.5.13~5.19	2550	2600	2650	1800	1850	1900	0.706
'11.6.14~6.20	2800	2850	2900	2000	2000	2100	0.714
'11.6.28~7.4	2700	2750	2800	1900	1900	2000	0.704
'11.7.14~7.20	2570	2600	2650	1900	1900	2000	0.739
'11.8.2~8.8	2540	2650	2700	2100	2200	2300	0.827
'11.8.18~8.24	2900	2800	2850	2600	2500	2500	0.897
'11.8.31~9.6	2900	2850	2900	2600	2700	2500	0.897
'11.9.15~9.21	2900	2875	2850	2300	2300	2400	0.793
'11.10.1~10.7	3100	3100	3150	2400	2400	2600	0.774
'11.11.8~11.14	4000	3900	3850	3800	3700	3500	0.950
'11.11.26~12.2	4500	4550	4600	3850	3900	4000	0.856
'11.12.7~12.13	5100	5100	5200	4200	4300	5000	0.824
'12.1.15~1.21	4400	4300	4200	3200	3300	3300	0.727
'12.2.4~2.10	3650	3690	3720	3000	3100	3100	0.822
'12.2.25~3.2	3750	3780	3640	2800	2700	2800	0.747
'12.4.19~4.25	4150	3900	3630	2600	2600	2800	0.627
'12.5.30~6.5	4370	4400	4500	3000	3100	3800	0.686
'12.6.8~6.14	4450	4470	4540	3200	3400	3900	0.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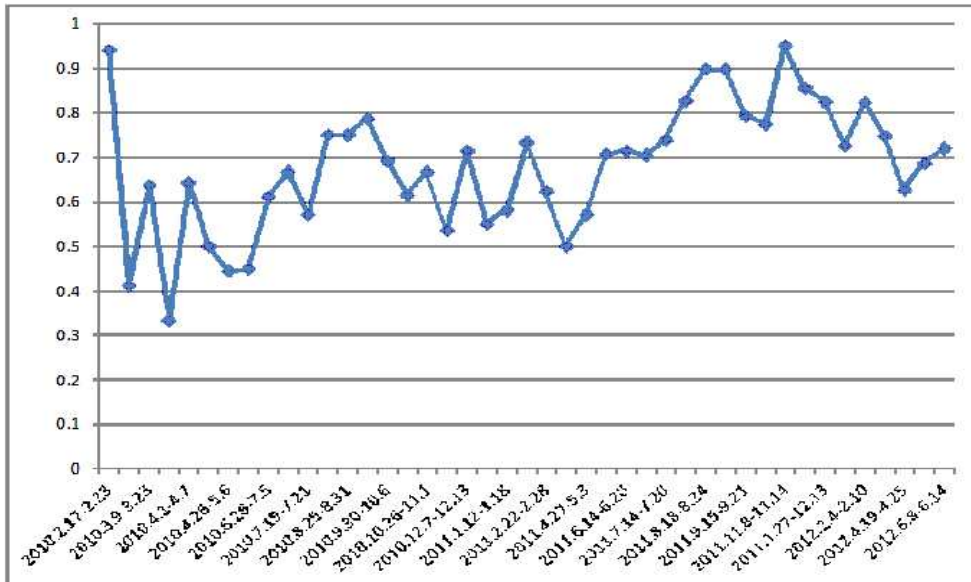
주: 화폐개혁 이후 신희페 기준. 자료: 데일리 NK

〈그림 2〉 2009년 화폐개혁 이후 평양의 원화 표시 쌀값과 대미 달러 환율 추이



자료: 상동

〈그림 3〉 2009년 화폐개혁 이후 평양의 달러화 표시 쌀값 추이



자료: 상동

V. 맺음말

시장에 대해 북한정부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경제를 위해서는 시장을 제도 내로 끌어당겨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시장이 활성화되면 정치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억제와 허용의 딜레마적 상황에서 북한정부는 올 상반기를 포함해서 지난 2년 동안 시장에 대한 허용이라는 길을 택했다. 권력 교체기에 민심을 달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교육지책이라는 면이 강하다.

하지만 다른 면도 있다. 이제 와서 시장을 없애려고 한들 과연 없앨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장을 없애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북한에서 시장은 20여 년의 역사를 보유하게 되었다. 경제위기도 장기화되고 있지만 시장화 역시 ‘장기화’ 되고 있다. 시장 없는 북한경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 대한 묵인 내지는 방임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면 시장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갈 지(之)자 걸음이었다. 상황에 따라 허용과 억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억제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시장이 여전히 ‘비사회주의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2012년 상반기 대외무역동향

김상기 | 한국개발연구원 | ksklyh@kdi.re.kr

I. 상반기 대외경제정책과 주요 동향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공식적으로 많이 발표되지 않는다. 이것은 북한이 모든 정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대외부문이 갖는 특수한 속성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에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대외경제부문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올 4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 5차회의에서 대외경제부문에 대한 올해의 과업으로 '수출품 생산기지 육성', '특구지역 개발과 합영, 합작사업의 전개', '외국과의 경제기술협조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외에 2011년 12월 말에 발표된 당 구호에서 대외경제부문 관련한 것으로는 유일하게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보장하라'는 구호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대외경제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무역의 확대를 외화벌이를 벌어들이고 원자재, 생필품 등을 보장하며, 특구정책을 통해 외자유치를 도모한다는 것이 표방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느냐가 북한이 안고 있는 고민일 것이다.

북한의 공식적인 대외경제정책과는 달리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상반기 대외경제부문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장지투개발과 연계된 북한의 특구정책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 외화획득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대외무역에서 북중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먼저 중국의 장지투개발과 연계된 북한의 나선특구지역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하부구조

개선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고 있다. 상반기 나선지구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면 지난해 4월 착공된 북한 원정리-나진항 구간의 도로개선 사업이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고 훈춘과 원정리를 잇는 신두만강대교 건설계획도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린성에서 생산된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 남방지역으로 수송된 규모가 10만톤을 넘어섰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특구지역에 대한 북한의 조치로 지난 해 말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을 새로 채택하였고 나선경제자유무역지대법을 전면수정, 보충해 특구지역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 특구지역에 대한 전개는 북한보다는 중국의 사업개발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이 외화획득을 위한 노력으로 근로자들의 중국파견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비교적 쉽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관광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외화를 벌기 위해 당, 군부, 내각 등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외화벌이 활동에 착수해 헤이룽장성, 지린성 등에 근로자들을 대대적으로 파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근로자의 중국파견에 따라 근로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열악한 근로조건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관광사업에서는 나선지역에 대한 자동차관광이 5월에 재개되었고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관광전용열차도 6월 1일에 첫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금강산에 해외관광객 유치, 나선시에서 금강산을 오가는 뱃길관광도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북중무역의 확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2010년 이후 북중무역은 급격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올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중무역 확대는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결국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대중관계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최근의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북중경제관계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중국과 밀착되어 가는 형국이다.

이하에서는 북한 대외무역의 2011년의 실적과 2012년 상반기(1~5월)까지의 북중무역의 동향 그리고 북한 대외무역의 특징과 전망을 간단히 살펴본다.

II. 2011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1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80억3,1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남북교역 포함). 이러한 높은 증가세는 수출입 모두 20% 이상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특히 북한의 대외수출이 44.8%라는 가파른 증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1년 북한의 대외수출규모는 37억200만달러, 대외수입은 43억2,9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적자에서도 수치상으로는 전년대보다도 3억4,400만달러가 감소된 6억2,700만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2011년 북한의 대외무역 증가는 전적으로 북중무역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 2011년 북중무역은 전년대보다 20억달러 이상이 늘어난 56억2,900만달러를 기록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점하는 비중도 2010년 56.9%에서 70.1%로 크게 높아졌다. 북한 대외무역에서 남북교역을 제외할 경우는 90%에 육박하는 89%에 달하고 있어 북한의 대외무역은 북중무역으로 대변될 정도로 대중의존 추세가 심각해지고 있다.¹⁾

2011년 북중무역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의 대중수출이 100%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관련해서는 위에서 상술했지만 이는 무연탄의 과도한 수출에 따른 것으로 북중무역 증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1년 북한의 대중수입은 전년대비 38.9% 증가한 31억 6,500만달러, 대중수출은 107.4% 증가한 24억6,400만달러를 달성하였다. 대중수출의 급격한 증가세에 따라 대중무역적자 폭도 2010년 10억달러 수준에서 2011년에는 7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1) 한편 2011년 남북교역 규모는 전년대비 10.4% 감소한 17억,386만달러를 기록하였고 3번째 교역대상국인 러시아와의 교역은 1억 1,280만달러, 다음으로 독일과는 5,84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과 남한과의 교역을 제외할 경우 러시아와의 교역만 1억달러를 조금 상회할 뿐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과의 교역은 5천만달러 미만의 미미한 실적을 보였다.

〈그림 1〉 북한의 대외무역추이



〈표 1〉 북한의 대중무역 비중추이

(단위: %)

연도	북한의 대중수출	북한의 대중수입	수출입 합계	대중무역적자/북한의 전체무역적자
2000	5.2	26.7	20.4	42.4
2001	20.2	30.9	27.6	39.6
2002	26.9	24.7	25.4	22.1
2003	37.1	30.6	32.8	23.7
2004	45.9	35.1	39.0	21.4
2005	37.3	39.8	39.0	42.2
2006	31.9	42.8	39.1	54.1
2007	34.6	45.6	41.6	59.3
2008	36.6	56.9	49.4	84.7
2009	39.7	61.0	52.6	99.7
2010	46.4	64.6	56.9	112.2
2011	66.6	73.1	70.1	111.8

주: 북한무역규모에는 남북교역 포함

남북교역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북중무역이 점하는 비중은 2009년 78.5%에서 2010년도 83% 그리고 2011년에는 88%에 달하고 있다.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2011년 북한의 수출입을 품목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수출의 경우 상위 5개 품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HS 27(무연탄), HS 26(광물), HS 62(의류제품), HS 72(철강), HS 03(수산물)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무연탄과 의류제품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무연탄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 거의 300% 가까이 증가하였고 위탁가공 형태의 의류제품 수출도 100%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수출액에서 점하는 비중도 2010년 70.8%에서 2011년에는 80.9%로 높아지고 있어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위 5개 품목에 대한 대중수출비중도 2010년에는 91.2%에서 2011년에는 95.2%로 상승하고 있어 대중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11년 북한의 수출은 중국에 국한되어 특정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2〉 북한의 상위 5개 주요 수출품목

(단위: 미 \$백만, %)

HS	품목	2010			2011		
		전체수출	대중수출	대중비중	전체수출	대중수출	대중비중
27	무연탄	402	397	98.7	1,179	1,149	97.4
26	광물	252	251	99.9	406	406	100
62	의류제품	189	161	85.1	397	357	89.9
72	철강	161	109	66.3	192	155	80.4
03	수산물	65	60	91.8	83	83	99.8
상위5개 품목 수출액		1,071	977	91.2	2,257	2,149	95.2
전체수출액		1,513	1,188	78.5	2,789	2,464	88.4

주: 남북교역은 제외
 자료: KOTRA 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kitanet.

북한의 대외수입 역시 대중의존도는 상당히 높고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북한의 상위 5개 수입품목을 보면 HS 27(원유 등 연료), HS 84(기계류), HS 85(전기기기), HS 87(차량), HS 10(곡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위 5개 품목의 수입규모는 2010년도에 비해 4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수치는 5개 품목의 대중수입 증가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 북한 수입의 중요 품목은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다는 것이다. 2011년의 경우 상위 5개 품목은 곡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전체수입액에서 대중수입 비중은 2010년에 85.6%에서 2011년에는 89.7%로 다소 높아지고 있다.

〈표 3〉 북한의 상위 5개 주요 수입품목

(단위 미 \$백만 %)

HS	품목	2010			2011		
		전체수입	대중수입	대중비중	전체수입	대중수입	대중비중
27	원유 등 연료	520	479	92.2	815	771	94.6
84	기계류	267	245	91.9	307	277	90.4
85	전기기기	216	191	88.3	280	251	89.9
87	차량	163	160	97.9	232	221	95.1
10	곡물	64	60	93.6	126	102	81.5
상위 5개 품목 수입액		1,229	1,134	92.3	1,759	1,623	92.2
전체수입액		2,660	2,278	85.6	3,528	3,165	89.7

주 남북교역은 제외

자료: KOTRA 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kita.net

III. 2012년 상반기(1~5월) 북중무역동향

2012년 상반기(1~5월) 북중무역은 여전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12년 상반기 북중무역 규모는 25억898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7.9%가 늘어났다. 북중무역이 이와 같이 늘어난 것은 수출입 모두 3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대중수입의 경우는 전년 동기대비 27.1% 증가한 14억5,950만달러를, 대중수출은 29% 증가한 10억4,950만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

〈표 4〉 북한의 대중무역 현황(2012년 1~5월)

(단위 천달러)

	수입	수출	합계	무역수지
2011년	3,165,006	2,464,186	5,629,192	-700,820
2011년(1~5월)	1,148,111	813,897	1,962,008	-334,214
2012년(1~5월)	1,459,487	1,049,496	2,508,983	-409,991
동기대비 증가율(%)	27.1	29.0	27.9	22.7

자료: 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kita.net

2012년 5월까지의 북한의 대중수입 상위 5개 품목을 보면 HS 27(원유 등 연료), HS 84(기계류), HS 87(차량 및 그 부품), HS 85(전기기기), 그리고 HS 39(플라스틱 및 그 제품)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위 5개 품목들은 전년 동기의 상승률에 비해서는 다소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HS 84(기계류), HS 87(차량 및 그 부품), 그리고 HS 39(플라스틱 및 그 제품)가 3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표 5〉 북한의 대중 주요 수입품목(2012.1~5월)

(단위 천 달러, %)

순위	코드	품목명	2011년(1-5월)		2012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율
1	27	원유 등 연료	307,091	45.1	364,453	18.7
2	84	기계류	98,264	68.4	132,478	34.8
3	87	차량 및 그 부품	81,000	66.0	109,156	34.8
4	85	전기기기	98,660	93.0	105,742	7.2
5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8,127	50.2	57,180	50.0
총 계			1,148,111	57.9	1,459,487	27.1

자료: 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kila.net.

식량, 에너지 등 주요 전력물자에 대한 대중수입에서는 전년 동기에 비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의 경우 밀가루의 수입물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11,395톤 늘어난 반면 옥수수과 쌀의 수입물량은 감소하였다. 특히 쌀의 경우 올 상반기 대중수입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43%나 감소한 26,982톤에 머물렀다. 비료의 경우도 올 상반기 대중수입물량은 84,362톤으로 전년 동기 114,188톤보다 26.1%가 감소하였다.²⁾

에너지부문에서는 먼저 원유의 경우 올 5월까지의 대중수입물량은 전년 동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24만5천톤으로 나타났고 정제유의 경우도 5만8,800톤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코크스 탄의 경우는 전년 동기보다 1만8천톤 정도 감소한 7만톤 정도를 수입하였다.

2) 올 4월까지 북한의 비료수입규모는 중국의 비료수출억제정책에 따라 15,100톤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5월에는 대중수입물량이 크게 늘어 5월 한달 동안의 수입물량이 69,203톤에 달해 누계로는 전년 동기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상당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표 6〉 북한의 식량 및 에너지 대증 수입현황(2012. 1~5월)

(단위 천달러 톤)

	품목	HS 코드	2011년		2011(1~5월)		2012(1~5월)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식량	쌀	10063000	54,983	92,182	11,775	21,531	9,109	16,532
	옥수수	10059000	45,836	137,724	14,307	47,403	10,242	26,982
	밀가루	11010000	50,297	124,963	18,688	47,356	23,747	58,751
비료	비료	31021000 31022000	94,188	350,641	23,033	114,188	18,738	84,362
	원유	27090000	518,361	526,176	232,848	249,178	279,895	245,044
에너지	정제유	27100000	192,386	188,701	51,327	53,642	64,172	58,769
	코크스탄	27011200	47,830	203,814	19,701	88,079	16,242	70,227

자료: 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kita.net.

올 5월까지의 북한의 주요 대증수출 품목은 〈표 7〉과 같이 HS 27(무연탄), HS 26(광물), HS 62(의류제품: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제외), HS 72(철강), HS 61(의류제품: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등의 순이다. 이러한 순위는 작년 동기와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이지만 증감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작년 경우에는 이러한 품목들이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무연탄에서만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을 뿐 그 증가추세가 상당히 둔화되었고 HS 62(의류제품: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제외)와 HS 72(철강) 항목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였다.

〈표 7〉 북한의 대증 주요 수출품목(2012.1~5월)

(단위 천달러 %)

순위	코드	품목명	2011년(1~5월)		2012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7	무연탄(광물성 연료, 광물유)	387,948	787.9	613,759	58.2
2	26	광물	113,185	72.5	129,743	14.6
3	62	의류제품(메리야스, 뜨개질 편물외)	110,065	226.9	97,323	-11.6
4	72	철강	59,829	67.2	55,053	-8.0
5	61	의류제품(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23,096	329.0	28,221	22.2
총 계			813,897	217.4	1,049,496	29.0

자료: 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kita.net.

올 5월까지의 대중수출이 29% 상승한 것은 전적으로 무연탄의 대중수출에 기인한 것이며 상위 5개 품목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중수출품목이 무연탄을 중심으로 한 지하자원과 위탁가공 형태의 의류제품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위 5개 항목의 대중수출 비중은 전체 대중수출의 88.1%에 달하고 있다.

올해 들어 무연탄의 대중수출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단일품목으로 대중수출을 거의 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연탄의 대중수출은 2010년 초만 해도 그 수출비중이 불과 4% 미만 수준이었으나 4월 이후 그 비중이 늘어나 40% 전후 수준이 되었고 2011년에 들어와서는 월별로 수준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45%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비중확대 추세는 2012년 들어와 더욱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2012년 1월 무연탄의 대중수출비중은 50%였지만 이후 4월까지 그 비중은 더욱 확대되어 4월의 경우에는 무려 64.1%에 달하기도 하였다. 5월에는 다소 그 비중이 감소해 55.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무연탄의 수출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2010년도의 경우는 무연탄 단가의 상승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2011년 5월 이후부터는 톤당 단가도 100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무연탄 물량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그림 2> 무연탄의 대중수출 월별 비중과 단가



IV. 평가와 전망

북한의 대외무역은 2010년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올 5월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대외무역의 빠른 증가세는 북중무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2011년 남북교역을 제외할 경우 북중무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점하는 비중은 90% 가까이 이를 정도로 대중 편향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올 상반기에도 지속되어 5월까지의 북중무역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27.9%가 증가한 25억900만달러 수준을 기록하였다.

최근 북중무역의 가파른 증가세는 대중수입, 수출 모든 증가에 기인한 것이지만 특히 대중수출의 증가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의존도의 심화 등 북중무역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은 대중수입 측면이다. 대중수입은 대중수출 보다는 최근 그 증가세는 떨어지지만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여 왔고 그 구조를 보면 원자재, 전략물자, 생필품 등 다양한 품목들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증가되는 대중수입에 대처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대중수출이다. 외화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이 국내에 필요한 물자 등을 대중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무연탄 등 지하자원의 과도한 수출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수출은 대중수입에 상당히 종속되어 움직인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북중무역은 대중수입이 늘어날수록 동시에 대중수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안고 있는 외화부족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대외적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은 주민생활의 안정 내지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늘어나는 대중수입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산업과 수출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외화획득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노동자들의 해외파견, 관광사업의 전개 등 비교적 단기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외화를 확보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큰 규모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비교적 풍부하고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한 무연탄의 대중수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북한도 지하자원의 수출을 어쩔 수 없이 추구해야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그러나 외화부족을 무연탄 등 지하자원의 과도한 수출로 해결하려는 임시방편적 처방에

3) "인민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무진장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긴장한 자금수요를 보정하는 것이다. 정치경제적 부대조건이 붙은 외국의 원조나 차관으로 조성된 자금은 인민생활향상에 오히려 리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에 무진장한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자금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와 같은 논조가 이에 해당된다. 강철수, 「우리 당의 인민생활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정책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68권 제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p. 84.

대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4월 하순 국토관리사업과 관련한 담화에서 지하자원의 마구잡이 식 수출에 제동을 걸고 관리체계를 바로 세울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⁴⁾

이 담화의 목적이 그 내용과 같이 지하자원 수출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인지 이것보다는 지하자원의 수출창구를 체계화해 외화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5월의 무연탄의 대중수출은 지난 4월 보다는 3백만달러 정도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1억4,300만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제동지시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몇 개월간 지하자원의 수출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대외환경이 지속될 경우 외화획득을 위한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하자원의 수출로 외화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처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북중무역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 김정은은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라는 담화(2012년 4월 27일)를 통해 지하자원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나라의 지하자원을 아끼고 적극 보호하여야 합니다. 지금 몇 톤의 외화를 벌겠다고 저마음 나라의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개발하여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멀리 앞을 내다보지 않고 눈앞의 것만 보는 근시안적태도이며 애국심도 없는 표현입니다. 나라의 지하자원개발을 국가자원개발성과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서 검토승인하는 체계를 엄격히 세워 지하자원을 망탕 개발하거나 지하자원에 벌에 무질서를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노동신문』, 2012.5.9.

남북 교역 및 교류 협력 동향

이재호 | 한국개발연구원 | jaeholee@kdi.re.kr

I. 서론

지난해 북한은 비록 상투적인 문구이기는 하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간의 대결상태 해소”와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복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초 발표된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는 이러한 상투적인 문구조차 나오지 않았다. 즉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대남정책과 관련하여 “조국통일 3대 현장 및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김일성·김정일 통일 유훈 관철” 등과 같은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쳤으며 또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은 통일의 전제이고 담보이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다분히 원론적인 이야기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이어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우리 측의 대북제재조치(5.24조치)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현재의 남북관계를 다분히 의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남북관계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상투적인 문구조차 꺼내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북한 역시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우리 정부도 동일하다. 올해 상반기 내내 지속된 북한의 도발적인 언동과 위협은 우리 정부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어떠한 유화적 움직임도 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다. 비록 정부 차원에서 “항상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대화의 문이 쉽게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남북교역과 교류협력 사업이 위축되고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5.24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교역중단효과는 지난해 2월말로 일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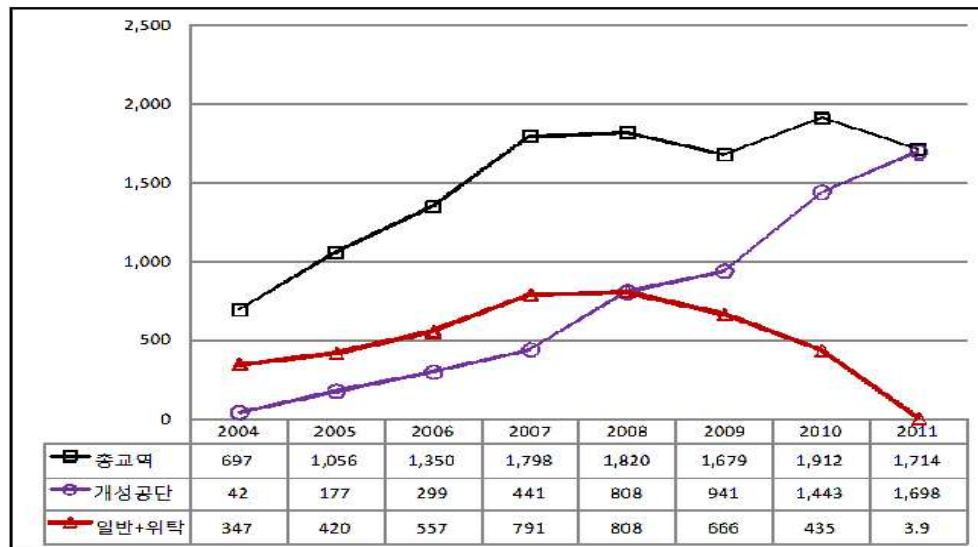
반출입을 허용한 유예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거의 완전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올해 상반기 내내 지속되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있어 위탁가공교역은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일반교역의 경우 단지 소액의 교역실적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역시 몇 건의 대북접촉과 방북승인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남북교역은 오로지 5.24조치에서 예외가 된 개성공단의 교역실적만이 그 전부를 대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II. 2012년 상반기 남북교역 동향: 개성공단 교역이 남북교역의 전부

지난 2011년의 남북교역실적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0년(19억1천2백만달러)에 비해 약 10.4% 감소한 17억1천4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역시 이 수치도 5.24조치가 실행되기 이전인 2009년의 교역실적(16억7천9백만달러)을 넘는 것이었다. 5.24조치에 의해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크게 타격을 받고 거래가 거의 실종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교역실적은 거의 전부가 개성공단의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림 1〉 연도별 유형별 남북교역 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그림 1〉에서 보듯이 실제로 2011년의 개성공단 교역실적은 16억9천8백만 달러로 전체 남북교역액의 약 99.1%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남북교역액은 거의 전부가 5.24조치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의 교역실적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5.24조치의 제재대상이 되었던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2011년도 교역실적은 약 39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 수치는 5.24조치 이전인 2009년의 교역실적 6억6천6백 달러에 비해 무려 99.4%나 감소한 것이다. 다시 말해 5.24조치로 인해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거래가 거의 중단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아래의 〈그림 2〉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을 보면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경우 일시적 반출입이 허용된 유예기간(2010.6.1~2011.2.28)이 끝난 2011년에 거래가 거의 사라졌고 이에 따라 일반교역의 경우 단지 2십만 달러 정도를 그리고 위탁가공교역의 경우도 약 3백7십만 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 연도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추이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올해 상반기에도 이러한 교역패턴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교역실적을 살펴보면 위탁가공교역은 완전히 거래가 실종되었으며, 일반교역도 월별 실적이 7천 달러~2만1천 달러 정도에 그칠 정도로 거의 거래가 실종되었다. 반면 개성공단의 경우 대략 월별로 1억4천만 달러에서 1억6천만 달러 내외의

교역실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교역실적의 99% 이상을 반영하는 수치이다. 즉 개성공단의 교역실적이 전체 남북교역 실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2012년 상반기 유형별 남북교역 추이

(단위: 천달러)

연월	총교역(A)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개성공단(B)	개성공단비율(B/A)
2012.01	143,432	9	0	143,341	99.9
2012.02	150,613	21	0	149,250	99.1
2012.03	164,737	10	0	164,423	99.8
2012.04	143,283	7	0	142,997	99.8
2012.05	168,813	10	0	168,022	99.5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이상에서 보듯이 올해 상반기의 남북교역은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의 실종과 개성공단의 교역실적 확대 지속”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만약 하반기에도 지금과 같은 최악의 남북관계가 지속된다면 올해 상반기에 나타난 이와 같은 교역패턴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고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남과 북의 교역, 즉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의 교역실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Ⅲ. 2012년 상반기 남북교류협력 동향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항상 주장해왔던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북남관계의 개선”이라는 상투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작년에 보였던 북한의 태도와는 매우 상반된 것이었다. 실제로 작년의 경우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간의 대결상태 해소를 강조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으며 비록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남북 당국간의 무조건적인 회담개최’ (2011년 1월 5일)를 제의하였고 이어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2011년 1월 20일)과 ‘백두산 화산 협의’ (2011년 3월 17일)등도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이러한 유화적인 제스처마저도 사라졌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현재의 남북관계를 다분히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북한 입장에서조차 이러한 대결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대화제이가 쉽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명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책임자처벌' 을 전제로 하는 원칙기조의 대북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이러한 전제조건에 대한 어떠한 개선도 없이 무조건적인 대화제의를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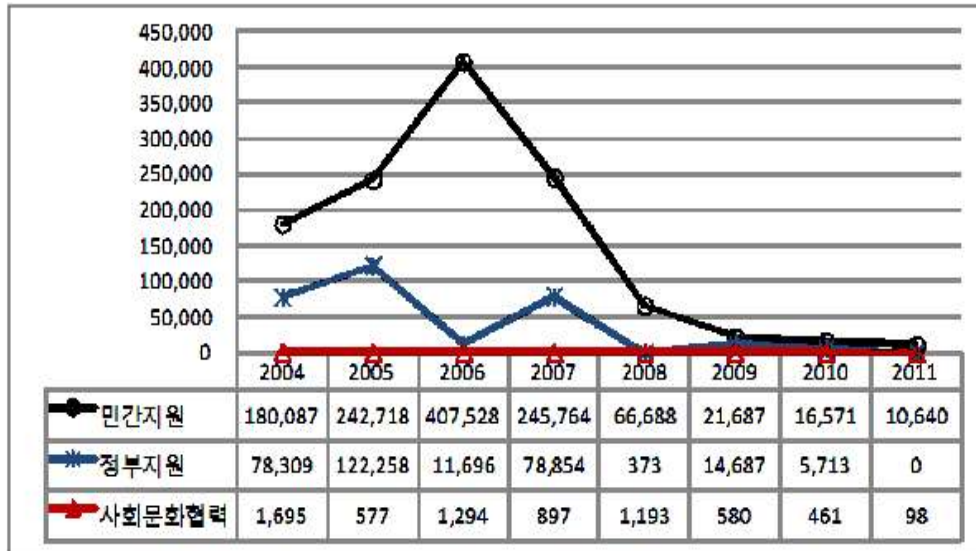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북한은 유례없는 공갈과 협박 등으로 우리 측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올해 초 대통령이 '신년특별국정연설' 을 통해 '핵 활동 중지와 지원' 그리고 '도발가능성과 강력한 대응' 등을 언급한 이후 이를 격하게 비난하였으며 동시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시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비상경계령 등) 등도 '반인륜적 망동' 이라는 표현 등을 동원하며 공격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러한 비난일변도의 공격적인 태도는 이후 2월에 들어서도 통일부 연두업무보고, 대통령의 전방부대 방문 발언, 키 리졸브 훈련, 서해 5도 해상사격훈련 등에 대한 비난으로 계속 이어졌다.

3월에 들어서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3월 26~27일), 탈북자 복송문제, 우리 군의 '대적구호' 문제 등에 대한 비난기조를 계속 이어갔다. 4월에 들어서서는 4.11 총선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난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드러냈으며, 김일성 100돌 행사기간 동안 자신들의 '최고 존엄' 을 모독했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특히 4월 23일에는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통고를 통해 '최고 존엄' 을 모독한 대가로 곧 '특별행동' 이 개시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5월과 6월에 들어서도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도발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는 언급과 한일군사협정과 관련한 움직임에 대해 격한 비난을 퍼부었다.

올해 초부터 상반기 내내 진행된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올해 상반기에는 남북 당국자 간에 어떠한 의미 있는 대화시도는커녕 북한의 비난, 공갈, 협박과 이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 강경대응만이 존재했다고 볼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이미 진행되어 왔고 또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최악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예견된 일이어서 사실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아래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동안 정부의 대북지원 실적은 전혀 없으며 약간의 민간지원 실적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그림 3]과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연도별 대북지원 및 사회문화협력 추이

(단위: 천달러)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표 2〉 2012년 상반기 대북지원 내역

(단위: 천달러)

연도	민간지원		정부지원	
	반입	반출	반입	반출
2012.01	0	81	0	0
2012.02	0	1,341	0	0
2012.03	0	304	0	0
2012.04	0	276	0	0
2012.05	0	781	0	0
소계	0	2,783	0	0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그림 3〉에서 보듯이 대북지원액은 현 정부 출범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에 들어서는 마침내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은 전혀 없으며 단지 민간지원만이 약 278만 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2〉 참조)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간히 14개 종교단체 대북접촉(2012.3.19~4.2)과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 방북(2012년 2월)과 같은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접촉과 방북 승인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었고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언급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인 것들이었다. 5월까지의 인도적 지원액도 단지 약 44억원 정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IV. 결론: 평가와 전망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이어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측의 대북제재(5.24조치)에 의한 남북관계의 단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출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들 예상하는 바와 같이 현 정부 하에서 지난 4년간 유지해 왔던 원칙기조의 대북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하반기에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우리 측이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북한 역시 천안함 폭침 등과 관련하여 그간 부인해왔던 그들의 입장을 거두고 책임있는 사과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현재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남북관계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야기이다.

만약 이러한 예상이 틀리지 않는다면 올해 하반기에도 순수 남북교역(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이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경우 당연히 남북교역 실적의 거의 전부는 5.24조치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의 교역실적만으로 채워질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과 함께 남북경협을 논할 수 있는 것은 개성공단이 유일하므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향후의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당연히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우리 측의 노력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작년 말에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출퇴근도로 보수공사와 소방서 건설공사를 시작한 바 있으며 또한 올해 7월에는 응급의료시설의 건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그간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이고 우리 측도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왔던 사업이므로 남과 북의 당국자 모두 동 사업이 아무런 장애 없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도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인도적 지원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는 5.24조치를 발표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정부지원이 어렵다면 민간지원에 대해서라도 보다 유연하고도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대부분의 민간지원 사업은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많고, 액수도 적으며 또한 대부분이 현물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군사용으로의 전환' 등 안보를 이유로 하는 일각의 비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한편 5.24조치로 인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미 정부는 남북교역 및 경협기업들을 대상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2차례에 걸쳐 특별대출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5월 현재 약 214개 기업에게 546억원을 지원하였다. 2번째 특별대출은 올해 1월부터 시작하여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므로 피해기업은 자구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지원제도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 논문

북한의 주택시장에 관한 연구: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은이

북한의 주택시장에 관한 연구: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은이 | 경상대학교 | eunlee7512@daum.net

I. 들어가며

이 논문은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주택거래가격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의 주택구입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주택시장의 형성이 북한주민의 삶에 있어서, 나아가 체제이행에 있어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사실 북한에서의 주택거래는 불법이지만 오래전부터 비공식적으로 행해져 왔다.¹⁾ 심지어 1980년대부터 이미 기관·기업소 단위가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여 개인에게 분배하기도 하였다.²⁾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주택시장의 맹아는 1990년 이전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택매매의 관행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시장이 팽창하고, 개인의 부가 급증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급격히 확산되었다. 현재는 기관단위뿐만 아니라 개인단위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사례까지도 생겨났으며 부동산중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 ‘네프(テコ)’ 까지 등장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북한에서 ‘시장(market)’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비재의 범위가 비내구재에서 내구재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주민들이 가용할 수 있는 유동(flow)자본의 크기도 커졌음을 의미한다.

과거 20년간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1998년 이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다가 1999년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뒤 꾸준히 1~3%

1) 이에 관해서는 최진이 편, “주택거래와 그 부정부패의 내막,” 『림진강』, 서울: 림진강출판사, 2008년 8월 제 3호 참조.
2) 이에 관해서는 윤웅, 『북한의 지리여행』, 서울: 문예산책, 1995 참조.

대의 성장률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경기호전 현상은 거시적 통계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소비구조의 변화를 통해서도 미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 결과, 1990년대 북한주민의 삶은 대부분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절박한 수준이었다.³⁾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컬러TV, 랭동기(냉장고), 녹화기(녹음기), 세탁기 등 전기·전자제품을 소유한 소비계층이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전거를 비롯한 오토바이가 주민들의 이동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거주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살던 집을 개조하는 등 이른바

‘집수리(remodeling)’ 붐이 일고 있다. 그 중에는 더 나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투자하는 소비계층도 생겨났다. 바꿔 말하면 2000년 이후 북한주민들 중에는 ‘먹는(食) 문제’와 ‘입는(衣) 문제’를 넘어서 ‘주거(住)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생활수준이 향상된 소비계층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구조의 고도화는 이른바 소비자구매력(consumer purchasing power) 향상과 가처분소득(disposal income)의 증대를 뒷받침한다. 사실 배급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에는 국가가 주민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배급이외에 충분히 지불하지 않았다. 즉 국가는 국민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일종의 세금처럼 무상으로 흡수하여 개인들은 사유재산축적이 어려웠다. 주민 간의 경제적 격차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배급체계가 마비되고 공장가동률이 저하되자 유희노동력이 대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시장 활동이 활발해 지고, 시장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그대로 개인에게 재분배되면서 구매력을 가진 주민계층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지역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서 더 비싼 값으로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이른바 ‘되거리장사’의 행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부를 축적한 상인계층이 등장하고, 부의 재분배 현상이 발생함과 동시에 빈부 격차가 확산되었다.⁴⁾

그러므로 북한의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북한의 체제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주택시장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주택이 매매되는 현상, 엄밀히 말하면 입사증이 매매되는 경제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지역 또한 함경북도의 무산 읍과 그 주변지역에 한정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접근의 용이성 때문이다. 탈북자 대부분은 무산, 회령 등 북·중 접경지역의 출신이다. 게다가 이들은 가족, 친지들과 상시 통신연락을 취하고 있어 최근 북한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재중조선인, 북한 화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리적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인터뷰 조사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영상자료도 상대적으로

3)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 결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심지어 인육(人肉)을 먹다가 발각되어 총살당한 사례가 적지 않게 조사되었다.
4) 이에 관해서는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 발전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9 참조.

풍부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접근의 용이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범위를 무산 읍과 그 주변지역에 한정한다.(사진 1참조)

본 연구가 무산지역의 주택시장 실태를 분석하게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 4가지이다. 위성자료, 공간문헌자료, 탈북자인터뷰조사, 북한내부영상자료이다. ‘연고자’는 남한과 북한, 중국과 북한 양측에 離散(이산)되어 북한 측의 가족 등을 부양하는 상황인 일종의 디아포라스(Diaspora)로, 이들은 전화 등을 통하여 북한 내외부와 실시간 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혈연관계자이다. ‘연고자활용법’은 연고자가 주체가 되어 북 내부 상황을 조사·분석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고자활용법을 적극 수용하여 이들이 수집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여기에 북·중 접경조사를 더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인의 시각을 북한연구에 적용하여 연구의 정밀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북한당국이 발행한 공간문헌자료로 『조선관광지도첩』, 『조선지리서』, 『조선공업지리서』 및 『조선향토대백과』 및 최신북한 지도 등 지도나 사진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자료들을 상호 교차분석·검증하여 각각의 자료가 가지는 한계성을 보완·보충하고자 하였다.

(사진 1) 무산 읍 및 주변 노동지구



출처: Google Earth, 필자 정은이 검색

II. 구역별 주택거래가격 실태

함경북도 무산군 출신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무산지역의 주택거래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산군의 주택거래가격은 무산 읍, 삼봉노동자구, 논급, 남산 덕, 호곡, 주초노동자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 무산 읍

무산 읍은 함경북도 무산군 1읍 6구 15리의 하나로 무산군 북쪽 두만강연안에 위치한 군소재지이다.⁵⁾ 북쪽은 칠성리·새골리, 동쪽은 남산로동자구, 남쪽은 독소리, 서쪽은 삼봉로동자구 및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동북지방과 접해있으며 삼봉로동자구·남산로동자구와 연결되어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다. 무산 읍의 주택거래가격은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낮게 조사되었다.

가. 아파트 가격

읍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집은 읍 중심부에 입지한 공로자아파트로 최고 7,000달러(미화)에서 최저 4,500달러로 조사되었다.⁶⁾ 이 아파트는 90, 91년에 무산광산주택사업소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베란다 및 화장실, 목욕탕은 물론 ‘전실’이라 불리는 거실까지 구비되어 있어 읍에서는 최고급아파트로 분류되었다.⁷⁾ Google Earth에서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는 각각 7층과 5층 건물로 7층은 1개 단지, 5층은 4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었다.(사진 2참조) 이 아파트는 다시 면적과 층수, 집수리(리모델링) 여부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차이가 발생하였다.

우선 방의 칸수에 따라 가격차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7층 공로자아파트는 한 층에 4세대가 거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중 1세대만이 방 3칸짜리로 나머지 3세대는 방 2칸짜리 구조이다. 따라서 방 2칸짜리 아파트는 방 3칸짜리 아파트보다 500달러정도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층수에 따라서도 가격차가 발생하였다. 공로자아파트는 읍에서 최고급 아파트에 속하지만 엘리베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꼭대기 층에 대한 선호가 낮아 꼭대기 층은 3, 4, 5층에 비해 500달러정도 낮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단지 내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된 층은 1층이었다. 원래 이곳은 국영식당자리였으나 경영악화로 인하여 거주지로 개조하면

5)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편 『조선항토대백과』,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6, p.35.

6) 이 아파트는 무산광산 학산지들에게 공급하려고 무산광산에서 지은 것이다.

7) 전실은 문 가까이 있는 방으로 전실이 있으면 특별히 좋은 집이다.

서 세대수를 8세대로 늘렸다. 즉 1층은 한 가구당 점유면적이 좁다. 더욱이 소음, 안전, 위생 등의 문제로 주민선호도가 낮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1층은 큰 도로와 접해있으며 세관으로 가는 버스정류장이 이 도로변에 있어 매점을 운영하기에 좋은 입지조건이다.⁸⁾ 그러므로 1층은 이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인 4~4,500달러 선에 거래되었으나 읍에서는 비교적 높은 가격에 속했다. 한편, 5층 공로자아파트는 7층 공로자아파트의 방 2칸짜리와 구조가 유사하지만 면적은 훨씬 작았다. 이는 Google Earth를 통해 건물 위쪽의 면적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사진 2참조) 따라서 5층 공로자아파트는 7층 공로자아파트보다 1,000달러 정도 낮게 거래되었다. 그 외에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서도 집값이 달라졌다. 결국, 공로자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집은 3, 4, 5층에 위치하면서도 3칸짜리 방의 구조를 가지고 리모델링이 완비된 7층 공로자아파트로 7,000달러에 거래되었다.

(사진 2) 무산 읍 소재층 5층 공로자 아파트와 5층 벽돌 아파트



출처: Google Earth. 필자 정은이 검색

8) 여기서 매점은 이른바 구멍가게와 비슷하다. 여기서는 담배, 과일, 과자 이외에 두부, 밥과 같이 휴대할 수 있는 음식도 판매하고 있다. 시장의 경우 가장 시장이 정해져 있으나 매점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어 거주민들에게 일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로자아파트 바로 옆에 입지한 5층 벽돌아파트는 공로자아파트와 같은 위치에 입지해 있지만 공로자아파트보다 3배가량 낮은 2,500달러 선에서 거래되었다.⁹⁾ 그 이유는 벽돌아파트는 공로자아파트에 비해 10년 앞서 지었으며, 명목상 아파트지만 실질적으로는 2, 30가구를 연속적으로 이어 지은 하모니카 땅집과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¹⁰⁾ 다시 말하면 공로자아파트는 건물양식이 탑식으로 높게 지어졌다.(사진 2참조)

즉 한 층에 4세대만이 거주하여 한 개의 복도를 두고 4세대만이 공유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벽돌아파트는 가로가 상당히 긴 하모니카 형태로 지어져 한 층에 2, 30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한 개의 복도를 두고 2, 30세대가 공유하는 형태로 개인사생활 보장이 어려운 구조다.

이와 같이 읍지역의 아파트는 벽돌아파트와 같이 일반적으로 건축 양식 및 지어진 시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2,500달러 선에서 거래되었다. 단 방의 칸수가 하나씩 작아질 때마다 거래가격이 500달러 정도 낮아졌다.

나. 땅집 가격

읍 지역의 땅집은 하모니카 형태로 한 동(棟)에 8가구가 살았지만 많게는 12가구, 적게는 2, 4가구가 연결 지어 살고 있었다.¹¹⁾ 일반적으로 한 가구당 점유면적은 가로 4m, 세로 7m로 총 28m²다. 집 구조는 창문과 출입문이 각각 하나씩 있고 출입문을 열자마자 작은 복도와 함께 부엌이 있으며, 미닫이 형식의 칸막이나 커튼을 이용하여 옷방과 아랫방을 구분 짓고 있었다. 화장실은 옥외에 있으며 집집마다 창고가 하나씩 있고 약간의 텃밭과 사방으로 공간이 있으나 삼봉지역과 비교하여 상당히 밀집된 구조지만 집값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먼저 읍 중심부에 입지한 땅집은 방의 칸수에 따라서 500달러정도 차이가 났으나 일반적으로 2,500달러 선에서 거래되었으며 읍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낮아졌다. 예를 들면 읍 중심지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져 삼봉과 가까운 지역의 땅집은 원래 일제식민지시기 일꾼을 감독하던 십장(什長)이 살던 구역으로 현재도 일본식 잔재가 남아있다.¹²⁾ 거주민 또한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사는 토착민이 대부분이며 그 중 3~40%가 중국연고자다. 이 지역의 집은 일제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집들로 애초부터 십장들을 상대로 지어 비교적 넓다. 1세대 당 주거 면적이

9) 빨간 벽돌로 지어져 '벽돌아파트'라 불린다.

10) 하모니카는 직사각형의 틀에 조그마한 칸을 여러 개 만들고, 칸마다 쇠붙이 세를 끼워 만든 작은 관악기다. 일반주민들이 거주하는 땅집은 바로 이러한 하모니카 모양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집은 보통 통간(통채)으로 쓴다. 보통 4명 정도가 살지만 간혹 부모세대와 함께 사는 집들이 있다. 그럴 경우 칸막이를 아예 벽으로 만들어 출입문과 부엌을 따로 내어서 쓴다. 남에게 세를 줄 경우에는 "1년에 얼마" 하고 빌려준다. 이 아파트는 옷방, 아랫방 등 방 2칸에 부엌이 하나, 문(門) 하나로 복도도 없으며 문 열면 바로 방이 보이는 구조다.(탈북자 K씨)

11) 즉 하나의 지붕(棟)에 몇 세대가 사느냐에 따라 한 동 8세대 또는 한 동 12세대 등으로 구분된다.

12) 울타리를 참대로 만든 집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사가(街)의 획을 구분하는 명칭 '가(街)'를 여전히 일본어 '정목(丁目:초우메)'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탈북자 R씨)

약 30㎡ 내지 35㎡로 읍 중심부의 집들보다 훨씬 넓다. 더욱이 1동에 4세대 내지 6세대만이 거주하는 집이 많아 사방으로 공간도 넉넉하고 텃밭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제식민지시대 중심지였던 만큼 집이 언덕에 지어져 배수체계가 양호하며 주요 도로와도 잘 연결되어 있어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¹³⁾ 그러나 이 지역의 주택가격은 읍 중심부보다 500달러정도 낮은 미화 2,000달러에 거래되었다. 물론 읍과의 근접여부에 따라 300\$정도 가격차가 벌어졌다. 한편 읍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읍 협동농장주변의 농장세대가 밀집되어 사는 땅집들은 십장들이 살던 지역과 같이 2,000달러에서 거래되었다. 읍 중심부와 가격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낮다. 무엇보다 주요 도로와의 연계가 좋지 못하고 도로가 불규칙하여 집까지 짐 운반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땅집의 경우 거래가격이 아파트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꼭대기 층은 땅집보다 싸다. 그 원인은 짐 운반과 관련 있다. 북한은 아파트 창고에 빨감을 비롯하여 부식물을 저장해 놓는데 고층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운반하기 어렵다. 게다가 땅집은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창고가 있지만 아파트는 실외에 있어 도난위험이 높다. 그러나 무엇보다 땅집이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는 공간 활용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무산 읍에서 두드러지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집이 있었다. 예를 들면 보위부정치부장, 보위부반탐과장, 배전부 소장, 무산군 국경경비대 대대보위부장이다. 이러한 집들은 Google Earth에서 확인한 결과, 한 동에 8세대가 들어서야 할 부지에 한 동 2세대 또는 독집을 새로 짓고 살고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집들은 주택부지 이외에도 사방으로 넓은 텃밭과 공간이 있어 상당히 여유가 있었다. 또한 옆집과의 경계를 대문과 높은 울타리를 만들어 구분 짓고 있어 사생활 보장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들도 읍에서 가장 비싼 7층 공로자 아파트와 같은 가격인 미화 7,000\$의 선에서 거래되었다. 또한 읍과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무산군청년공원 입구에 새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가구들이 있었다. 이 집들은 주로 외화벌이를 하여 돈을 번 계층들이 사는 곳으로 한 동에 2세대로 총 10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이곳의 집들은 사방으로 넓은 텃밭을 가지고 있으며 사방이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집들 또한 읍 중심지와는 약간 멀지만 미화 7000달러로 높게 거래되고 있었다.

13) 이곳이 일제식민지시기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인프라시설로는 바로 역사가 있다. 무산군 철로는 무산선과 백무선의 종점을 이루며, 여기에 무산역이 설치되어 있다. 무산 역은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 읍의 동남쪽에 있는 기차정거장으로 무산선철도가 통과하고 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편 『조선항토대백과』,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p.35.

2. 삼봉 노동자구

삼봉노동자구는 무산군의 북쪽 두만강 기슭에 있는 노동자구로 전반적으로 산지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3개의 산봉우리를 끼고 있어 '삼봉노동자구' 라고 하였다.¹⁴⁾ 남부는 삼봉이 솟아 있고 동쪽과 북쪽은 무산 읍, 남쪽은 독소리, 서쪽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동북지방과 마주보고 있다. 조사결과, 이 지역은 지형별로 독소리와 가까운 삼봉지역과 두만강과 인접한 호곡 등 2개 지역으로 나누어지며 주택가격 또한 구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 삼봉구역

삼봉은 십장들이 살던 읍지역과 함께 일제식민지시대부터 형성된 마을로 주민구성 또한 토착민과 중국 연고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곳의 집은 십장(什長)들이 살던 구역과는 달리 애초부터 광산노동자를 겨냥하여 지은 집이라 하모니카형태의 땅집이 대부분이며 좁고 허술하게 지어져 한때는 '함바' 라고도 불리었다.¹⁵⁾ 집 구조 또한 세로가 길게 지어졌으며 창문이 뒤에 하나밖에 달려 있지 않아 채광이 좋지 못하고 어둠 킁킁하여 '기차굴집' 이라고도 불리었다. 뿐만 아니라 삼봉은 무산군의 남쪽 독소리와 인접하여 도시보다는 농촌과 가까운 지역이다. 바꿔 말하면 삼봉구역은 읍 중심부와 떨어져 있으며 중심도로와 멀어 읍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또한 직장인 무산광산과의 거리가 읍 지역에 비해 멀어 출퇴근 거리가 오래 걸린다. 그러나 한편으로 집 면적은 읍 지역보다는 약간 넓은 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집은 십장이 살던 구역보다 500달러정도 낮은 미화 1500달러에 거래되었다. 물론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에 따라 가격이 300달러정도 차이가 났다.

나. 호곡지역

호곡은 무산 읍 서쪽 두만강의 경계에 형성된 마을로 원래 범이 자주 내려오던 굽이진 곳이어서 예부터 '호곡(虎谷)마을' 이라 불리었을 정도로 외딴 곳이었다.¹⁶⁾ 일제 식민지시대에도 이곳은 수림(樹林)이 무성하여 공동묘지자리로 쓰였다. 더욱이 두만강과 접해 있어 읍 지역의 십장들이 살던 지역과 비교하면 지대가 낮아 비가 오면 침수되기 쉽다. 바꿔 말하면 이 지역은

14)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편 『조선항토대백과』,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p.40.

15) 함바는 일본어 飯塚(はんづか)에서 비롯된 말로 토목 공사장이나 광산 등에 있는 노무자 합숙소를 일컫는다.

16)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편 『조선항토대백과』,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p.40.

원래부터 주택지로서 부적합한 곳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북한당국이 광산개발을 본격화 하면서 필요 노동력을 외지로부터 유입시켜 대거 광산에 투입하자 주민들의 주거지가 무산읍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팽창하였다. 호곡지역 또한 이 시기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신생지역이다. 이때 평양 등지에서 추방된 소개민 광산노동자들의 주택문제가 대두되자 북한당국은 공동묘지자리까지 밀고 호곡지역을 주택지로 급조하여 날림식으로 임시주택을 건설하였다. 특히 호곡지구는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다. Google Earth에 입각하여 호곡지구의 집들을 면밀히 관찰하면 이 지역은 한 가구당 점유 면적이 가로 4m, 세로 8m로 총 32㎡로 다른 지역의 집과 면적이 비슷하지만 한 동에 12세대 심지어 동거 등으로 인하여 2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집도 많으며 텃밭 등은 생각할 수 없으며 여유 있는 땅이 전혀 없어 이웃집과의 간격이 상당히 좁다. 따라서 호곡지구는 조사대상 지역 중 주택거래가격이 가장 최저수준이었다. 특히 광산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호곡천세대(千世帶)’라 불리는 지역에서 이러한 특징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곳은 특히 텃밭이나 사방으로 공간이 거의 없이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빈민촌으로 분류되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 지역은 밀수가 성행하였으며 중국으로 넘어가기 쉬운 여성의 70%가 탈북을 하여 ‘홀애비촌’이라고도 불리었을 정도로 빈집이 많이 존재했다. 이 지역은 주민구성이 대부분 외지인들로 연고가 없거나 막 결혼한 가난한 신혼부부들이 살았다. 특히 아이들은 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 특히 직장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어서 고난의 행군 이후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은 미화 300달러 내지 500\$ 수준에 거래되었다.

3. 남산노동자구

남산노동자구는 무산군의 서쪽에 있는 노동자구로 남산을 끼고 있어 남산로동자구라 하였다.¹⁷⁾ 동쪽은 창렬로동자구, 북쪽은 칠성리, 남쪽은 독소리, 서쪽은 무산읍과 접해 있으며 무산시장과 접한 큰 도로를 경계로 읍과 분리된다. 조사결과, 이 지역은 형성시기에 따라 논밭과 남산 덕 등 2개 구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주택가격 또한 구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가. 논밭지역

논밭은 남산로동자구의 중심에 있는 마을로 군에서 처음으로 논농사를 지었다 하여 ‘논밭마을’

17) 함경북도 무산군 남산로동자구의 서쪽에 있는 산 해발 734m 무산읍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읍과 2km정도 떨어져 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편 『조선왕토대백과』,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p.37.

이라 하였다.¹⁸⁾ 바꿔 말하면 논밭은 원래 농촌지역이었으나 1960년대 초 무산광산개발과 함께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거주지가 외곽으로 팽창하면서 노동자구역으로 새롭게 형성된 지역이다. 이때 논밭으로 유입된 인구는 주로 평양 등지에서 추방된 소개민으로 무산광산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지은 집이라 주택은 하모니카 임시주택으로 뻑뻑이 지어졌다. 가구당 주거 면적이 세로 8m, 가로 3m로 총 24㎡며 사방으로 공간이 거의 없었다. 이는 삼봉보다 훨씬 좁은 구조다. 삼봉의 경우 방 2칸에 부엌하나 딸린 집이라면 논밭은 단칸집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땅집들은 삼봉지구보다 낮은 미화 7~800달러 선에서 거래되었다.

한편 남산노동자구에는 무산군에서 가장 큰 시장이 입지해 있다. 북한에서 시장이 들어서면 일반적으로 그 주변의 집값이 상승한다. 그러나 이곳은 오히려 남산노동자구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우선 이곳이 두만강 지류인 성천수(城川水)와 접해 있기 때문이다.¹⁹⁾ 즉 이곳은 지대가 낮아 장마철이면 성천수가 범람하여 침수되기 쉬운 곳이어서 주택지로서 부적합한 입지다.²⁰⁾ 더욱이 이곳의 집은 날림식으로 지어졌다. 김정일이 무산광산 현지시찰시 철길 옆에 조잡하게 들어선 주택을 보면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강제철거명령을 내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새로 짓게 하였다. 그 여파로 철길 옆에 사는 주민이 대거 무산시장근처로 이주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곳의 집들은 각각의 인민반에게 강제로 떠맡겨 날림식으로 지어졌다. Google Earth 위성자료를 통해 보면 이곳의 집들은 하나의 지붕이 여러 개의 색깔로 구획지어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인터뷰조사 한 결과, 이는 건축자재를 비롯하여 모든 건설을 인민반별로 떠맡아 자력갱생으로 지어 자재가 통일되지 못하기 때문이다.²¹⁾

반면에 논밭의 아파트들은 땅집보다는 높게 거래되었다. 아파트는 주로 큰 도로변에 세워졌다. 이는 김정일의 현지지도와 관련 있다. 김정일은 무산광산 현지지도 시 무산 역에서 내려 차를 타고 논밭에 댄진 큰 도로를 경유하여 광산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이 도로주변의 미관은 상당히 중요하며, 실제로 도로주변의 조잡하게 지어진 살림집들은 김정일의 방침에 따라 철거당하고 새로이 아파트를 건설하였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건축 연도에 따라 주택가격이 2개로 분류된다. 하나는 1980년대 초에 지어진 아파트며 또 다른 하나는 최근 2005년에 건설된 아파트다. 두 아파트간의 외형적 차이는 Google Earth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지붕이 파란색으로 현대식으로 지어 중국에서 수입하여 들여온 자재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주변의 땅집 색과 같아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 Ibid.

19) 성천수(城川水)는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 읍의 동쪽에 있는 강으로 옛 성을 끼고 무산 읍을 감돌아 두만강으로 흘러든다.(Ibid, p.35)

20) 삼 하나로 명을 파면 물이 졸졸 나오는 웅덩이가 많다.

21) 갑자기 강제이주당한 철거민들은 살 터전을 잃어버리자 인민위원회에 와서 매일같이 씨워 광장했다고 한다. 더욱이 철거민을 위해 지어진 집은 온전한 집이 아니었다. 시장 또한 비만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위생상 난리였다.(탈북자 R씨)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읍에 있는 일반 아파트보다 비교적 넓게 지어졌지만 연도가 오래되고 화장실, 전실 등이 없는 관계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보다 1,000달러 낮은 1,500달러에 거래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무산 읍의 5층 공로자아파트와 같은 구조이면서 넓게 지어졌지만 5층 공로자아파트보다 가격차이가 2배 이상 난다. 이는 무엇보다 논굽이라는 가난한 마을에 입지해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모두 자력갱생으로 기관별로 맡아 지었기에 때문에 자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²²⁾ 또한 아파트가 입지한 도로는 중심도로여서 장마당으로 나가는 도로와 무산광산으로 나가는 도로가 연결되어 소음이 굉장히 커서 쾌적하지 못하다.

나. 남산 덕

남산 덕과 논굽은 동서로 길게 뻗은 큰길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리된다.²³⁾ 여기서 논굽은 성천수와 가까워 지대가 낮은 반면에 남산덕은 남산과 접해 있어 경사가 있다. 이는 이 지역을 북한 주민이 부르는 비공식적인 지명 ‘남산 덕’ 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남산 덕에서 ‘덕’ 은 ‘언덕’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원래 발언덕자리로 경사진 협동농장의 자리였지 주택지가 아니었다.²⁴⁾ 1970년대 말 당국의 대대적인 숙청작업과 함께 평양 등지에서 소개민들이 남산지역으로 추방되어 오면서 개발된 곳이다. 70년대 말 추방되어 온 소개민들은 초기 더부살이 등 동거형태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논굽마을의 주민 집에 얹혀살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 건설돌격대가 조직되면서 남산 덕에 살림집을 새로 지어줘 주민들이 올라오게 된 것이다.²⁵⁾ 이곳의 집들은 땅집들로 한 동 4세대 또는 한 동 2세대가 많다. 다시 말하면 남산덕의 집은 논굽의 집보다 거주면적이 넓으며 앞뒤 공간도 있고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다. 또한 남산에 입지해 있어 소토지와와의 접근성도 좋다. 그러나 이곳의 집은 논굽보다 가격이 낮은 7, 8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남산덕은 비탈지고 높은 곳에 지어져 물류의 운반이 어렵다. 따라서 시장과의 접근성이 논굽지역보다 어렵다. 더욱이 이곳은 도로가 없다. 외길뿐이다. 최근에는 공동묘지까지 크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곳의 주민들은 외지인들로 광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으며 간부들은 잘 살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주요 생계수단이 시장 보다는 가축 또는 소토지에 의존하여 사는 주민이 많다.

22) 무산지역 출신 탈북자에 의하면 이 아파트는 자재가 부족하고 기관단위가 자력갱생으로 지어 건축한 지 4년 만에야 겨우 완공되었다.

23) 이 도로는 무산광산과 연결된다.

24) 발언덕은 발으로 되어 있는 언덕을 의미한다.

25) 이 아파트는 돌격대가 조직되어 1년 반 동안 건설하여 1982년도에 완공되었다.

4. 주초로동자구

주초로동자구는 무산군의 동쪽에 있는 마을로 붉은 색을 띤 풀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주초(朱草)로동자구’ 라고 하였다.²⁶⁾ 동쪽에는 풍산리, 서쪽은 강선로동자구·독소리, 남쪽은 독소리·오봉리, 북쪽은 강선로동자구와 접해 있다. 특히 이곳은 읍과 약 15km 떨어져 조사대상 지역 중 읍과 가장 멀리 떨어져있어 조사대상 지역 중 주택거래가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 아파트

주초로동자구의 주민은 대부분은 호곡이나 남산로동자구역과 같이 외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주초로동자구역은 소개민보다 제대군인들로 이루어져있다. 북한당국은 1970년대 초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무산광산에 초병을 모집하여 898군부대를 만들어 광산에 투입시켰다.²⁷⁾ 탈북자증언에 따르면, 광산로동자가 가장 많을 때는 3만 명 정도였으며 그 중 1만 명이 군인이다. 군인은 징집 당시 무산군 곳곳에 건설된 노동자합숙소에 거주하면서 군인이 아닌 광산로동자로 살았다.²⁸⁾ 그러다가 1984년도 898군대를 해산시키면서 제대군인을 강제로 다시 무산광산에 무리배치(집단배치)시켰다.²⁹⁾ 즉 무산에 눌러 앉힌 것이다. 이때 제대군인들의 주거문제가 부각되었다. 특히 10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결혼적령기에 도달한 제대군인들이 심각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이들의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대 초 주초지역에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주초는 조사대상 지역 중 가장 마지막에 형성된 마을이다.

주초지역에 유일하게 아파트가 하나 있다. 이는 광산 공로자를 위해 지은 선물아파트로 무산 읍의 7층 공로자아파트가 건설된 직후에 지어졌다. 집 구조가 7층 공로자아파트 방 2칸짜리와 동일하다. 따라서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통근철도가 정상 운행될 때만 해도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어 100% 입주상태였다. 특히 이곳은 1980년대 말 김정일이 무산광산 현지도 시 광산에서 나오는 박토처리장을 논급으로 옮길 것을 지시함에 따라 논급 주민들의 거주지를 주초지역으로 옮겨 이곳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물아파트도 건설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맞이하면서 논급 주민들의

26)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편 「조선항토대백과,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6, p.40.

27) 무산군의 형성과정을 보면 무산군은 군 징집을 통해 성장한 도시이다. 따라서 전국의 여러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무산군의 특징이다. 북한당국은 1970년대 초 중공업 우선 경제노선에 따라 무산광산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서 1970년대 중엽 새로운 군부대(898군부대)가 조직되고, 전국의 여러 부분에서 광산 채굴기술자들과 산병을 모집 채용하여 무산군에 거주하게 하였다.

28) 조사결과, 무산군에는 읍을 중심으로 무산광산천명합숙, 무산광산대형차합숙, 호곡합숙 등 4개가 존재하였다.

29)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 결과, 이때 반발이 대단하였다고 한다. 호위국과 특수병종인 경비자격부대를 제외한 모든 제대군인들은 10년 군복무를 마치고도 의무적으로 탄광, 광산, 농장들에 가야 하니 그들의 억울함은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주계획은 무산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배급제가 붕괴되고 철도운행이 전기사정의 악화로 어려워지면서³⁰⁾ 이곳 주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중국으로의 탈북 등 일탈현상이 가장 많았다. 2005년 무산광산에서 새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주었다. 이는 Google Earth를 통해 보이는 아파트 지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빈집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집에서 무산광산현장까지 가려면 약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어 왕복 총 4시간 정도를 하루 출퇴근 시간으로 소비한다.³¹⁾ 더욱이 통근기차의 시간이 하루 3번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 유동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따라서 이 지역 아파트는 조사 대상 지역 중 가장 낮은 가격인 300달러이하로 거래되며 4, 5층은 여전히 비어있다.

나. 땅집

주초지역에서는 아파트와는 달리 땅집이 오히려 빈집이 없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보다는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땅집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생계수단으로 탈북 이외에 텃밭을 가꾸거나 가축을 키우는 방법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곳은 한 동 2세대, 또는 4세대 등 비교적 여유롭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생활하였다. 어떤 가구의 경우 빈집을 자기 집과 연결시켜 외양간과 같이 전문 가축을 키우는 공간으로 개조한 집도 있었다. 그 이외에 이곳 주민 대부분은 소토지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물자 운반이 어려운 아파트보다 땅집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주초지역은 아파트보다 땅집 거래가격이 더 높으며 특히 텃밭의 규모에 따라서 가격차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곳 또한 빈집은 없지만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빈민촌에 속하였다.

III. 주택거래가격 결정요인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조사 결과, 북한에서 주택가격 결정요인은 크게 객관적인 요인과 주관적인요인으로 밝혀졌다. 객관적 요인은 인프라설비와 관련된 것이며 주관적 요인은 등과 같이 개인선호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30) "통근 기차가 전기 사정으로 잘 다니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해요 한 2시간, 잘 먹지도 못하는데 걸어가니 사람들은 출근도 잘 안 해요. 출근차가 아침에 안 뜨면 아예 출근도 안 해요" (탈북자 J씨)
 31) 출근을 하려면 통근기차를 타고 역까지 가서 또 광산 내려가서 또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

1. 인프라 설비

가. 상수도체계

주택지로서 양호한 입지인지를 구분하는 요인의 하나가 상수도체계이다. 조사결과, 무산군에는 수원지가 총 3곳이 있었다. 하나는 남산노동자구에 있으며 성천수의 물을 모아 두었다가 남산노동자구로 보낸다. 또 다른 하나는 읍에서 약간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으며 두만강 물을 모아두었다가 읍을 비롯한 삼봉·호곡 등지로 보낸다. 마지막으로 주초노동자구역에 설치된 수원지로 주초주민에게 공급된다. 따라서 조사결과, 구역 간 수도공급체계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공급여부에 따라서 큰 차이가 2곳에서 발견되었다.

먼저 읍 소재 7층 공로자아파트다. 이 지역은 조사대상 지역 중 상수도공급이 가장 양호한 구역으로 분류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전기공급사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도물 공급시간이 길다. 이곳은 배전소와 인접해 있으며 돈과 권력을 가진 입주민들이 집중되어 있어 배전부소장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돈을 상납하고 전기공급을 받는다.³²⁾ 또한 7층 공로자아파트는 읍 세대와 달리 수원지와 가까워 수도물이 잘 나오며 수질이 우수한 성천강 수원지의 물을 끌어다 사용한다. 반면에 호곡은 수도공급사정이 가장 좋지 못한 곳으로 분류되었다. 수원지와 거리가 가장 멀어 읍·삼봉 등지에서 물을 사용한 다음에야 겨우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90년대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에서는 공장·기업소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전기·수도공급을 중단하는 곳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택사용료납부를 거부하는 세대(世帶)가 늘어나는 동시에 식수를 자체로 해결하는 가구가 급증하였다.³³⁾ 아파트는 자체로 우물을 파서 공동으로 식수를 조달한다. 개인집은 땅에 ‘졸장(개인펌프)’을 박고 직접 손으로 펌프질하여 물이 나오게 하는 설비를 갖추어 식수를 조달한다. 바깥 말하면 주거지로서 적합한 입지는 수도가 잘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졸장이나 우물을 팠을 때 물이 충분히 나오는 지대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시장에서 돈 주고 사와야 하거나 졸장을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조사대상 지역 중 유일하게 호곡만이 ‘졸장’을 박아도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는 7층 공로자 아파트의 주택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호곡지역이 최하로 거래되는 현상을 뒷받침하였다.

32) 두만강 물은 정수가 잘 안되어 수도물에서 지렁이 등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 게다가 중국에서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물이 오염되었다.(탈북자 J 씨)

33) 주택사용료에는 전기, 수도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주택지도원들이 거둔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이 수도, 전기 등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없다고 반발하며 주택사용료를 내지 않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주택지도원을 그만두어야 하는 지도원이 늘고 있다.(탈북자 Q씨)

나. 하수도체계

무산군은 함경산맥의 북서경사면에 해당하므로 북부와 북동부, 남부와 남서부가 높고 두만강 연안으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진다.³⁴⁾ 따라서 무산군의 북쪽 두만강연안에 입지한 무산 읍은 서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진다. 다시 말하면 두만강과 가까워질수록 침수되기 쉬워 주거지로서 부적합한 지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읍의 서쪽에 위치하면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동북 지방과 인접한 호곡은 주거지로서 부적합하다.

조사 결과, 무산 읍 및 삼봉로동자지구는 언덕에 집을 지어 비가와도 자연적으로 빗물이 흘러 내려 배수체계가 양호하였다. 반면에 호곡지구는 두만강과 거의 같은 높이에 위치하여 주거지로서 부적합하다. 특히 ‘호곡천세대’는 두만강과 가장 가까워 장마철이면 강이 범람하여 집까지 물이 차는 경우가 다반사다. 북한은 아파트 부엌에도 아궁이가 있으며 불을 때서 난방 및 취사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구조다. 여름에도 아궁이에 탄을 때서 취사를 한다. 더욱이 냉장시설이 취약하여 부엌이나 창고에 구덩이를 파서 김치 움을 만들어 김치를 보관하고 겨울 내내 부식으로 먹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수체계가 좋지 못하면 난방과 취사는 물론 땅에 묻어둔 김치 움이 물에 동동 떠 부식물 해결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흙 도로가 많아 비가 와서 물이 넘쳐나면 위생상 큰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호곡지역은 도시외곽지역으로 빈민촌으로 분류되었다. 남산구역에 위치한 무산시장 근처 땅집 또한 같은 이유로 주택가격이 최저로 거래되었다. 무산 읍은 두만강과 성천수 사이에 삼각형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성천수는 무산 읍의 동쪽에 있는 강이다. 따라서 무산 읍의 동쪽에 입지하면서 성천수가 관류하는 남산로동자지구의 집들은 성천수와 같은 위치에 있어 침수되기 쉽다.³⁵⁾ 그러나 읍 중심부에 위치한 7층 공로자아파트는 최고급 아파트답게 큰 도로와 접해 있으며 무산지역에서는 유일한 포장도로이다. 또한 비가와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체계가 구비되어 있어 무산 읍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에 입지한 아파트로 분류되었다.

다. 물자운반

무산지역 출신의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조사결과, 북한주민의 삶에서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월동준비다. 여기서 월동준비는 식량을 비롯한 김장, 빨감 등을 구비하는 일이다.³⁶⁾ 그러나 이는 단순히 물자를 구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입한

34) 교육도서출판사 편 『조선지리지전서 함경북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9, p.571.

35)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편 『조선학도대백과』,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p.37.

물자를 집에까지 운반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포장도로가 아닌 흙 도로거나 앞 뒤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뺨뺨이 들어선 집들은 사방으로 여유가 없어 차가 진입하거나 심지어 달구지조차 들어가기 어려운 집은 짐 운반이 어려워 주택거래가격이 낮아진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산로동자구를 들 수 있다. 남산로동자구는 남산 덕과 논굽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남산덕은 논굽보다 집이 비교적 넓게 지어졌다. 앞뒤 공간도 넉넉하여 가축을 키우거나 텃밭을 가꾸어 부수입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남산 덕이 논굽에 비해 주택가격은 낮다. 그 이유는 남산덕의 집은 경사가 있는 언덕에 지어져 물자운반이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접근도 떨어진다. 장사하러 가려면 등짐을 지고 가야 하는데 언덕에서 내려오려면 힘들다. 또한 이곳은 읍으로 나가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으며 구불구불한 임시도로가 몇 개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읍 중심부나 논굽에 가려 해도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³⁷⁾ 협동농장세대들이 거주하는 집들 또한 비교적 넓게 지어졌지만 도로사정이 좋지 못해 물자운반이 어려워 읍 지대의 집들보다 가격이 낮다. 삼봉지역의 집들 또한 도로와의 인접성에 따라서 가격이 300달러 정도 차이가 났다. 이 또한 물건 운반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무엇보다 호국천세대가 빈민촌으로 분류된 것도 이러한 요인과 연관이 높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시장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주민세대가 늘어나면서 물류운반의 편익이 장사이윤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물류를 집까지 옮길 수 있는냐의 여부는 집을 고르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편 아파트의 꼭대기 층이 싼 이유도 바로 물자 운반의 용이성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주초 노동자구의 아파트는 읍에서 가장 비싼 7층 공로자아파트와 구조가 같지만 4, 5층은 비어있다. 이는 주초지역의 주민들이 생계를 소토지나 텃밭에 의존하여 살기 때문이다. 소토지를 개간할 경우 소토지농사와 관련된 물자를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라. 시장과의 인접성

1990년대 북한에서 사실상 배급제가 붕괴된 이후, 시장은 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북한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이동수단이라고 해야 우마차나 자전거 수준이다. 도로 또한 비포장도로가 많아서 북한주민들은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더욱이 1990년대만 해도 공설시장에는 짐 보관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상인들은 시장에 나와 장사를 하기 위해 매일같이 짐을 실어 나르는 고충을 감내해야만 했다.³⁸⁾ 따라서 1990년대

36) 북. 델감·식량·김장 '월동 3중고 3중고'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winter_difficulty-11012010170014.html(검색일 2012.7.9).

37) 길이라고 해야 도로 상태도 좋지 못하며 차 2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달구지조차 들어가기 힘들다. 따라서 운전수가 이곳을 가기 꺼린다.(탈북자 Q&A)

38) 이에 관해서는 정은이, 「북한 공설시장의 외형적 발전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23권 1호, 2001, pp.215~251 참조.

이후 북한에서 시장주변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무산지역의 경우 조사결과,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간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 시장의 입지조건이 주택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1990년대 배급제 붕괴이후 빈민촌으로 전락한 곳이 2곳 있었다.

먼저 호곡지구다. 이곳 주민들은 무산시장에 가기 위해 일단 무산 읍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호곡지구는 낮은 지대인 반면에 무산 읍은 높은 지대다. 즉 시장에 가기위해 호곡주민은 높은 언덕을 하나 더 넘어야 한다. 따라서 거리상 시장이 가까워 보여도 40분내지 1시간 정도의 거리를, 게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도보 또는 자전거로 이동해야 한다. 이는 배급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지조건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아사자뿐만 아니라 탈북자가 가장 많이 속출되어 1990년대 한때는 ‘홀애비촌’ 이라 불리었다. 그런데 주초노동자구는 호곡보다 더 조건이 좋지 않다. 주초노동자구 주민들이 무산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우선 통근기차를 약 1시간정도 타야한다. 여기서 다시 도보로 시장이 있는 남산노동자구까지 가야한다. 즉 시간적 제약이 뒤따른다.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통근철도가 정상 운행될 때는 노동자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배급제가 붕괴되고 철도운행이 마비되면서 이곳 주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되었다. 따라서 주초노동자구는 탈북 등 이탈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 지역으로 호곡지구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며 현재에도 빈집조차 존재한다. 반면에 시장이 입지한 남산노동자구의 집은 집 면적이나 자재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입지에 있어도 빈집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시장과의 접근성 때문이다.

마.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무산지역의 주택거래가격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졌다. 이는 무산군의 도시공간구조가 읍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읍은 군 소재지로서 거리 중심부에 당·행정·경제기관들을 비롯하여 교육·문화기관, 실업 집들과 편의봉사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군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³⁹⁾ 특히 읍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7층 공로자아파트는 우선 읍에서 유일하게 포장되어 있는 큰 도로와 접해있다.(사진 2참조) 이 도로는 다른 주요 도로들과 잘 연결되어 있어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우선 이 도로 앞에는 하루에 한 번 세관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 있다.⁴⁰⁾(사진 2참조) 이는 세관직원들과 중국을 왕래하는 중국연고자들, 중국인(재중조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7층 공로자아파트

39) 교육도서출판사 편 『조선지역전서 함경북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9, p.590.
40) 세관으로 넘어가는 버스 1대가 출발한다. 이 정거장은 출발역인 동시에 종착역으로 1990년대 중엽부터 생겼다.

1층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이 도로는 시장가는 다른 큰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시장까지 도보로 10 내지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또한 무산 역으로 가는 길과도 연결되어 있어 걸어서 15분이면 역에 도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동준비 등 물자운반에 최적의 조건이다. 유치원부터 소학교, 고등중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기관도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⁴¹⁾ 군병원도 10분 거리에 있다.⁴²⁾ 또한 주변에 식당, 문화오락시설 및 공업품상점 등 상권이 발달되어 있다. 목욕, 사우나, 이발, 마사지 등이 가능한 은덕원과 같은 고급 종합 오락시설도 입지해 있다.⁴³⁾ 그 이외에 군보안서, 군 인민위원회, 군당, 군보위부, 읍분주소, 국토관리부 등 공공행정 기관이 있으며 군 은행과 체신소가 있어 관료들의 직장이 가깝다. 반면에 삼봉의 땅집은 읍지구보다 넓게 지어졌으며 텃밭도 있지만 500달러 낮게 거래되었다. 남산노동자구의 논급 아파트 또한 무산 읍 5층 공로자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최근에 지어졌지만 가격이 2배가량 차이가 났다. 특히 호곡이나 주초 등은 이러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빈민촌으로 분류되었다.

바. 쾌적성

2000년 이후 주민 삶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하나가 주거지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쾌적성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쾌적성은 2가지 측면으로 분류된다. 첫째 일조, 풍우, 온도, 습도 등 기상상태를 고려한 자연적 쾌적성이며, 두 번째는 지역 거주자의 직업, 직장, 직위 소득수준을 고려한 사회적 쾌적성이다.

먼저 자연적 쾌적성을 고려한 대표적인 사례가 남향집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읍에서 가장 비싼 7층 공로자아파트는 남향으로 지어졌다. 반면에 습기가 많은 강 근처의 집 대표적인 사례로 두만강과 성천강 근처에 입지한 집들은 주민기피대상 최우선순위에 들었다. 이곳은 비가 오면 강물이 범람하여 살림집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침수되어 위생상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다. 도로 또한 흙 도로여서 길이 지저분해지고 오물도 늘어난다. 기압이 낮을 때에는 앞이 안보일 정도로 연기가 가득하다. 따라서 호곡이나 남산지역 시장근처의 주택거래가격은 최하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읍이나 삼봉은 언덕에 입지하여 좋은 주거지로 분류되었으며 주택가격 조사대상

41) 무산 읍 소학교, 성천남중 무산여중, 무산남중, 성천남중 등이 있다.

42) 조사대상지역에는 군 인민병원과 무산광산산업병원 등이 있으며 진료과, 요양소와 보양소가 설치되어 있다.

43) 은덕원이라는 명칭은 김정일 위원장의 은덕을 기리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으로, 단순한 목욕탕이라기보다는 종합편의시설이다. 즉 목욕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1층에는 남녀 목욕탕과 가족탕, 독탕이 있으며 2층에는 이발소와 미용실이 있고, 3층에는 오락실과 체육시설이 있다. 은덕원이 있으면 부자동네임을 의미한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편 『조선통토태백과,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p.36.

지역 중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지역에 속하였다. 특히 7층 공로자아파트는 큰길에 접해 있으며 이곳에 빗물이나 가정에서 버리는 더러운 물이 흘러가도록 상하수도설비를 잘 해 놓았다. 무엇보다 이 아파트단지가 고급아파트로 분류되는 이유는 읍에서 유일하게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 철마다 꽃이 핀 공원과 같은 편안함과 쾌적함을 주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변은 잔디를 심어 놓았으며 옆에 학생소년회관⁴⁴⁾이 있어 주민들은 이곳의 공터를 공원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 상당히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⁴⁵⁾

한편 주거환경에 대한 쾌적성이 주택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서 자금력 있는 수요자들이 도심보다는 산이나 숲 등 녹지공간이 보이는 조망 권을 가진 전원 주택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이러한 현상이 제한적이지만 북한에서도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무산군청년공원 입구역간 높은 지대에 한 동 2세대로 총 10세대가 새로 지어서 살고 있다. 이곳은 외화벌이에 종사하는 계층이 사는 집으로 사방이 텃밭으로 쾌적하다.

이에 따라 무산과 같이 밀집된 지역에서조차 소득별로 지역 내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7층 공로자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호곡지구에 가기를 꺼려한다. 다음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호곡지역은 1년에 한 번도 안 간다. 7층 공로자아파트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낸다. 식생활, 의생활도 다 다르다. 이곳 아이들 옷 입는 것을 보면 확실히 다르다. 이곳 지역의 아이들은 호곡지역 아이들을 무시한다. 호곡지역에 가면 너무 어지럽고 비만 오면 진흙탕길이다. 발을 들여놓기도 싫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전거가 다 다 망가지고 신발이 진흙탕 길에 푹 빠진다. 큰 길에 물이 고여 있어 굉장하다. 그러나 7층 공로자아파트는 배수로가 잘 갖추어져 있어 비가와도 쾌적하다. 호곡지역의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적응이 되지 않아 몸 둘 바를 몰라 한다. 집에 초대해도 구석으로만 간다. 19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호곡지역은 굉장했다. 정말 많은 죽어나가고 여자들이 중국으로 많이 건너가 홀애비촌이라고 했다.”

2. 개인 선호: 주관적 요인

가. 주거면적

집이 크면 쾌적할 뿐만 아니라 텃밭 등과 같은 공간 활용도가 높아 수익창출의 기회가

44) 무산군 무산 읍에 있는 소년회관은 무산군내의 소학교, 중학교 학생소년들의 과외·문화 활동장소이다. 건축면적이 4000㎡로서 회관 내에는 과학 기술소조, 체육소조, 예술소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계산기실, 홀과 강의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ibid, p.28)

45) 이곳에서 주민들은 배드민턴 등 운동도 할 수 있으며 공원처럼 공지가 넓다.

넓어지고 개인사생활 보장이 잘 되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집 면적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7층 공로자아파트와 5층 공로자아파트는 집 내부구조가 동일하지만 가격차이가 1000달러이상 나는 이유는 바로 면적에 있다. 전자가 후자보다 30㎡가량 넓기 때문이다. 읍 소재 아파트의 경우 방이 2칸이나 1칸이나에 따라서 500달러 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삼봉과 논곶의 사례에서도 동일하다. 삼봉은 방 2칸짜리 집이 많지만 논곶은 대부분 방 한 칸짜리로 조밀하게 지어졌다. 따라서 삼봉은 논곶보다 주택이 500달러 정도 비싸다. 한편 보위부정치부장, 보위부반탐과장, 배전부소장 및 외화벌이에 종사하는 주민이 사는 집은 땅집이지만 읍에서 가장 비싼 7층 공로자아파트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한 동에 8세대, 심지어 20세대가 살아야 할 공간에 한 동 2세대, 또는 독집을 짓고 여유롭게 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들은 담장도 높게 세우고 대문을 달아 이웃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사생활보장도 가능하였다.⁴⁶⁾ 또한 텃밭도 넓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호곡의 경우 주거면적 뿐만 아니라 앞 뒤 공간도 거의 없다. 특히 호곡천세대는 좁은 공간에 천세대가 밀집되어 살고 있어 텃밭은 물론 생각하기 어려우며 옷집과의 간격도 너무 조밀하여 개인사생활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한 동에 10세대가 거주할 경우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집을 가기 위해 9세대의 집을 모두 거친 뒤에야 도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모든 사생활이 노출되며 더운 여름에 문도 열어놓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후 주거환경으로서 상당히 좋지 못한 조건이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은 배급이 아닌 시장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모두 불법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지만 호곡과 같이 조밀하게 지어진 집의 경우 의식주가 모두 노출되어 버려 개인사생활보장이 취약하다. 따라서 호곡은 최하가격으로 거래되었다.

나. 집의 구조 및 리모델링 여부

예를 들면 무산 읍에서 7층 공로자아파트가 가격이 높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집 구조에 있다. 이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화장실은 물론 읍에서는 유일하게 전실이라 불리는 거실까지 있으며 베란다만 해도 4개나 된다. 논곶 아파트도 2개의 부류로 나누어져 가격차이가 1,000달러 이상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한편 아파트보다 땅집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주초노동자구의 사례이다.

46) 최근에 너도 나도 담장을 높게 하니 담장을 150미터로 통일하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내려졌다. 그 만큼 담장을 높게 하는 것은 이제 북한주민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주초노동자구의 경우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텃밭을 가꾸거나 가축을 키워야만 살아갈 수 있다. 더욱이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은 소토지에 의존하여 살기 때문에 비료를 비롯하여 소토지를 개간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이동하기에 편해야 하며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 운반이 편해야 한다. 물동을 나르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아파트보다는 넓은 텃밭과 공터를 가진 집을 선호한다. 따라서 주초지역의 경우, 아파트는 빈집이 존재하지만 땅집은 빈집이 없다. 또한 거래 가격도 조사대상 지역 중 가장 최하였으나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땅집이 더 높게 거래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에서 살림집은 대체로 획일적이다. 집 크기만 다를 뿐 구조는 거의 유사하다. 특히 무산은 광산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살며 애초부터 광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집을 지어 구조가 더욱 획일적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최근 무산군에서는 밀수, 장사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상인계층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서 집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들 사이에 집수리 붐(리모델링붐)이 불었다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 배급제가 붕괴되었을 때 아사자와 탈북자가 속출했던 상황과는 다른 현상으로 그 만큼 경제적 부의 증가로 개인의 수요가 다양해졌음을 뒷받침한다. 바꿔 말하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이 그 만큼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집수리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자재를 모두 개인이 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조달한다. 특히 무산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접경도시로 중국을 통해 주민들의 잠재된 수요를 끌어내고 있다. 2000년 이후 무산시장에 나온 상품은 1990년대와 비해 다양해졌다. 그 중 유리를 비롯하여 집수리와 관련된 제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모두 외화벌이회사 또는 개인 보파리상을 통해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이들은 주민의 수요를 잘 읽어야만 자원을 축적할 수 있다. 심지어 지금은 중국에서 자물쇠와 함께 대문까지도 세트 수입된다. 이는 약 150달러 정도에 팔린다. 이 대문은 도난 방지뿐만 아니라 부의 상징이 되었다 그 만큼 북한주민에게 집을 개조하는 일은 중요하게 되었다.

다음은 집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집을 개조한다는 것은 부엌을 개조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아궁이 등 부엌의 벽과 바닥 등을 모두 흙이나 세면으로 발랐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떼어내고 타일을 붙인다. 또한 기존의 나무식장(찬장)은 위생상 좋지 못하므로 모두 떼어내고 안이 흰히 보이도록 유리로 다시 만들어 붙인다. 신발을 벗는 곳도 타일로 새로 붙인다. 기존의 나무로 된 창문을 다 떼어내고 남한과 같이 샷시로 한다 모두 중국산이다. 거실 벽면에도 큰 거울을 붙였다. 레자(바닥

장판), 타일, 미장질을 위해 15일 정도 노동력을 고용한다.”

그러므로 집 리모델링 비용이 주택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무산 읍의 경우, 조사결과 80%이상이 집 리모델링을 하였다. 특히 상류층의 경우 손님을 집으로 데려와 접대를 하는 문화가 일반적이어서 집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이 된다.

다. 인민반장, 보위부·보안원의 성향

북한은 2~30개의 가구가 1개의 인민반을 이루고, 인민반 4~60개가 한개 동(洞)이고 동이 모여서 시·군·구역 인민위원회를 만든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1개가 1개의 인민반이지만 1개의 층에 세대수가 많을 경우 1층이 1개의 인민반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이러한 인민반을 감시기구로 이용한다. 따라서 인민반장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들의 감시자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민반장은 언제든지 담당 가구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인민반제도는 말단감시체계지만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충성심이 인정되고 재능이 뛰어나도 동 인민반장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동 인민반생활을 근거로 내세워 출세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집을 고르는데 인민반장 및 해당 관할 구역 보위부 보안원의 성향은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민반장들과 주민들과의 사적 결탁관계가 많이 이루어진다. 심지어는 담당 거주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동 보위원이나 보안원, 당일꾼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요인이 빈부격차를 더욱 가속화 시킨다.

IV. 결론: 지속발전 가능성과 함의

이상으로 무산지역에서의 주택가격분석결과, 주택 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은 크게 객관적인 요인과 주관적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객관적인 요인은 주로 인프라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공공행정기관, 시장, 역전, 학교, 문화오락서비스, 음식점 등 편익시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이 주를 이루었다. 주관적인 요인으로는 개인선호와 관련된 것으로 집의 형태와 구조, 크기, 리모델링의 여부, 텃밭의 여부, 이웃과의 관계, 인민반장, 보안원, 보위부의 특징, 개인사생활 보장 정도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되었다. 즉 북한에서의 주택가격은 보편적 요인과 특수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볼 때 북한 주민의 삶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오히려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집 리모델링분이 불고 있으며, 지금까지 금지된 이층양옥집을 짓고 있다. 즉 주민들의 관심이 식(食), 의(衣)에서 이제는 주(住)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북한에서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계층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는 현재 빈부격차가 일반주민의 수준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개인 간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내 분화를 심화시키며, 심지어 개인 간의 의식격차까지도 발생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계층별로도 주거지를 달리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무산 읍에는 주요 간부나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논밭이나 호곡, 주초 노동자구에는 가난한 광산 노동자들, 연고가 없는 외지인들이 살고 있다. 이는 주로 배급에 의존하던 1990년대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무산군과 같이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도 주거지분화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무산군은 구역간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 작은 구간 내에서도 주택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읍의 중심부에 사는 주민들은 호곡이나 주초와 같은 빈민촌에는 거의 가지 않는다고 한다. 무엇보다 환경이 읍의 상층부들이 사는 곳과 비교해 도로, 인프라 등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격차가 대중의 수준에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꿔 말하면 사유재산의 축적이 주민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종전과는 달리 그 만큼 북한에서 시장이 발달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때는 노동의 대가가 배급 이외에 국가로 전부 무상으로 몰수되었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시장을 통해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으며 이것이 개인의 소득으로 이어지면서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장을 통해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소득이 권력기관, 부패의 고리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더욱이 무산은 북중 접경지대로서 다른 지역과 같이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부패의 고리와 철저히 연결되어 있다. 북한체제유지의 요인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계획경제를 침식시키고 시장부문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북한주민의 소득구조, 소비구조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서 빈부격차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 경제구조는 계획과 시장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부문, 계획경제부문, 부패경제부문, 지하경제부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도 속에서 계획경제가 침식되고 시장부문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주택 시장이 형성,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개인투자의 개념이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부패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에서의 시장부문은 더욱 확대되리라고 전망한다.

북한경제 연구협의회

북한 권력엘리트 연구와 북한 권력엘리트의 특징

이교덕

북한 권력엘리트 연구와 북한 권력엘리트의 특징

KDI 북한경제팀은 2012년 5월 30일 KDI 4-3세미나실에서 통일연구원의 이교덕 선임연구위원을 모시고, “북한 권력엘리트 연구와 북한 권력엘리트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권력엘리트와 정치엘리트의 개념, 권력엘리트 접근 방법론을 검토하고, 북한의 권력엘리트와 그 구조를 파악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북한 권력엘리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는 발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한다.

일 시

2012년 5월 30일(수) 10:00~12:00

장 소

KDI 4-3세미나실

발 표

이교덕, 북한 권력엘리트 연구와 북한 권력엘리트의 특징

북한 권력엘리트 연구와 북한 권력엘리트의 특징

이교덕 (통일연구원)

kd227@kinu.or.kr

권력엘리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한 권력엘리트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엘리트에 대한 정의와 접근방법론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북한의 권력엘리트의 구조와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엘리트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정책결정, 조직지도, 문화창조에 참여하는 소수자를 일컫는 것으로 권력·부·지식 등 사회적 가치를 소유한 우월적 집단을 말한다.

특히 권력엘리트(power elite)의 경우는 통상 권력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현실 사회에서 타인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권력은 다양한 영역에서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모든 영역에서 권력엘리트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중 정치엘리트는 정치영역에서 성립하는 엘리트를 일컫는 것으로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치를 정의할 때 정치엘리트의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엘리트가 보통 고위직 정치활동 성원을 뜻하더라도 그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는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며 정치엘리트가 가진 직위 등에 따라 권력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영향력의 크기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엘리트에 대한 접근방법론(power elite approach)은 개척자인 모스카(Gaetano Mosca), 미헬스(Robert Michels), 파레토(Vilfredo Pareto) 이래로 어느 사회나 많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전제 아래, 그들이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사회 내 권력구조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엘리트론 밀즈(C.W. Mills)의 정의에 따라 주요 조직의 고위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엘리트접근방법론은 지위법(positional approach)에 기반하고 있고 실제(actual) 권력보다는 공식적(formal) 권력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령, 학력, 출신지역, 사회경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엘리트구조를 파악한다.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엘리트들의 공통점이나 특징에 관한

것을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최고권력자와 엘리트의 관계를 주로 분석하는 연구가 많다. 예를 들어 어떤 특성의 엘리트가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출신인지, 김일성·김정일과 어떤 점에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엘리트들의 특징이 고도의 중첩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는 연구들이다.

한편 엘리트의 속성이나 최고권력자와 엘리트의 관계가 아닌, 엘리트 상호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엘리트와 엘리트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거에 개인과 개인의 속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권력행사의 본질과 권력의 크기가 관계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 때문에 상호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엘리트접근방법론은 개인의 속성과 리더십, 다른 엘리트의 특질들도 한 개인의 엘리트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개인 및 조직의 네트워크가 통상 정치권력이 행사되고 연계성을 갖게 되는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데 주목한다. 만약 북한 엘리트집단의 특성이 폐쇄성과 응집력이라면 그런 특성을 유지하는 데는 상호작용이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하나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이 있는데, 이는 엘리트들의 신분, 직위, 연고와 같은 속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간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상호간의 영향력을 측정하여 행위자의 권력값을 계량화하는 것이다. 이 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을 연구할 경우 데이터 수집에 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정의와 방법론에 기초하여 북한 권력엘리트의 특징과 구조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엘리트의 정의에서 논한 것처럼 북한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권력엘리트가 존재하지만 북한은 당이 국가와 사회를, 정치가 모든 다른 영역을 지배하는 체제이므로 정치엘리트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력엘리트가 선정되는 기준은 최고지도자와의 친밀성과 직위의 중요성으로, 최고지도자와의 대면한 빈도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등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중요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에서 상층부 권력엘리트구조는 당과 국가기관의 요직을 겸직하여 집중화된 양상을 보이는데, 북한의 경우도 군(軍) 고위간부까지 포괄하는 고도의 집중화 엘리트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엘리트 구조를 속성과 상호작용에 따라 검토해 보겠다. 북한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속성은 친인척관계(혈연), 빨치산 활동경력(혁명유가족), 학력, 직업경력, 연령대(세대), 출신지역 등이다. 북한 권력엘리트에서 김일성 가계의 친인척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대이다. 빨치산 출신 권력엘리트들은 당과 국방위원회에 포진하고 있으나 고령화로

인해 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학력측면에서는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대학 출신, 해외유학 경험 등이 다수이나 최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출신이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이 혈연, 빨치산 활동경력, 학력, 직업경력 네트워크 등의 속성 중 몇 가지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해볼 수 있다.

상호작용(interaction, communication)에 따른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는 질문지 또는 개별면접을 통해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빈도와 친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나, 북한 엘리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정은의 현지도도 수행'을 김정은과 권력엘리트 간의 관계뿐 아니라 수행하는 권력엘리트 간 상호작용의 지표로 가정하여 이를 통해 구축되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지도도 수행 여부는 직책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행 횟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측근이라고 할 수 없으며 현지도도를 수행하지 않고서도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인물도 다수이다. 그러나 최고지도자의 신임을 받는 인물의 수행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과 현지도도 수행을 통해 최고지도자를 자주 대면하다보면 측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현지도도 수행 빈도를 권력엘리트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김정은 체제의 네트워크에 새로 등장하거나 사라진 인물이 누구인지와 그 이유를 분석해볼 수 있고, 김정은이 속해있는 네트워크와 속해있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중심성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김정은 공백 시 권력의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북한 권력엘리트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엘리트들이 당·군·정을 겸직하면서 당·군·정의 일체화를 이루는 점이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엘리트의 뚜렷한 특징이다. 둘째로 일정한 직위의 재임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대개 조직과 집단, 그리고 관계가 지속될수록 그 네트워크는 강해지고 행위자의 장악력과 영향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성도 주의해서 살펴봐야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한 직위에 대한 재임 지속성이 아닌 특정 소수의 재임기간에 대한 지속성이 상당히 길다는 것이다. 당·군·정 전 영역에서 고위직책을 가진 6인의 고위직 평균 재임기간은 당 경력이 최소 32년 이상, 군 경력이 최소 25년 이상, 정 경력이 최소 24년 이상이라는 연구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당·군·정 고위직 재임 및 경력을 기준으로, 당 고위직 경력을 가진 권력엘리트 16인의 총 재임기간은 523년으로 평균 1인당 최소 33년 이상이었다. 네 번째 특징은 인사적체가 심하여 엘리트 상층 내부에서 새로운 충원의 가능성이 희박한 '장기지속적인 권력 집중성을 가진 네트워크 구조'라는 점이다. 단순히 김일성과 김정일 1인의 절대권력만이 장기지속되는 독재체제가 아닌 구조 전체가 유지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 권력엘리트에 대한 연구는 속성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북한 권력엘리트 구조의 전체적인 그림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상하는 권력엘리트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은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접근성의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실제 작동하는 엘리트간의 네트워크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 자료

UN 결의안 1874호에 따른 2012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

김은영, 임혜정

UN 결의안 1874호에 따른 2012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

본 자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1718호, 1874호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2009년에 설립된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2년 6월 14일 발표한 보고서(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2009))이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 일본의 7개국 전문가로 구성되며, 2010년 이후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 상황 파악 및 관련 정보수집, 분석, 이행 권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본 보고서는 ▲ 요약 ▲ 개관 ▲ 배경 ▲ 방법론 ▲ 전문가 패널 ▲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 제재 이행 분석 ▲ 품목·기관·개인 지정, ▲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자료에서는 제재 이행 분석 부분을 중심으로 번역,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원문은 <http://www.ncnk.org/resources/publications/Panel-of-Experts-May-2012-Report-UNSCR-1874.pdf>에서 볼 수 있다.

정리: 김은영 전문연구원(key@kdi.re.kr)

임혜정 인턴연구원(hji26@kdi.re.kr)

1. 보고서 요약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과 1874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13일 국제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강력한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위성발사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으로 이에 대응하였다.

회원국들은 위원회에 핵을 포함하여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이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고, 지정된 단체나 개인의 자산에 대한 동결도 보고하지 않았다. 단지 일련의 불법 무기판매와 군수품, 사치품과 관련된 위반에 대해서만 보고했다. 패널은 새로 보고되는 사건과 이전에 보고되었던 사건 그리고 가능성 있는 위반사태에 대해서 조사했다. 이런 사례들은 북한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보리 결의 조치를 위반하고 그러한 활동을 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다. 북한은 회원국들의 경계를 기술적으로 피해간다는 것도 보고서에 담았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에 왕래하는 선박 중 금지된 물품을 선적한 선박을 중도에 저지한 사례들을 조사했다.

제재 이행은 지속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다. 이는 회원국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으며, 북한은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회원국의 절반도 안되는 국가들만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한대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결의가 북한의 불법활동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거래에 드는 비용과 장애가 확대되도록 하고는 있다.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전문가들은 이 결의 조치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일련의 권고사항들을 작성하였다.

2. 개관

검토기간 중 패널은 불이행 사건들을 수없이 많이 조사하였다. 패널은 회원국 활동을 통해 실례를 검토하면서 회원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등 안보리에 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2012년 4월 13일 로켓 발사, 이를 후 군 열병식을 거행하여 지속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결론짓고 있는 바와 같이, 분석가들은 북한이 향후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결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패널은 이 검토기간 중 금지된 핵 프로그램을 위해 불법적인 조달 시도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3. 제재 이행 분석

패널은 국가이행보고서 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한다. 패널은 정치적 의지, 법적 기반, 여타 다른 기관들에서 취해진 조치 및 책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가 정보를 수집한다. 패널은 불이행 사건 관련 보고와 결의 위반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압류한 컨테이너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물품과 서류들은 회원국들이 결의안 이행에 어려움을 주는 북한의 선적 및 은닉기법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이러한 기법과 과제들은 패널이 조사하는 다양한 실제 위반 사례와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을 검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A. 결의안의 조치 이행 노력에 대한 과제

패널과 접촉한 거의 모든 회원국, 심지어 국가이행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도 않은 국가들조차도 결의안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이것을 이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제재이행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많다. 회원국의 절반도 안 되는 국가들만이 결의안 요구대로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했고, 사치품 목록에 대해서는 더욱 적다. 이유는 다양하다. 특히 북한과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멀리 떨어진 회원국들은 결의안의 이행을 최우선시하지 않는다. 사실 일부 회원국들은 결의안에서 무엇이 자신들에게 요구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많은 회원국들은 제재 이행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목록이 복잡하다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각 국가의 법률 체계로 금지물품목록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과제로는 고위관리에서 하위 그리고 집행관리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기관들에게 경계심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금지 목록에 있는 특정 상품의 이용과 관련 제품을 찾기 위한 기술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집행관리에 대해 기술적 지원과 전문적 훈련을 시키고, 민간부문에 정부의 의도를 주시시키며, 기업 내부에 이행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 등이 있다.

또 다른 과제는 검색, 압류 및 처분 문제이다. 패널은 회원국들이 검색을 수행한 경우를

알고 있지만, 아직 보고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회원국들은 내부 법적 절차와 타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보고를 지연시켜야만 했다. 2011년 5월 이후 일부 보고들은 검색이 시행되고 수개월 이후에야 제출되고 있다. 패널은 법적 및 기타 제약 조건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을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패널과 위원회에게 제공된 정보가 심각하게 지연되기도 한다.

또한 패널은 얼마나 많은 회원국들이 북한행, 북한발 불법화물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지 알지 못한다. 안보리는 금지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화물을 검색하도록 회원국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많은 회원국들은 검색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회원국과 패널의 비공식 접촉도 검색 실시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검색 후 압류는 회원국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하주들은 이러한 압류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 둘째, 회원국들에게는 압류 물품 처분도 문제이다. 압류된 사치품의 처분, 무기류 처분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비용과 불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위험하기도 하다. 때때로 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규모가 큰 항구에서 검색을 허락하면, 화물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검색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한 정치적 혼란의 두려움, 물품을 압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른 국가로부터의 압력 등을 포함하여 저해요인은 다양하다.

게다가 회원국들이 만약 그들이 금지한 대북한 수출품 목록을 법 집행 당국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치품 제재 이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집행 기관에서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관련 선적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회원국들은 아주 간단한 조치를 통해서 제재의 이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 패널은 국가 세관 직원이나 심지어 제재를 알고 있는 관리들에게조차도 보편적으로 제재에 대한 기본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재 이행에 대한 정확한 절차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모든 곳의 세관 직원들이 북한발, 북한행 화물에 추가적인 경계가 필요하고, 일단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불충분한 서류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안다면, 적어도 일부의 위법행위들을 막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융 관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경계심을 갖고, 북한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의심을 표명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제재 이행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토 기간 중 여러 회원국들은 검색을 실시할 때 불편이 초래되기도 했지만, 결의안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했다.

B. 회원국의 보고서

① 국가이행보고서

두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에게 관련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2년 3월 현재, 유엔 회원국의 48%에 해당하는 93개 회원국들만이 이 결의안을 이행했다.

패널은 보고의 지연과 낮은 보고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보고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높이어야 하는 것이다. 일부 회원국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② 검색, 압류, 처분에 관한 보고

회원국들은 결의 1874(2009)의 제15조에 의거, 검색을 실시하거나 압류 및 화물 처분시 관련 내용을 위원회에 신속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011년 5월 이후, 회원 3개국은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2개국은 북한발 화물의 검색과 후속 압류에 관련된 것으로, 무기와 관련 군수품의 범주 안에 있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2011년 6월에 제출한 세 번째 보고서는 결의안 1874(2009) 제12조에 따라 공해에서 기국의 동의하에 선박을 검색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 미국은 2011년 5월 북한발 MV 라이트호가 결의안 1718(2006)과 1874(2009)에 금지된 품목을 수송 중이라고 믿는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5월 26일 기국인 벨리즈의 위임을 받아 미국 해군전함이 MV 라이트를 검색하겠다는 것을 선장에게 고지했다. 선장은 북한 선박이라고 응답하고 승선 및 검색을 거절했다. 따라서 미국은 그 지역의 회원국들 중 한 곳에 그 선박을 정박시키고 검문해야 한다고 그 지역의 일부 회원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5월 29일 MV 라이트호는 진로를 변경하고 북한으로 회항했다.

③ 불이행 사례에 대한 기타 보고들

결의 1874(2009), 1928(2010) 그리고 1985(2011)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회원국, UN 산하 기관, 여타 이해 당사자들에게 특히 1718(2006)과 1874(2009)에서 부과된 조치의 이행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대해 위원회와 패널에게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2011년 5월 이후, 여러 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결의 1874(2009)의 제11조부터 제14조에 정의된 대로 검색, 압류 및 처분과 관련이 없는 불이행 사례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고 있다. 일본, 영국, 독일이 7개 정도의 보고를 제공하였다. 대부분의 이 보고는 금지된 품목이 성공적으로 북한에 전달되었거나 북한에 의해 전달되었다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의미있는 보고들은 회원국들이 물품의 불법적인 이동이 달성되었는지, 시도되었는지, 거부되었는지 등과 같은 정보를 위원회나 패널에게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C. 수출, 수입과 관련된 조치

검토기간 중, 회원국은 위원회에 불이행과 관련된 새로운 사례들을 기술하였다. 새로운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거부해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 국가이행보고서는 많은 회원국들이 불법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보고서는 패널에게 충분한 주의 의무, “고객파악” 과 같은 기법과 당국과 민간부문과의 협력도모 등을 적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① 핵,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이전

패널은 탄도미사일 관련 품목의 이전 등 잠재적인 불이행 사건에 관해 2011 최종보고서에 서 보고된 정보를 확인하였다. 그 화물은 2007년 10월에 압류되었다. 패널은 화물을 검색하였고, 이것이 전기 열확산식 스위치, 서로 다른 재료와 금속이 합금된 소량의 톨뿐만 아니라 한국 식품과 여타 품목들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패널들은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제거된 견고한 이중 추진체 130 블록의 사진도 보았다. 다른 국가에서도 50개의 이중 추진체 블록(지름 6cm, 높이 13cm)이 가스발전기에서 스커드 미사일의 터보펌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다른 품목의 경우 잠재적인 탄도 미사일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중용도품목이라고 확인되었다. 이 선적은 출항지가 북한으로, 다롄항(중국), 켈랑항(말레이시아) 및 다른 항구들을 경유해서 시리아의 라타키아로 향하는 중이었다.

운송장에 따르면, 화주는 북한 업체인 조선일반무역회사(Korea General Trading Corporation)이고, 화물인수자는 시리아의 과학연구센터의 Handasieh General Organization Engineering Industries였다. 그러나 한 회원국은 실제 화주는 2009년 7월 16일 위원회가 지명한 조선단군무역회사(Korea Tangun Trading Company)라고 진술하였다. 검색 중 패널은 포장에 “단군

(Tangun)” 이라고 써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언론 기사 및 학술 논문에서는 북한과 다른 국가들 간, 특히 이란(이슬람 공화국)과 시리아 간에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협력에 대해 보고했다. 패널은 이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으나, 패널들의 관찰 결과 북한과 이들 나라 사이에는 오랜 협조 관계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2010년 10월 10일 북한은 노동 미사일의 새 탄두를 공개했다. 이는 이란 사하브-3 삼중원뿔형 탄두와 디자인에서 유사한 점이 많았다. 패널은 은하로켓도 이란의 우주 발사체와 디자인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은하로켓 1단은 2010년 초 드러난 이란의 시모르그와 유사하다. 은하3호가 공개된 동영상은 노동미사일 엔진 4기와 사하브 모터 3대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은하로켓 3단의 구조는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너비나 모양이 2009년 2월 작은 위성을 탑재하고 지구 궤도에 안착한 사피르의 상단과 유사하다.

패널은 미얀마 대통령이 최근 미얀마가 북한과 핵이나 무기 관련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과거 입장을 잇달아 발표한 점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반면 패널은 북한과 다른 금지된 협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고위급 관리의 선언도 주시하고 있다. 국회의장, 투라 슈웨 만은 “2008년 북한 방문 시, 두 군대 간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핵 협력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방공 시스템, 무기 공장, 항공기와 함선을 조사했다. 그들의 군대는 아주 강해서 필요한 경우 그들과 협력하지는 데에 동의했다.” 고 밝혔다. 대표단은 탄도 미사일 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패널은 양해각서 하에서의 활동이 결의 1718의 8(C)(2006)를 위반한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회원국은 2011년 5월에는 MV 라이트호가 미얀마로 향하고 있었다고 패널에게 말했다. 기국에 의해 위임받은 검색을 선장이 거부한 것은 해당 선박이 결의안 1718(2006)과 1874(2009)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여되었다는 의혹이 고조되도록 하였다.

2007년, 이스라엘은 북한의 도움을 받아 건설되었을 수도 있는 시리아의 다일 아주르에 있는 한 건물을 폭파했다. 시리아는 2008년 5월 이후 파괴된 빌딩이 북한과 관련된 핵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011년 5월 24일 보고서에서 IAEA는 “파괴된 건물이 핵 원자로일 가능성이 있고, 시리아에 의해 인정되었어야 했다” 고 결론지었다. 그 보고서에 근거하여, IAEA이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 시리아의 불이행 보고를 2011년 7월 14일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2011년 6월 9일 결정했다.

패널은 2011년 최종보고서의 81문단에 보고되지 않은 잠재적인 불이행 사례에 관한 추가 정보를 획득하였다. 패널은 북한이 이 지역의 한 국가에서 두 개의 컴퓨터 수치 제어 선반과

원밀링 선반을 가져온 것을 확인하였다. 그 나라의 법 집행기관은 북한 소유 무역회사가 이 거래에서 중개자로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사는 벌금을 내게 되었고, 소유주는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패널은 이 지역에서 같은 국가의 수출통제당국을 통해 2011년 말 현지회사에서 5축 컴퓨터 수치제어머시닝센터를 미사일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막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당국은 이 거래에 대한 회사의 수출 면허를 박탈하였다.

패널은 아직 2011년 최종보고서의 82문단의 이중용도사용품목 사례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② 무기와 관련 물품의 이전

2009년 11월 한 회원국이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의 범주에 속하는 품목을 적재한 컨테이너 네 개를 발견하여 압류했다고 2011년 9월 19일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군사용 화학 방호복 13,000벌과 특정 화학물질을 검출해내는데 사용되는 가스 인디케이터 앰플 23,600개와 기타 물품들이 적재되어 있었다. 2012년 1월, 현장 조사 기간에 패널은 이 품목 중 일부는 명확하게 북한에서 제조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확인했다. 또한 패널은 그 방호복이 2009년 10월 MSC Rachele호에서 몰수된 것들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패널은 두 번째 화물에서 보호용 부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물이 둘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압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 두 화물은 서로 연관이 있을 것으로 결론내렸다. MSC Rachele호 사례와 같이 남포에서 출항한 선박은 중국의 다롄항에서 선적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와 다른 항구를 거쳐, 시리아의 라타키아로 항해하는 중이었다. 수하물 인수자는 시리아의 환경 연구 센터로 지정되어 있었다. 시리아는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MSC Rachele호의 압류된 화물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2012년 3월에는 압류된 방호복과 앰플이 시리아의 농업과 실험용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패널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환경연구센터는 과학 연구 및 리서치 센터의 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키는 교육기관인 고등응용과학기술연구소(Higher Institute of Applied Sciences and Technology)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4월, 프랑스는 2010년 11월에 북한발로 목적지가 시리아인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품의 불법 화물을 검색, 압류했다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그 화물은 컨테이너선인 MV San Francisco Bridge에서 압류되었다. 이 화물은 구리 봉과 판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화물 검색으로 이것이 로켓을 만들기 위한 알루미늄 합금 튜브, 포병 탄약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구리 봉과 황동디스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는

무기와 탄약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의 선적은 결의안 1718(2006)과 1874(2009)의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전의 최종보고서 부록 B에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2011년 5월 북한발 선박이 로켓 15톤과 미화 1천5백만 달러 상당의 폭발물을 싣고 항해하다 국제해상합대에 의해 인도양에서 저지당했다. 동 선박은 이후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동아프리카 항구에 정박했다고 보고되었다. 패널은 회원국에게 무기와 관련된 물품들을 적재한 컨테이너들이 그 당시에 동아프리카 항구에서 검선되었고,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패널은 불이행 가능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패널은 2010년 1월 말, 우크라이나가 북한 소유의 기함인 청천강호에서 권총, 탄약, 마약 등의 불법 물품을 압류했다는 정보를 언론으로부터 획득했다. 패널의 문의에 대해 우크라이나 당국은 탄약,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밀수품 등을 압류했다고 응답했다. 우크라이나 관계 당국은 일부 밝혀진 소량의 물품들은 북한 당국과 연루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패널은 2009년 12월에 태국이 압류한 무기 및 관련 물품 등 불법 선적에 대한 정보 요청과 관련해 회원국들로부터 공식적인 의견 5건을 2011년 5월 이후 확보하였다. 패널은 다른 회원 3개국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새롭거나 기대되는 정보를 토대로 정보에 대한 추가요청을 할 예정이다.

2009년 10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웨스트헤버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물품을 저지하였다. 이후 콩고는 군 수송 차량과 다른 군사 장비를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하기로 한 북한과의 계약의 일부였다고 나중에 시인하였다. 2011년 12월 브라자빌 방문 중, 패널은 군사 장비 중 일부를 조사했고, 북한 기관과 개인의 역할을 자세하게 기록한 유용한 문서를 획득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의해 압류되기 이전에 북한이 이미 배송한 적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패널은 이러한 선적과 북한과의 계약과 관련된 기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대하고 있다. 패널은 위원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압류 품목을 검색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

패널은 북한에서 부룬디로 2009년 10월 세이셸에 등록된 회사를 이용해 중기관총을 불법 이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유념하고 있다. 패널은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크렌포드 무역이라는 세이셸에 등록된 회사와 부룬디 간에 체결된 계약의 세부사항과 운반된 무기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패널은 중기관총이 이전되었다는 것도 확신한다. 그러나 부룬디도, 세이셸도 이 조가에 관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기관총이 북한에 이전되었는지 여부와 시기를 확인하지 못했다.

2011년 11월 21일 영국은 무역규제 대상인 북한 상품의 공급 의혹과 관련하여 형사 고발에 착수했다고 위원회에 알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공식적인 정보는 아직 이용가능하지 않지만, 패널은 이 물품들이 무기와 관련이 있다는 정통한 미디어의 논평에 주목하고 있다.

한 회원국은 북한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의혹때문에 2009년 퇴역 전투기 32대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패널에게 보고했다. 그 항공기는 이후에 폐기되었다.

③ 사치품 금지

[일본이 보고한 사치품 사례]

검토 기간 중, 패널은 일본이 2011년 5월 이후 위원회에 보고했던 사례들과 이전에 주의를 끌었던 사례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011년 7월 6일과 2012년 1월 26일, 5월 2일에 일본은 사치품 금지에 대한 위반사례 총 5건을 보고했다. 패널은 두 건의 다른 잠재적인 위반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아직 보고하지는 않았다. 사치품의 불법적인 수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a) 2008년 9월, 12월 대한민국을 통한 메르세데스 벤츠 중고자동차 3 대(7백23만엔 상당) 최종 사용자는 상명 2(북한의 회사). 법적 조치 완료
- (b) 2008년 12월, 담배 1만 롤과 청주 12 병 (18만3천엔 상당)
- (c) 2009년 3월 26일, 항공편으로 노트북 타입의 컴퓨터(10만5천8백엔 상당)
- (d) 2009년 5월 20일, 6월 10일, 일본에서 중고 자동차 5 대(6,111,000엔 상당,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3 대, 렉서스 1 대, GMC 사파리 1 대)
- (e) 2008년 11월과 2009년 2월, 3월, 6월, 노트북 타입의 중고컴퓨터 698대를 선적한 화물 5건. 이 중고 노트북 타입의 컴퓨터는 총 7,196 대의 대량 불법 선적의 일부. 선적 중 하나는 최종 사용자가 평양 정보센터로 알려졌음.
- (f) 2010년 2월, 4월, 화장품 선적 2 건 (약 200,000엔 상당)
- (g) 2010년 7월, 12월, 중고 노트북 타입 컴퓨터 10 대 (100,000엔 상당).

패널은 북한의 불법 선적 및 다래항을 경유한 일본발 북한행 사치품 선적 시도를 조사해왔는데, 일본은 추가적으로 5건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북한행 불법 선적은 다음과 같다.

- (a) 2008년 10월, 중고 피아노 34 대 (2,681,515엔 상당), 2008년 12월 중고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4대, 이는 조선능라도무역총회사의 요청
- (b) 2008년 10월, 화장품 (약 160,000엔 상당). 최종 사용자는 북한의 신흥무역 회사,
- (c) 2009년 2월, 중고 피아노 3 대(600,000엔 상당) (부산에서 최초 선적하여 다롄을 거침)
- (d) 2009년 5월, 21종 화장품 673 품목(507,359엔 상당). 최종 사용자는 북한의 신흥무역 회사,
- (e) 2008년 11월, 북한행 중고피아노 22 대 (2백10만1천2백7엔 상당).

일본은 북한이 유엔 결의 하에서도 일본의 대북사치품 수출 금지를 위반했다는 전과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이 경우에 북한은 목적지, 화물인수자, 과거 북한과 거래관계가 있었던 일본의 소기업, 일본의 수출통제규정을 위반해 온 기업과 개인, 조총련, 중개인 등을 반복적으로 위장해서 신고하고 거래와 선적간의 관계를 속이기 위해 돈세탁 기법을 사용한다. 자주 등장하는 북한 기업은 다음과 같다.

- 조선능라도무역총회사 (평양, 일명 조선능라도 중성회사 Korea Rungrado Jonsong Trading Company)
- 신흥무역(평양, 일명 신흥무역 Shinhung Trading)
- 상명2(평양), 모회사는 고려상명종합무역회사인 것으로 일본 당국이 파악

대금은 대부분 선불이나 직접 지불 혹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중개인을 거쳐 화주에게 지불된다. 회원국들마다 사치품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세관 관리들은 패널에게 상기 언급된 대부분의 상품들은 중국에서 사치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유럽 사치품 사례]

패널은 북한이 스위스 명품 시계를 구입했다는 언론보도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패널은 방문조사에서 북한이 구매한 스위스 시계가 거의 대부분 사치품 범주에 있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2006년 이후 사치품에 해당되는 몇 개의 수출이 눈에 띄지만 그 수는 적었다. 패널은 북한에서 판매하는 명품시계들을 다른 곳에서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시계가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시계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제조업체가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패널은 최근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이전에 보고되었으며, 2011의 최종 보고서에서 논의되었던 다음 사례에 대한 근거자료를 획득하였다.

- (a) 1000명 수용 규모의 영화관용 전자 장비의 항공 수송 차단
- (B) 공연장의 음향, 영상 복제용 고급 장치의 항공 수송 차단
- (C) 항만 당국의 술(코냑, 위스키) 화물 몰수
- (D) 고품질 미국산 탭댄스 슈즈(1세트 당 € 150) 항공 선적 시도 차단

(a), (b) 모두 구매자는 북한의 청송유한회사(Chong Song Company Ltd)였으나,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았다. 패널은 이 회사에 대한 목록을 찾을 수 없었다. 2012년 5월 안전보장이사회는 청송연합기업소를 지정했었는데, 이 회사는 별칭으로 종종 Chong Song(청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진다. (c)와 (d) 두 경우 모두 북한은 구매자로 이탈리아의 작은 회사를 이용했다. 이탈리아 회사는 이전에 북한과 상업적 관계를 갖고 있었다.

패널은 북한과 오스트리아 회사 슈워츠 모터부트서비스 헨텔 게엠베하 간 요트 두 척 구입 계약서 사본을 획득했다. 또한 관련된 재무 기록 및 컴플랜트 국제운송회사(다렌)에서 오스트리아 회사에 지불 책임 및 권리이전증 사본도 획득했다. 경찰 심문 중 조세프 슈워츠가 삼자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회원국은 밝혔다. 컴플랜트가 먼저 운송을 하고 그 후에 북한에게 판매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오스트리아 법정에서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요트를 수출하려 했던 시도와 대북 사치품 자동차 수출 사례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벌금형과 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스트리아 법원 판결 기록은 슈워츠가 북한을 위해 S-클래스 메르세데스 자동차 8대를 구입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중국 기업인 컴플랜트 인터내셔널은 이들 차량 중 일부에 대해 최종 사용자를 위조했다. 슈워츠는 북한 주민으로 오스트리아에 장기간 거주했던 권영록의 주문으로 자동차를 구입했다. 다수의 언론 보도와 책들이 권영록은 북한의 39호실과 연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평양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리무진]

20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식 군행진에서 특별주문된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2대가 사용되었다. 그 차량은 특히 S-클래스 S600 시리즈 중에서 최근 모델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여졌다. 한 기사는 4월 16일 평양체육관 앞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E350 시리즈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았다고 패널에게 보고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차량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한 컴퓨터 및 컴퓨터 서버로의 이전]

패널은 WIPO가 북한에 컴퓨터 및 관련 컴퓨터 서버를 미확인된 날짜에 북한에 보냈다는 언론보도에 주목하고 있다. 거래와 관련이 있는 유출된 WIPO 문서에서, WIPO 제네바 본부는 공급자에게 미화 52,638달러 지급을 승인했지만, 결제는 बैं크 오브 아메리카에 의해 차단되었다고 시사했다. 또한 WIPO는 거래가 적정했다는 내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패널은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사치품에 대한 제재의 이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위원회가 보고서에 사치품 목록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였지만, 제재 하에 금지되어야 하는 사치품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가 그들의 지역에서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은 이러한 목록간의 차이점을 이용하여 어떤 국가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또 어떤 국가에서 금지를 피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패널은 회원국들간에 이러한 목록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한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파악한다. 평양 방문객들은 고급 자동차, 고가의 주류, 화장품 등 정품 혹은 위조 수입 명품제품들이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이용가능하다고 패널에게 말하였다. 일부 회원국은 사치품 압류에 관해 보고한 반면, 대부분의 회원국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이를 수입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사치품에 대한 금지령이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나 평양의 신흥중산층에게 이러한 품목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2011년 12월 5일, 위원회의 이행지원공고(IAN)는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조정의 부재에 대해 패널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재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한다.

부문별 주요 기사

6월 11일~7월 10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

부문별 주요 기사

6월 11일~7월 10일

대내경제 131

- 북 전략로켓사령관에 김락겸 임명 | 131
 - UNHCR '전세계 탈북 난민 1052명' | 131
 - 한반도 긴장 상태 지속에 북 채권가도 고전 | 132
 - 북 해외근로자 월급 본인 몫 10~20% 불과 | 132
 - 북한, 대중국 근로자 파견 급증 | 133
 - 북한경제 3년 만에 '플러스' 성장 전환 | 133
-

농업 및 식량 135

- 북 "서해안 4월 말부터 심한 가뭄 지속" | 135
- FAO, 북한 가뭄 이모작작물과 옥수수 타격 | 135
- 덴마크 단체, 해주 아동 2만명 식량지원 | 136
- WFP, '북한, 지난 달 식량 배급 줄어' | 136

대외경제 137

- 중, 6월 들어 북한산 수산물 수입 금지 | 137
- 러, 북에 110억달러 옛 소련 채무 90%탕감 | 137
- 북·중 관문 압록강철교 내달 초 보수공사 | 138
- 중, 투먼-칭진항 물류운송 전용열차 운행 | 138
- 북 불법화물, 다롄에서 최초 환적·경유 | 139
- 5월 북·중 교역 7억 달러 '사상 최대' | 139
- 북 진출 중국기업들, 이익보호 행보 | 140

남북경협 141

- 파주시, 6~9월 개성공단 말라리아 특별 방역 | 141
- 정부, 대북지원 잇따라 승인 | 141
- 1~5월 남북교역, 전년대비 17% 증가 | 142
- 개성공단 상수도관 보수공사에 30억 지원 | 142
- 김정은 체제 이후 국내입국 탈북자 급감 | 142
- 개성공단 벌점제 시행 후 첫 출입 제한 | 143
- 남북 인적왕래 2007년 이후 최저치 기록할 듯 | 143

대내경제

북 전략로켓사령관에 김락겸 임명

북한이 지난 4월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전략로켓군 사령관(옛 미사일지도국장)에 김락겸 중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짐.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지도국을 전략로켓사령부로 개칭하면서 최상려 대신 김락겸을 전략로켓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전함. 북한 매체에 ‘전략로켓사령부’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3월으로 「조선중앙통신」은 3월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전날 전략로켓 사령부를 시찰했다고 보도한바 있음. 중앙통신은 4월 11일 당대표자회 관련 보도를 내보내면서 “최룡해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 현철해, 리명수, 김락겸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설했다”고 밝힘. 김 1위원장은 4월 15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100주년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연설을 하면서 “영웅한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전략로켓군 장병들과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이라는 말로 시작한 바 있음.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6.14

UNHCR ‘전세계 탈북 난민 1052명’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가 세계 난민현황 통계를 발표했으며, 지난 해 말 현재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에 난민 지위를 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체류 중인 탈북자는 1052명이라고 밝힘. 또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는 490명이라고 덧붙임.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자들을 모두 합하면 1542명으로 전년보다 347명이 증가함. 지난 2010년 말에는 탈북 난민이 917명, 망명 대기 중인 탈북자는 278명으로 총 1195명이었음. 하지만 현지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 받으면 난민 분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됨. UNHCR은 국가별로 영국에 603명, 독일에 193명, 캐나다에 64명, 네덜란드 36명, 벨기에 31명, 호주 29명, 미국에 25명, 다른 나라들에 71명의 탈북 난민이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에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한편 UNHCR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탈북자에게 명명 지위를 가장 많이 부여한 나라는 캐나다로 신규 신청자 385명을 포함해 탈북자 564명이 망명을 신청해 117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2위는 벨기에로 탈북자 105명이 망명을 신청해 45명이 승인을 받음. **Voice of America**, 6.19 외 **동아일보**, **조선일보**, 6.20

한반도 긴장 상태 지속에 북 채권가도 고전

북한 채권 거래를 대행하는 영국의 이그조틱스 사는 북한이 지난 3월 말 로켓 발사 후 채권가격이 30% 넘게 급격히 떨어진 후 계속 고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지난 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직후 북한 채권의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액면가 최고 1달러당 18센트로 30% 넘게 급등했었지만, 약 4개월 후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자 12센트대로 급격히 내려감. 이와 관련해 커버하우스 분석가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거나 개방 조짐이 보이면, 북한 채권가는 더욱 올라갈 것이며 수익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함. 이그조틱스사는 지난 1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후계체제로의 전환을 북한 내 개혁 개방 등 변화에 대한 가능성으로 보고 북한 채권가도 고공행진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채권을 '보류' 에서 '매입' 으로 격상시킨 바 있음. **Radio Free Asia**, 6.19 외 **조선일보**, 6.21

북 해외근로자 월급 본인 몫 10~20% 불과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의 임금 착취 실태를 알리는 특집을 「아사히신문」이 보도함. 신문은 “북한이 체코 합작 봉제공장에 파견한 근로자는 월 150달러를 받지만 자신이 손에 쥐는 돈은 30달러 안팎에 불과하다” 하다고 전함. 이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150달러 정도로 이 가운데 75~80달러는 무조건 북한에 송금돼 국고로 들어가며, 월 숙박비가 40달러 정도이고, 공수된 노동신문 구독료가 1달러, 평양에 있는 김일성 동상에 ‘국의 노동자 일동’ 명목으로 바칠 꽃바구니 비용으로 2달러를 내야해, 여성 근로자가 손에 쥐는 돈은 월 30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고 전함. 또한 러시아에 파견된 별목 근로자의 월수입은 500달러 정도이지만 70% 이상을 북한 당국이 챙기고 숙박료와 식비로 10~20%가 공제돼

실제 수입은 10~20%인 50~1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덧붙임. 이처럼 근로 조건이 열악하지만, 북한에는 외국 근무 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급료가 높은데다 건설 공사장 등에서 ‘하르바이트’ 를 할 경우 3년에 1천 달러 정도를 버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임. 중국의 경우 올 1~3월에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정도 늘어난 1만9천명의 북한 근로자가 노동 비자로 입국했으며 러시아와 중동에서 각 2만명 안팎, 몽골에서 3천명 안팎의 북한 근로자가 벌목장이나 각종 건설 공사장,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음.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6.24

북한, 대중국 근로자 파견 급증

중국과 북한이 4만명의 북한 근로자를 산업연수 방식으로 중국에 취업시키는 협정을 맺었다고 「로스엔젤레스타임스」이 보도함. 이 신문은 한반도 전문가들과 사업가들을 인용해 중국과 북한이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재봉사와 기술공, 기계공, 건설공, 광부들이 이 협정에 따라 중국에 취업하고 있다고 전함. 중국의 ‘국가여유국’ 은 4월 공개한 ‘1분기 외국인 입국현황’ 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을 방문한 북한 사람은 4만2백명이라고 밝힘.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28,600명)보다 40퍼센트 급증한 것이며, 이 가운데 취업비자를 받은 북한인이 전체의 절반가량인 1만9천 300명인 것으로 나타남. 북-중 간 새 협정에 따라 한 근로자가 연간 미화 2천달러의 현금을 북한 정부에 상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챙기는 월급은 50달러 이하이지만, 북한에서의 평균 월급은 1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대우마저 북한인들에게는 특권이라고 신문은 덧붙임. **Voice of America**, 7.2

북한경제 3년 만에 ‘플러스’ 성장 전환

한국은행은 ‘2011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자료를 통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0.8% 늘었다고 밝힘.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3.1%에서 2009년 -0.9%, 2010년 -0.5%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임. 한은 관계자는 “농림어업과 건설업의 성장에 힘입어 북한의 전체 국내총생산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고 설명함.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이 양호한 기상여건, 비료 투입량 증대 등으로 농작물 생산이 확대돼 전년보다 5.3% 늘어남. 광업 성장률은 비금속광물이 1.7% 감소했으나 석탄생산이 2.0% 늘어나 전체로는 0.9% 증가함. 그러나 제조업은 -3.0%이며, 이 가운데 정공업은 -0.1%, 중화학공업은 -4.2%임. 전기·가스·수도업은 수력발전이 늘긴 했으나 화력발전이 큰 폭으로 줄어 4.7% 감소함. 건설업은 평양시 현대화사업 등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3.9% 늘어났으나 건설업 가운데 비주거용 건물은 24.0% 감소함.

한은 관계자는 “북한의 강성대국 목표가 2012년 끝나는 만큼 올해도 북한 건설업은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고 덧붙임. 서비스업은 운수·통신·금융보험부동산·정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0.3% 늘어남. 지난 해 북한의 산업구조는 광공업 36.5%, 서비스업 29.4%, 농림어업 23.1%, 건설업 7.9%, 전기·가스·수도업 3.1% 등임. 2011년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2조 4천억원이며,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33만원으로 남한(2천492만원)의 19분의 1 수준임. 지난 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63억2천만달러로 전년보다 21억4천만달러 늘어남. 수출은 27억9천만달러로 84.2%, 수입은 35억3천만달러로 32.6% 각각 늘어났으며, 남북교역 규모는 10.4% 줄어든 17억1천만달러이고, 이 중 개성공단을 통한 반출입이 99.1%임. **Voice of America**, **연합뉴스**, ⁷⁸ **외 동아일보**, ⁷⁹

농업 및 식량

북 “서해안 4월 말부터 심한 가뭄 지속”

북한의 서해안지방에서 4월 말부터 시작된 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통신은 “6월에 들어와 강원도의 고산별과 통천별을 제외한 동해안 지방에서는 20mm 이상의 비가 내려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서해안지역인 평양시와 남포시, 평안남도 일부와 황해남도,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10mm 이하의 매우 적은 비가 내렸다” 며 “특히 평양별과 온천별, 은률별, 재령별, 연백별 등 서해안 중부 별방지대에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고 밝힘. 통신에 따르면 4월 말부터 현재까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은 지역은 평양시 강남군, 황해남도 안악군, 황해북도 송림시와 중화군, 남포시 용강군과 강서구역, 황해남도 은천군 등임.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일부 지역에서 이 기간에 내린 빗물의 양은 1~5mm로 기상관측 이래, 평양은 10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임. 「노동신문」도 이날 황해남도 배천군과 황해북도 서흥군에서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 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고 전하며 “서흥군 대평협동농장 등에서는 예전부터 이용하던 우물과 줄짙(양수설비), 굴포(작은 웅덩이)를 잘 보수정비해 이용하는 데 힘을 넣고 있다” 고 소개함. **동아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6.12

FAO, 북한 가뭄 이모작작물과 옥수수 타격

북한의 심각한 봄가뭄이 강냉이 수확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전망함. FAO가 발표한 ‘북한 가뭄 보고서’ 에 따르면 대부분의 강냉이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이식됐으며, 따라서 길어지고 있는 가뭄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됨. 북한의 강냉이 생산량은 지난 해 2백만톤을 기록하면서 전체 곡물 생산량의 52%를 차지했음. FAO는 또 6~7월 사이 거둬들이는 감자와 밀, 보리 등 조기 재배 작물도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또 현재 모내기 중인 논작물에 대한 심각한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강수량 부족으로 이식 작업과 물대기 과정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임. 또한 FAO는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그리고 평양의 농경지대 일대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다고 밝힘. 그러면서 북한 내각의 국가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이들 5개 지역에서 논작물 재배지를 제외한 90%의 경작지가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고 전함. 또 곡류와 감자, 콩 등 식료 농산물을 재배하는 북한 전역 경작지로 범위를 넓히면 17%가 가뭄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고 덧붙임. **Radio Free Asia, Voice of America**, 6.19 외 **동아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6.20

덴마크 단체, 해주 아동 2만명 식량지원

덴마크의 구호단체인 미션 이스트(Mission East)가 이달 초부터 8월까지 황해남도 해주의 탁아소와 유치원, 고아원 등의 시설에 있는 어린이에게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미션 이스트의 대변인은 영양강화식품이 쌀과 옥수수 중심의 식사습관으로 비타민이나 미네랄, 단백질 등의 필수 영양분이 부족한 북한 어린이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또한 지원 식량이 가장 절실한 계층에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분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국장이 황해남도 해주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고 전함. **Voice of America**, 6.26 외 **Radio Free Asia**, 6.27

WFP, ‘북한, 지난달 식량 배급 줄어’

북한 당국이 6월에 주민 한 명 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세계식량계획(WFP)가 밝힘. 당국의 배급량은 1월부터 3월까지 395g을 유지하다가 4월에 400g으로 다소 늘어난 뒤, 5월에 395g, 6월에 380g으로 줄어듦. 북한 당국이 6월에 분배한 380g은 세계식량계획 WFP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3%에 불과한 수준임. 한편, WFP의 지원량은 전달보다 늘어나서 6월에 북한 주민 1백82만명에게 5월의 3천400톤보다 들어난 7천600톤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함. 7월에는 2만358톤의 강냉이, 밀가루, 콩이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WFP가 전함. **Radio Free Asia, Voice of America**, 7.3 외 **동아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7.4

대외경제

중, 6월 들어 북한산 수산물 수입 금지

중국 당국이 6월 들어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현지업자에 내렸다고 일본 수산 관계자들을 인용해 「도쿄신문」이 보도함. 랴오닝성 북한 접경도시 단둥의 관련업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북한산 수산물을 6월 1일부터 당분간 들여오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북한 동북부 항구 라선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다른 중국인 업자도 동일한 통지를 받았다고 “그런 통달(지시)은 처음”이라고 밝힘. 다만, 북한산 수산물의 대중 수출은 일부나마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북한 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6.10

러, 북에 110억달러 옛 소련 채무 90%탕감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110억달러(약 12조원)의 채무액 가운데 90% 정도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를 양국 합작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 재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토르차크 재무차관은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러-북 정부간 협정서가 이달이나 다음달 중 내각 심의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힘. 스토르차크 차관은 “(북한 채무 조정 협정 서명에 관한 정부령에 대해)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 며 “이달 중이나 늦어도 다음달 정부령을 내각에 제출해 북한과의 합의 결과에 대해 승인을 받을 것” 이라고 말함. 스토르차크 차관은 지난 달 평양을 방문해 북한 재무당국과 북한이 옛 소련에 진 110억달러의 채무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부처 간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이를 뒷바침할 정부 간 협정서도 가조인한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 재무차관은 협상 결과 북한이 옛 소련에 진 채무액을 1달러=60 코페이카로 환산해 110억 달러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90%를 탕감한 뒤, 약 11억달러의 나머지 채무액은 ‘지원을 통한 채무 변제’ 모델에 따라 교육, 의료, 에너지 분야에 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리아노보스티통신」은 탕감 후 남는 북한의 대러 채무 잔금이 교육, 의료, 에너지 분야 등에 걸친 러-북 간 합작 프로젝트 이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보도함. **Voice of America**, **연합뉴스**, **조선일보**, 6.23

북·중 관문 압록강철교 내달 초 보수공사

북한과 중국을 잇는 주요 관문인 중-조우의교(압록강철교)가 내달 초부터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간다고 중국 단둥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소식통들은 주로 자동차가 운행하는 다리의 노면이 망가져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압록강 철교는 1개 차로의 자동차 길과 1개 선의 철길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 왕복 교차운행이 불가능한 구조로 보수공사가 시작되면 단둥-신의주간의 화물차 운송은 물론 자동차를 이용해 다리를 통과하던 북한 관광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압록강철교 공사기간 동안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교통편은 평양과 베이징 간을 일주일에 네 번 연결하는 국제열차가 유일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보임. 현재 북-중간을 잇는 최대의 관문인 압록강철교는 일제 강점기인 1943년에 완공된 총 길이 964m의 철교로 건설한 지 70년이 다 되어 노후상태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길이 중 중국 측이 569m를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북한 측이 관리를 맡고 있음. **Radio Free Asia**, 6.25

중, 투먼-청진항 물류운송 전용열차 운행

중국이 북중 국경지역의 관문인 지린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투먼에서 북한의 남양을 경유해 청진항으로 이어지는 중국 화물 운송을 위한 전용 열차 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연변 주정부는 구체적인 열차 개통 시점은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 동북 지역의 석탄 등 화물을 청진항을 통해 상하이 등 중국 남동부 지역은 물론 인근 국가로 운송하는 방식이 최적의 무역통로라며 이같이 말함. 연변주정부는 이미 북중 양국이 합영공사를 설립해 계약서에 정식 서명까지 마쳤다고 밝혀 양국이 나진항에 이어 청진항 개방까지 이미 합의했음을 시사함. 또한 투먼-청진 간 중국 화물 전용열차 운영을 위해 이미 지난 해부터 중국 측 주도로 화물 수송용 차량과 기관차 등 열차 제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임. 중국의 연변하이화무역공사가 주도하는 이번 철도 운송기관 구매에만 총 3억위안, 약 4천700만달러가 투입될 예정임. 연변 당국은 이 열차를 중국 화물운송 전용 노선에 투입하고 통관과 수속 시간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밝힘. **Radio Free Asia**, 6.26 **외 연합뉴스**, 6.27

북 불법화물, 다롄에서 최초 환적·경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어긴 북한의 불법 화물이 중국 다롄항에서 최초로 환적 또는 경유해 국제 운송망을 통해 이동한다는 내용이 안보리의 문서로 공식 채택됨.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다롄항이 명시된 것은 처음으로 이전에는 중국측의 반대로 인접국의 '항구' 정도로만 표현되어왔으나, 중국측의 양보는 안보리 결의가 계속 무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 감싸기로 일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다롄항을 거치는 북한 화물은 다수의 중개인에 의해 문서가 세탁되기 때문에 북한측 발송자의 식별이 힘들다고 보고서는 설명함. 또한, 패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4.15 군사 퍼레이드에서 선보인 새로운 미사일(KN-08)에 주목하고 미사일 탑재차량(TEL)에 대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힘. 특히 지난 4월 공개한 'KN-08' 이 모형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임.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총규모와 고농축우라늄(HEU) 보유 여부 등은 명확하지 않지만 영변 이외의 지역에 관련 시설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스 원심분리기 제작에 필요한 마레이징강(maraging steel) 등 특수물질의 수입과 생산 여부 등을 주시키로 했다고 전함.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미얀마 등과 계속 군사협력을 진행 중이며, 특히 2008 체결된 북한-미얀마 간의 군사협력 양해각서가 구체화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함. **Voice of America**,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6.30

5월 북-중 교역 7억 달러 '사상 최대'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7억달러 (6억9천3백만달러)로 북-중 교역액이 한 달에 7억달러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5월 중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은 2억6천만달러로, 지난 해(2억2천만달러)보다 20% 늘어났으며, 북한의 수입액은 4억3천만달러로 지난 해(3억1천5백만달러) 보다 37% 증가함.

이는 지난 해 사상 최고 기록(56억3천9백만달러)을 세웠던 북중교역이 올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중교역액은 26억달러 (25억9천7백만 달러)로 전년도(19억6천4백만달러)보다 32%나 늘어남. 항목별로 보면, 북한의 수출액은 10억5천8백만달러로 지난 해 보다 29% 늘어남. 이 가운데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 수출액이 6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철광석이 8천8백만달러로 뒤를 이음. 수입액 또한 전년도 보다 34% 늘어난 15억4천만달러에 달함. 이처럼 수출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북한의 무역적자가 4억8천2백만달러로 지난 해 보다 1억5천만달러가 늘어남. **Voice of America**, ⁷⁵ **외 연합뉴스**, ⁷⁶

북 진출 중국기업들, 이익보호 행보

북한에 진출한 중국기업의 연합체로 지난 4월 27일 결성된 ‘조선중국상회’가 첫 보고회를 열고 북한 내 중국 기업의 이익 대변을 위한 행보를 시작함. 무역업은 물론 광산업, 서비스업, 그리고 자동차, 자전거 생산 등에 종사하는 중국 기업 50여 개 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조선중국상회 측은 회원사의 권익 옹호와 북중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목표로 결성됨. 이 단체는 평양의 북한주재중국대사관에서 1차 보고회를 가졌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힘. 30여 회원사가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중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 영사보호 문제 등을 설명했고 북중 교역과 관련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전함. 조선중국상회 측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북중 간 교역과 경제협력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함. 조선중국상회 측은 이번 행사를 ‘1차 보고회’라고 밝혀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보고회가 최소 분기별로 한 차례씩 계속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였음. **Radio Free Asia**, ⁷⁶ **외 연합뉴스**, **중앙일보**, ⁷⁷

남북경협

파주시, 6~9월 개성공단 말라리아 특별 방역

경기도 파주시는 6~9월 매월 1회 모두 4차례에 걸쳐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말라리아 예방 특별 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은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첫 방역은 14~15일에 이루어지며, 파주 방역반 7명과 차량 2대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말라리아 뿐만 아니라 여름철 전염병도 방역 대상이며, 모기 성충과 유충 서식지인 물웅덩이, 하수구, 도로 변 숲, 쓰레기장 등은 빠짐없이 소독될 예정이다. 주간에는 연무·분무 소독과 모기유충 방제가 중점적으로 실시되며, 야간에도 오후 10시까지 연막소독이 진행된다. 파주시는 이 기간에 모기 기피제, 살충제(에어로졸), 감염병 예방 손 씻기 비누, 감염병 예방 요령 소책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6.11

정부, 대북지원 잇따라 승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물자 반출을 잇따라 승인함. 통일부는 순복음선교회 측이 평양에 짓고 있는 심장병원에 쓰일 자재 반출을 신청해옴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이 13만7천달러 상당으로, 병원이 골조 공사만 한 채 방치돼 있어 장마철 붕괴 위험 등을 고려해 반출을 승인했다고 설명함. 통일부는 앞서 지난 달 23일에도 나진선봉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6만8천달러 상당의 영양빵 지원을 승인했으며, 북한이 지난 5일 국제백신기구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통일부가 승인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7건으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 만큼, 앞으로도 지원의 시급성과 분배 투명성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북한에 보낸 지원 물자는 모두 2백22만달러 상당으로, 영양식을 비롯한 식량 15만달러를 비롯해 겨울용 내의와 의약품, 의료 장비 등임. **Voice of America**, 6.13

1~5월 남북교역, 전년대비 17% 증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남북교역액이 7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관세청이 밝힘.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같은 기간(\$660,750,000)보다 17% 증가한 것임. 5월까지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낸 반출액이 3억4천만달러로 전년도(\$301,613,000)보다 14% 늘어남. 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반입액도 전년도(\$359,137,000)보다 19% 증가한 4억3천만달러임. 4월까지 남북교역을 품목별로 보면, 한국에서는 주로 의류 생산용 원부자재와 생산설비를 보냈고, 북한은 여성의류 등 가공 생산된 완제품을 한국으로 보내옴. 반출의 경우 의류 원부자재 등 섬유제품이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 제품과 기계류가 뒤를 이었으며, 반입에서도 의류 완제품 등 섬유제품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전자 장비와 기계류 순임. **Voice of America**, 6.15

개성공단 상수도관 보수공사에 30억 지원

통일부는 개성공단 용수공급 시설 보수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힘.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도수터널(상수도관) 보수공사에 30억7천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함. 교추협은 또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지원비를 기존 521억4천400만원에서 525억9천8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함. **연합뉴스**, 6.28

김정은 체제 이후 국내입국 탈북자 급감

올해 들어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남.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총 610명으로 이는 1천62명을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2.6% 줄어든 것임. 올해 1월 160명에 이어 2월 90명, 3월 116명, 4월 107명, 5월 137명이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옴. 지난 해 월 입국자 수 기준으로 200명을 넘긴 달이 9개월에 달했지만, 올해는 5월까지 한 번도 넘지 못함.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2천706명을 기록했던 지난 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중앙일보**, 7.1

개성공단 벌점제 시행 후 첫 출입 제한

개성공단에서 사건·사고로 벌점을 받은 남측 관계자가 처음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통일부가 전함. 건설 협력업체 인부인 A씨는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술잔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개성공단관리위원회로부터 벌점 3점을 부과 받아 2주간의 공단 출입제한을 받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지난 1월 말부터 각종 사건·사고로 문제를 일으킨 남측 관계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점에 따라 출입제한을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사건·사고 처리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지침 시행 후 A씨가 벌점 부과는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첫 사례임. **동아일보, 중앙일보**, 7.5

남북 인적왕래 2007년 이후 최저치 기록할 듯

올해 1~5월 남북한을 오간 인원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통일부가 집계한 남북교류현황(1~5월)에 따르면 올해 북한을 방문하거나 남한을 찾은 남북한 사람은 총 4만7천432명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5만925명에 비해 3천493명(6.9%) 줄어든 것임.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을 위해 남북을 오간 인원이 작년 5만849명에서 올해 4만7천404명으로 3천445명 줄었고, 대북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 등을 위해 왕래한 인원도 63명에서 28명으로 35명 줄었음. 작년 같은 기간 남한을 찾은 북한 주민은 13명이었던 반면 올해는 아직 한 명도 없음.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남북 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 올해 남북 간 인적왕래 규모는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남북한 인적왕래는 2000년 7천986명에서 2003년 1만6천303명, 2005년 8만8천341명 등으로 증가한 이후 2007년 15만9천214명, 2008년 18만6천775명을 기록함. 그러나 금강산 관광 중단과 천안함 사태 등으로 왕래인원은 2009년 12만862명, 2010년 13만251명, 2011년 11만6천47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음. **연합뉴스, 중앙일보**, 7.10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는 무단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